

젠더리뷰

Gender Review

2020
여름

기획특집

- 21대 총선과 여성 | 이현출
-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 이가현·오현주
-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 과정의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 차인순

이슈브리프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 김영미
-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 최윤경
- 코로나19 확산과 여성고용 | 전기택



CONTENTS

2020 여름호 Vol. 57호

002 편집자의 글

기획특집 : 국회와 여성

004 21대 총선과 여성 | 이현출

017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페미니스트, 총선 현장에서의 경험 이가현

026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2010년과 2020년 서울 마포
에서의 선거 경험 전격 비교. 10년 사이 강산은 정말 변했을까? | 오현주

032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 차인순

이슈브리프

046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 김영미

063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 최윤경

070 코로나19 확산과 여성고용 | 전기택

국제리뷰

080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개발협력 접근 현황 | 박윤정·장은하

087 가나 건강보험과 중장년 여성 소외: 가입자확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김양희

100 2020년 젠더현안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KOICA-개발협력관점에서 | 김선영

만나고 싶었습니다

108 여성환경연대(ecofem) 장이정수 상임대표

국내·외 여성통신

120 해외

144 국내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160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161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16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163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젠더리뷰 여름호 '기획특집'에서는 '국회와 여성'을 다루어, 21대 총선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21대 총선의 의의, 총선에서의 여성후보자, 당선자를 분석하고, 국회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에서는 페미니스트 여성후보자 2인의 선거치름을 진지하고, 흥미롭게 그리고 고민을 담아 생각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의 성과와 21대 입법과제'의 주제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 성평등한 연금·보상·복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20대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21대 국회 젠더 입법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프' 부문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분석하고,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돌봄문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아동돌봄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와 여성노동'은 코로나19 확산이 공식화한 2월과 4월 사이의 여성고용 동향을 분석하여 여성노동 정책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국제리뷰' 부문에서는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개발협력 접근 방안'을 성주류화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논하였고, '가나 건강보험과 중장년 여성 소외: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는 가족구성원간 자원분배에서 여성은 평등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를 가나 국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020년 젠더현안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는 국제개발협력 국가사업의 젠더현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상임대표를 만나 그 동안의 활동을 경청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수 있는 차별,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외 통신에서는 해외특파원이 전해오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여성관련 동향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부처 중심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여름호는 21대 총선과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관심사 및 현안을 풀어보고자 하는 필진의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흥미있는 정보를 얻고 고민을 풀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특집

국회와 여성

- 21대 총선과 여성

이현출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이가현 |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오현주 |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무수석보좌관

-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의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차인순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1대 총선과 여성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의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개원되었다. 지난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과정과 결과가 선거사에 오래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수준의 총선을 실시하였다. 당초 코로나 사태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견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2%의 높은 기록을 세웠다. 선거결과도 집권 여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어 민주화 이후 여당이 가장 높은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6년 민주당이 제1당이 된 이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이어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으로써 진보세력이 정규 선거에서 하나의 사이클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명실상부한 정치권력 교체를 이룬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실시해온 분립형 혼합

제인 병립제 선거를 탈피하여 연동형 혼합제인 준연동형 비례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제도변화는 늘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제도는 '예견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드러낸 선거였다. 비례성의 확대와 대표성의 확대 대신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되었다. 위성정당의 출범으로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이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였다. 30여 개의 비례정당들이 변화된 제도에 기대를 걸고 대표성을 열망하며 창당을 하여 선거전에 나섰으나 포말처럼 사라졌다.

투표행태의 측면에서도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관통하는 선거였다. 투표 선택의 요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검찰 개혁 등에 지지를 보인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나 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지지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다(강원택 2020). 정파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이슈에 영향을 받는 현

상이 두드러졌다. 선거전의 쟁점이 코로나19에 함몰되어 사라진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투표행태를 설명하기가 무색하게 코로나19가 블랙홀이 된 선거였다.

여성의 대표성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의원 당선자가 57명(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9%를 차지하였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를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구 당선자 비율은 253명 중 29명으로 11.5%에 불과하지만 기존에 비례대표제도에 의존하여 일정한 대표성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선거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단일쟁점 정당으로서 여성의당의 선거참여와 짧은 기간에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me-too)운동과 강남역 사건, 혜화역 시위, 엔(n)번방 사건 등으로 불거진 여성 관련 이슈가 선거전을 달군 것은 여성관련 이슈가 우리 시대의 주요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본 고에서는 21대 총선을 계기로 여성 대표성의 변화와 지속, 제도변화와 여성의 대표성, 여성 이슈의 쟁점화 현황 등을 검토하며 선거와 여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21대 총선과 여성

왜 여성인가? 여성 국회의원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전반적인 정당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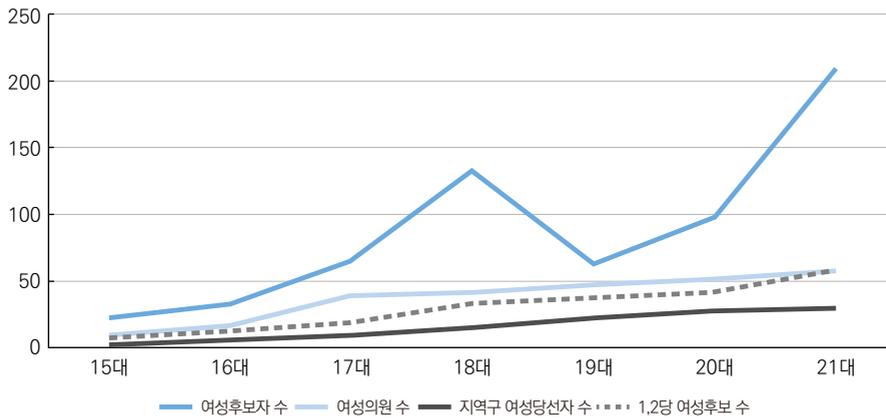
다고 평가되어 왔다. 또한 여성들이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고, 그들의 영향력이 정책과 입법의 우선순위 등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여성의원의 수가 단순히 증가하는 기술적 대표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실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여성이 의회로 진출할 경우(기술적 대표성), 입법기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성에 기초한 차이가 반영될 것(실질적 대표성)임을 지적해 왔다(Thomas 1994; 이현출 2020).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이슈가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국회였기에 여성의원의 당선에 관심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정책별 관심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남성의원은 산업자원, 국토개발, 농림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인 반면, 여성의원은 여성가족, 보건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진영·곽진영 2017). 이는 여성의원의 사회적·문화적 경험이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되어 남성의원에 비해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원홍 2006). 보건복지정책은 여성가족정책과 함께 여성의원의 정책적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전진영·곽진영 2017; 이현출 2020). 따라서 21대 국회는 공중보건,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젠더 등 여성의원의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에서 여성의원의 역할이 요청된 국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후보자들의 국회진출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표 1〉 총선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변화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여성후보자 수	21	33	65	132	63	98	209
제1, 제2당 여성후보 수	8	11	19	33	37	41	58
지역구 여성당선자 수	2	5	10	14	19	26	29
여성의원 수	9	16	39	41	47	51	57

단위: 명



〈그림 1〉 총선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추이

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여성대표성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17% 대비 2%p 상승한 19%로 미세한 성장을 하였다. 여성의원 당선자가 1996년 15대 총선에서 9명(3%)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21대 총선에서의 성과는 57명(19%)으로 지난 20년 간 16%p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도입된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도입과 함께 39석(13%)을 확보한 이후 매우 정체된 성장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여 년간의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흐름을 살펴보면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가 권고조항으로 도입되면서 16명(5.9%)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와 교호순번제의 권고조항이 적용되면서 39명(13%)으로 증가한 이후 증가세는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1, 제2당의 여성후보자 공천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데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전체의 석의 15.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원 충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하여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로서는 대표성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된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수는 209명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았다. 전체 후보자 1,101명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98명(10.5%)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77명, 민주당이 28명을 공천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의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각각 0.7%, 0.5%에 불과하였다. 실제 당선가능성이 높은 제1, 2당의 여성후보는 41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효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늘리지 않는 한 지역구 여성당선자 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기초의회에서의 후보자 증가가 당선자 증가를 전인한다는 선행연구(이현출 2020)를 보았지만, 경쟁력있는 정당에서 여성후보자를 많이 공천하지 않는 한 여성 대표성 제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1대 총선에 입후보한 남성·여성 후보자 전체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자(〈표 2〉 참조). 연령별 분포에서는 남성 후보자들은 50, 60대 후보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후보자는 20, 30, 40대에서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비율은 여성 쪽이 높고, 대졸, 대학원졸은 남성쪽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 < .01$). 지역별로는 남성은 의석비율에 따른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하여 여성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출마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석분포를 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으로 47.8%를 차지하고,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가 있는 영남지역의 지역구 의석은 65석으로 25.7%를 차지한다. 결국 여성후보들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출마하는 편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다고 본다면 여성들은 도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적 분포를 보면 남성후보자들은 정당인, 사업가, 교수, 변호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후보자들의 직업은 정당인, 교수, 사업가, 시민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비중과 순위에서 남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주목할 것은 남녀 후보자 공히 정당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정치인의 충원을 위한 경로로서 정당 활동가 또는 당직자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자.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통하여 우리는 21대 국회 남녀의원들의 사회적 배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먼저 당선자의 나이를 보면, 남성은 50대 63%, 60대 24.7%로 5-60대가 8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50대 42%, 40대 24%, 60대 21%의 순으로 나타나 더욱 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력에서는 남녀 당선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5$). 〈표 2〉에서 후보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선자의 경우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원 이상은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당선자를 비교하면 지역

〈표 2〉 21대 총선 남녀 후보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구분		남성(%)	여성(%)	Pearson's χ^2	p
나이	20대	1.1	4.3	60.139	.000
	30대	4.3	11.8		
	40대	16.9	22.5		
	50대	47.0	41.2		
	60대+	31.7	20.3		
학력	고졸이하	5.8	9.9	19.561	.001
	전문대졸	3.0	3.7		
	대졸	38.5	34.8		
	대학원 석사이상	48.8	43.6		
	미기재	3.8	8.0		
지역	수도권	37.6	34.2	175.843	.000
	충청강원	12.7	4.8		
	호남제주	12.8	3.5		
	영남	23.5	13.4		
	비례	13.2	44.1		
직업	정당인	57.2	45.7	53.667	.000
	교수, 연구원, 강사	8.4	12.8		
	의사, 약사	2.2	4.8		
	사업가, 자영업자	12.4	10.2		
	변호사, 변리사 등	6.8	4.3		
	시민단체, 복지관	4.0	9.6		
	주부, 무직, 기타	1.4	4.0		
	직장인	5.1	6.1		
	농, 어, 축산업인	1.5	0.5		
	예술인	0.9	1.9		
	학생	0.3	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구에서 1명이 더 많이 당선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23명(서울 12명, 경기 11명), 영남 5명, 호남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이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정당별로는 남성의 경우 96.7%가 제1, 2당에서 배출된 반면,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제의 영향으로 84.2%가 제1, 2당에서 배출되었으며, 정의당 5명, 국민의당

과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2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당선자 중 지역구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명), 미래통합당(8명), 정의당(1명)의 순이다. 그 외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민중당에서 많은 여성후보자를 지역구에 공천하였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정당에서 여성후보자를 얼마나 공천

〈표 3〉 남녀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교차분석

구분		남성당선자 (명, %)	여성당선자 (명, %)	Pearson's χ^2	p
나이	20대	1(0.4)	1(1.8)	21.799	.000
	30대	5(2.1)	6(10.5)		
	40대	24(9.9)	14(24.6)		
	50대	153(63.0)	24(42.1)		
	60대+	60(24.7)	12(21.1)		
학력	고졸이하	1(0.4)	-	.405	.817
	전문대졸	-	-		
	대졸	92(37.9)	20(35.1)		
	대학원 석사이상	150(61.7)	37(64.9)		
	미기재	-	-		
지역	수도권	98(40.3)	23(40.4)	69.133	.000
	충청강원	36(14.8)	-		
	호남제주	30(12.3)	1(1.8)		
	영남	60(24.7)	5(8.8)		
	비례	19(7.8)	28(49.1)		
직업	정당인	197(81.1)	32(56.1)	28.713	.000
	교수, 연구원, 강사	16(6.6)	7(12.3)		
	의사, 약사	2(0.8)	4(7.0)		
	사업가, 자영업자	5(2.1)	4(7.0)		
	변호사, 변리사 등	15(6.2)	5(8.8)		
	시민단체, 복지관	6(2.5)	3(5.3)		
	주부, 무직, 기타	1(0.4)	-		
	직장인	-	1(1.8)		
	농, 어, 축산업인	-	-		
	예술인	-	1(1.8)		
	무응답	1(0.4)	-		
정당	더불어민주당	150(61.7)	30(52.6)	26.959	.000
	미래통합당	85(35.0)	18(31.6)		
	정의당	1(0.4)	5(8.8)		
	국민의당	1(0.4)	2(3.5)		
	열린민주당	1(0.4)	2(3.5)		
	무소속	5(2.1)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 선거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당 계열과 통

합당 계열의 원내 1, 2당에서 공천한 후보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당선율을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분위기

〈표 4〉 제1, 2당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추이 (당선자/후보자)

구분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민주당	5/11	4/15	13/21	17/25	20/32
통합당	5/8	10/18	4/16	6/16	8/26
전체여성	10/65	14/132	19/63	26/98	29/209

가 미래통합당에 열세인 상황에서 후보의 증가가 당선을 견인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23명이 당선되어 수도권 주요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대표하는 지역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당선자 중 초선은 14명, 재선 이상 15명으로 재선 이상 당선자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선의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단순히 기술적 대표성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 대표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이들이 각 정당과 국회에서 당직과 국회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여성친화적 정당과 국회를 만드

〈표 5〉 지역구 여성 당선자 현황

지역	선거구명	당선자 성명	소속정당	선수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3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1
서울	중안구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3
서울	도봉구갑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3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1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3
서울	영등포구갑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4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1
서울	서초구갑	윤희숙	미래통합당	1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미래통합당	1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3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3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1
부산	해운대구	김미애	미래통합당	1
대구	북구갑	양금희	미래통합당	1
광주	서구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1
경기	수원시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2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은혜	미래통합당	1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2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4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1
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정의당	4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1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1
경기	시흥시갑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1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2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2
경북	포항시북구	김정재	미래통합당	2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미래통합당	2

〈표 6〉 남녀 후보자의 선거경쟁력 비교

	성별	N	평균 (지역구 득표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F
전체후보	남	892	25.06	24.23	.81	F=50.799 p=.000
	여	209	14.06	20.96	1.44	
주요정당후보	남	544	38.77	21.02	.90	F=.247 p=.220
	여	78	35.65	20.76	2.35	

* 주요정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구 후보자들의 득표율 분석을 통하여 여성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남녀 후보자 간의 득표율 평균을 비교하면 남성 후보자 25.06%로 여성 후보자 14.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쟁력없는 정당에서 다수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당시 지역구 의석을 갖고 후보자를 배출한 주요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득표 평균을 비교하면 남성 38.77%, 여성 35.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선행연구(이현출 2020)에서와 같이 주요정당 공천 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은 결코 여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살펴보자. 전체 비례대표 당선자 47명 중 여성은 28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0명씩, 정의당 4명,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2명씩 배출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3.6%), 30대 4명(14.3%), 40대 7명(25%), 50대 10명(35.7%), 60대 6명(2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정당인 7명(25%), 교수·연구원 등 6명(21.4%), 의·약사 및 사업가 각각 4명(14.3%), 변호사 2명(7.1%), 시민단체 3명(10.7%), 직장인 및 예술인 각각 1명(3.6%)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비례대표에서도 정당인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교수, 의·약사, 사업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 각 직능영역이 대표된 것을 볼 수 있다.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현황

정당명	추천순위	성명	정당명	추천순위	성명
미래한국당	1	윤주경	미래한국당	17	서정숙
미래한국당	3	한무경	미래한국당	19	허은아
미래한국당	5	조수진	더불어시민당	1	신현영
미래한국당	7	정경희	더불어시민당	3	권인숙
미래한국당	9	조명희	더불어시민당	5	용혜인
미래한국당	11	김예지	더불어시민당	7	윤미향
미래한국당	13	이영	더불어시민당	9	양원영
미래한국당	15	전주혜	더불어시민당	10	유정주

정당명	추천순위	성명	정당명	추천순위	성명
더불어시민당	11	최혜영	정의당	3	강은미
더불어시민당	13	이수진	정의당	5	이은주
더불어시민당	15	양정숙	국민의당	1	최연숙
더불어시민당	17	양경숙	국민의당	3	권은희
정의당	1	류효정	열린민주당	1	김진애
정의당	2	장혜영	열린민주당	3	강민정

III. 주요쟁점

1. 선거제도와 여성

선거제도의 정치적 영향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제 유형에 비해 비례제 유형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여성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선거제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을 고려하면서 선거제도별 여성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탈산업 국가의 경우 비례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산업국가들의 경우 선거제도와 여성의원의 비율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표 8〉 참조). 또한 탈산업국가들의 경우에도 독립형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단기이양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표 8〉 사회경제적 발전수준별 선거제도와 여성의 의회진출

선거제도	탈산업국가		산업국가		
	여성의원	국가수	여성의원	국가수	
다수제	다수제 평균	16.9	5	10.4	21
	1위 대표제	17.1	3	11.0	10
	블록 투표제	-	-	6.7	6
	대안 투표제	22.4	1	-	-
	2차 투표제	10.9	1	13.8	5
혼합제	단기 비이양식	-	-	-	-
	혼합제 평균	19.5	4	14.2	10
	독립형 혼합제	5.0	1	12.5	7
비례제	연동형 혼합제	24.3	3	18.4	3
	비례제 평균	29.5	12	12.6	24
	명부식 비례제	31.1	11	12.7	23
전체	단기 이양식	12.0	1	9.2	1
	전체	24.6	21	12.1	55

* 자료: 김영태(2004) 미간행 유인물. Pippa Norris, Shared Global Database 참조

대다수의 북구 유럽국가가 포함된 명부식의 비례제의 경우 여성의원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만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행 약 15.7% 수준에 있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비례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여성대표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비례의식 비율이 매우 낮은 현재 상황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와 이에 따른 위성정당의 허용은 양 거대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오늘날의 한국적 상황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피해자는 오히려 군소정당이 되는 비극적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제도는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구 30% 추천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후보자 30% 추천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센티브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제도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77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득표율은 공히 0.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여성대표성 향상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30% 권고조항을 개정하는 일이 제도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의석수 증설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OECD 주요국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306~379석 정도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강원택(2002)은 Taagepera & Shugart(1989) 모형(1-1)에 적용할 경우 362석, 모형 2에 적용할 경우 306석 정도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김형준과 김도종(2003)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효율성과 대표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368명에서 379명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 대국민 신뢰성만 제고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주요정당 여성후보자 수와 지역구 득표율

정당	지역구 후보자수	여성후보자수	지역구 득표율(%)	비례득표율(%)
더불어민주당	253	32	49.9	33.3
미래통합당	236	26	41.5	33.8
민생당	58	4	1.4	2.7
정의당	75	16	1.7	9.6
민중당	59	28	0.5	1.0
국가혁명배당금당	235	77	0.7	0.7
기독교유통합당	7	1	0.02	1.8
국민의당	0	0	0	6.7
열린민주당	0	0	0	5.4

2. 여성 이슈와 단일쟁점 정당의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이슈는 단일쟁점정당(single issue party)의 등장과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여성의당이 창당 38일 만에 약 21만 표를 획득하며 ‘여성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얻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미투’운동, 해화역 시위, 엔(n)번방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와 폭력이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점을 고려하면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평가다(이하나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다해 2020).

여성의당의 성공 여부는 여성의 세력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 탈물질적 가치의 등장과 함께 녹색당 등 단일쟁점정당의 출몰을 보아왔다.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며 의회에서 나름의 위상을 확보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기존 거대정당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아왔다.

고령화와 함께 유럽의 각국에서 등장한 ‘연금수령자 정당’(pensioners’ party)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기성 정당들이 포괄정당화(catch-all party) 함에 따라 신생 연금수령자 정당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성정당에서 회색 이익(grey interest)을 정강정책에 포섭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많은 고령자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기존 정당에 흡수통합 되거나 포말화 하는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나아가 고령 유권자 이익 추구정당 스스로 연령

이나 세대를 정치적 균열구조로 새롭게 수립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유럽에서 연령이나 은퇴자와 같은 사회적 특징은 결코 강하거나 두드러진 특성이 아니다. 즉,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고령 유권자들도 오랜 기간 동안 계급, 이념, 교육, 지역, 종교, 민족 또는 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속성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미 정치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확립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이현출·문예찬 2020). 따라서 세대와 연령이 새로운 균열축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여성이슈를 청년·여성으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의 성착취와 폭력 이슈에 대한 대책을 10대 공약에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4순위, 통합당은 7순위, 정의당은 8순위에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10>과 같다.

이처럼 주요정당들이 여성의당에서 주장하는 이슈를 포섭하여 주요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단일쟁점정당인 여성의당이 여성을 정치적 균열구조로 어떻게 세력화해 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된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도 기존의 정치적 균열구조인 세대, 지역, 이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일쟁점 이슈가 절박하여 이들을 선거전에 동원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IV.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그동안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도출되었다. 민생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향상

〈표 10〉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 공약(계층 분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p>[청년, 여성]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수도권3기 신도시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4만호 공급 -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 청년, 신혼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 스토킹 처벌특례법 제정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p>	<p>[안전/여성] 국민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 -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p> <p>[청년복지] 공정 희망! 청년 기 살리기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사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 과 '예술인 문화 거리' 조성 - 청년 창업 후계능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 청년·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p>	<p>[기재/국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1인, 청년, 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p> <p>[여성/인권/이주민/지역균형]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젠더폭력 3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1,0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해 이민국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투명인간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p>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참조

을 위하여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에 많은 공감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의 양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에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에서 30% 임계수준(critical mass)을 돌파함을 계기로 광역의회와 국회의로의 확산이 과제다 등장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여성정치인 후보자 균을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후보로 키워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더욱 심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도 여성들이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거운동 지원방안도 차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보조금 제도라는 인센티브로는 제도의 효과를 이룰 수 없음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15.7% 선에서 고정되어 있는

한 향후 여성대표성이 더욱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지역구 후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이익과 충돌되어 발의하고 심의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새로 도입된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면 지역구 30% 공천 의무화, 나아가 의원정수 확대 문제도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으로 여성인재 풀 육성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을 통하여 여성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많은 여성후보자의 충원 경로로 정당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 혹은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후보자 군을 발굴하여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정당의 활동가 또는 당직자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공직후보 공천을 위하여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3호.

강원택.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2020년 총선,”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전기학술회의 발표논문(2020년 5월 6일).

김원홍. 2016. “20대 총선과 여성의 대표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여름호.

김원홍·이현출·김은경. 2007. “여성위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6(2).

김형준·김도중. 2003.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문미경·김혜영·이현출·임미영. 2018. 「2022년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당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현출. 2020.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선거경쟁력 분석과 함의,” 「입법과 정책」, 제12권 1호.

이현출·문예찬. 2020. “고령자 이익추구 정당의 등장과 성패요인,” 「정치·정보연구」, 22(3).

전진영·곽진영. 2017.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제26권 2호.

Thomas, Sue. 1994. How Women Legislat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한겨레, 박다혜. 2020년 5월 13일자, “‘20만 득표’ 여성 정치세력화 씨 뿌렸지만…대중적 확장은 숙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4721.html#csidx084356498ca99fb9d9dbc42de0657c2>)

여성신문, 이하나. 2020년 4월 16일자, “20만 명이 선택한 ‘여성의당’…“여성정치 역사의 진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7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페미니스트, 총선 현장에서의 경험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1. 페미니스트 활동가에서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우리 집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가 가사 노동을 하는 집이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발병과 외환위기가 겹치며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니 당연하게도 맞벌이를 생각했던 어머니는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 오랜 직장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승진에 대한 욕망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이중 노동을 하며 키워낸 큰 딸이 여성 리더가 되길 바라셨다. 뭐든지 1등을 하면 좋고, 너희 시대에는 뭐든지 잘 해야 하니까 늘 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아이로 만들

기 위해 딸이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시도하게 해주셨다. 남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 되라는 격려와 칭찬을 어르신들로부터 받고 자랐던 나는 법 조인이나 정치인을 꿈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치 는 나에게 더 가까웠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회의를 해야 할 곳에서 치고 박고 몸싸움하는 아저씨들, 그것이 내가 접한 정치였다. 차떼기 뇌물 수수, 떡값이 어찌구 하는 뇌물과 비리의 온상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 흔히 정치 탓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호기로운 패기로 나는 정치 인을 꿈꿨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 운동을 접하고 나니 내가 알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이 세상이 모두

*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현) 페미니즘당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지배와 피지배로, 착취와 피착취 관계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회를 바꾸기에 부패한 정치는 멀고, 당장의 시위와 대자보는 가까웠다. 그렇게 다 죽었다는 학생 운동에 뛰어든 이후, 결국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와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법이 있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결국 한 명이라도 덜 고통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한 진보 정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진보정당 당원 2년차가 되었을까, 메르스라는 전염병을 타고 인터넷을 통해 페미니즘이 전파되었다. 청년 남성 '진보 논객'들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가 공론화되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말이 그 때 등장했다면 어땠을까? 당시에는 '진보' 정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피해자 지원이나 건강한 방식의 사건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서운 침묵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진보 정당을 떠나갔다. 어떤 '진보' 정당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가사를 쓴 가수를 정당의 총선 테마 가수로 지정했다.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었다고 사실상 해고된 성우를 지지하는 논평이 중앙당 직권으로 철회되었다. 그렇게 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의 집단적 각성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정치와 페미니즘이 강하게 부딪치며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를 만들어냈다. 나 또한 2016년의 페미니즘 물살을 타고 드디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정당이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꼭 후진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주의 선거본부를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고, 페미니즘 물살에 힘입어 오랫동안 활동이 뜸했던 여성위원회가 다시 살아나며 전국 강연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는 당직 선거에서 여성의 자리는 찾기 힘들었다.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여성명부가 아니라면, 여성당원들은 '진보적'이라는 당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럴 때면 항상 이미 자리를 차지한 남성 당원들은 '대표자 자리를 맡을 여성 당원이 없다'고 말했다. 왜 없지? 기회만 주어진다 하면 할 수 있는 여성 당원인 나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의 나는 대표자의 자리엔 항상 남성이, 그를 보조하는 위치엔 여성이 있는 여러 공간을 보며 웬만큼 특출나지 않고서야 대표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기회만 주어진다 하면, 용기를 불어넣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시절 내가 몸담았던 '진보' 정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성 정치인을, 여성 대표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나 또한 탈당했다. 이른바 '페미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페미당에서라면 젊은 여성들이 이리 저리 치이며 감정 노동을 하거나 성희롱을 견디지 않아도 될거라고 생각했다.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정치의 영역에 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페미당에서 하고 싶었다. 그렇게 차근차근 창당 준비를 하다보니 3년이 흘러 제21대 총선이 다가왔다.

선거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활짝 열리는 거의 유일한 시기이다. 그것도 '출마한 후보'들에게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다. 젊은 여성인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페미니즘 정치를 전국, 아니 적어도 그 지역구에는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다. 정치 그까이까! 하던 패기 넘치는 어린 시절도 생각났다. 못할 게 뭐 있을까? 당돌한 심정으로 한 번 해보자고 결심했다. 솔직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올해까지 당선되면 4선 의원이 되는 건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에도 모두 남성 후보들만 출마했으니, 지역 구민으로서 이번 총선에는 여성 후보가 좀 나왔으면 하기도 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나에게서는 출마로 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다.

2. 왜 지역구? 왜 동대문구?

내가 출마한 지역구인 동대문구는 특출나게 젊은 인구가 많이 산다거나, 성평등지수가 높다거나,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아니다. 흔히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출마하여 이득을 보려면 진보적인 가치에 우호적인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은, 선거 득표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은 모든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젊은 여성이고 조직과 돈이 없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 토박이로서 동대문구에서 성장해 왔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야 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공간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세 번째로, 오히려 서울의 서쪽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처럼 힙한 문화들이 선도적으로 생겨나는 공간 말고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동대문구에 출마했고, 나름대로 페미니즘 정치에 목말랐던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동대문구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선 선생님을 만났고,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과 만났고, 이문동 재건축 지역에서부터 활동해 온 이문동 공동체 ‘도꼬마리’를 만났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페미니스트 학생들을 만나서 일상에서 어떤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경희여고, 휘경여고, 혜성여고 졸업식에서 여자고등학생들을 만났다. 선거를 계기로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와 알게 되었고 각 대학교 학생대표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기회도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잘 소화해 냈는지, 정치인으로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선거 운동을 치렀는지를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나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청년 정치인과의 만남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에 출마했던 젊은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2020년에는 정치의 뜻을 접겠다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동대문구 지역 주민으로서, 진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출마한 진보정당의 젊은 정치인이 반가웠던 터라 그가 왜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선거 준비기간 중 이문동에서 지역공동체를 꾸리며 화단을 만들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그는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이 궁금해 그와 약속을 잡고 그가 운영하는 이문동의 작은 반지하 공간에 찾아갔다. 그는 요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이문동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일, 철거 예정인 집에서 나갈 수 없던 주민들을 위해 성당 신부님과 힘을 합쳐 공간을 마련했던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이제 막 정치의 영역에 뛰어들던 나에게 그는 참 대단해 보였다. 공간을 만든 것부터 시작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묵묵히 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왜 그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는가가 궁금했다.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랬다. 모든 문제는 힘으로 강제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근원은 권력으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뜻밖의 이야기에 나는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었

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나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여성이 가져본 적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은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직은 가져본 적 없는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일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권력을 원하고 또 그 권력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나에게 유효하다. 제도적 권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 수많은 권력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권력차에 주목한다. 힘없는 성별을 평등한 위치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제도적 권력이 없다면, 소수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권 운동가로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을 갖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권력을 지향하는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내가 가지려는 권력은 어떤 권력인지, 그 권력으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변질되고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4. 페미니스트 후보들과의 연대

이번 선거에서 정말 반가웠던 점은 페미니스트임을 전면에 걸거나 페미니즘 활동을 해왔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꽤 출마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조혜민 후보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으로

로 활동해왔고, 녹색당 비례대표 성지수 후보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 손솔 후보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유니브페미에서 활동해왔고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 또한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다양한 공간에서 여성주의 활동을 해왔다. 나 또한 강남역여성혐오살인사건 이후에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니스트네트워크 등에서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의석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던 와중에 페미니스트 청년 정치인들이 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라도 있을 것 같았다. 연락이 닿는 후보들과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다가 일단 모여보기로 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각자가 각자의 정당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느라 함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만남의 순간을 사진 기록으로 남겨서 SNS에 게시할 수는 있었다. 경쟁 중심의 정치판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의 새로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있었다.

5.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보 정당 당원들의 융성한 도움

무소속 후보는 동네주민 300명에서 500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용해 옆동네 동대문구를 지역구에서 출마했었던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주민 추천 후보’로 명명하기도 했다.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공천 후보자와 똑같이 기탁금을

내면서 주민 추천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은 불공평했다. 정치 신인이었기에 추천 서명을 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 그래도 동네 상가를 구석구석 돌며 자기소개를 하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민들에게 부탁드렸다. 그렇게 서명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선거운동원들도 동대문구를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렵사리 처음 뵙는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서 거절의 거절을 거듭하며 겨우 서명을 모았다.

주민 추천 서명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문동공동체 도꼬마리 활동가분과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 페미니즘 소모임, 민주당 동대문구위원회 당원들이었다. 민주당 손솔 후보는 내가 무소속 후보자가 치러야 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니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죠’라며 민주당 동대문구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민주당 출마자인 오준석 후보와 나를 연결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추천 서명지를 가지고 민주당 동대문구갑지역구 오준석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를 방문했다. 마침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포장하고 있느라 많은 당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서명지를 두고 간 며칠 동안 열 명의 당원분들께서 서명을 해주셨다. 도꼬마리 활동가는 서른 명의 서명을 모아 주셨고, 정의당 동대문구위원회의 페미니즘 소모임 방문 후에는 다섯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군소 정당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성평등의 가치에 동의해서 일수도 있고, 지역구 여섯 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20대이자 여성인 후보였기 때문도 있었을 것이다. 가부장적인 정치판에서 여성이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전이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녹색당 당원이나 정의당

당원으로 스스로를 밝히신 분들 중에서는 나에게 투표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있었다.

6.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현수막 철거 사건

안 그래도 어려운 선거판에서 더 역올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문동공동체 도꼬마리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전 회기역 사거리에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출근길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던 나와 선대본부장은 9시 쯤 반가운 마음에 현수막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런데 그 날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선거운동원 단톡방에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 해당 현수막이 성평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공정한 선거에 위배된다는 해석이었다. 선거의 기준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인구의 절반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나 공약이 없는 후보자가 과연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후보자일까? 성평등 공약이 보편 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마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에 부합하는가?

페미니스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달 수 있는 문구의 현수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본의 존재 자체가 그 현수막의 내용을 '불공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나

는 아마 누군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민원의 주체가 안티페미니스트인지, 경쟁 후보 선거본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민원을 제기한 인식 자체의 후진성 그리고 그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판단이야말로 불공정하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구로 만든 현수막이 도봉구 창동역 부근에도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우연히 창동역을 지나치다가 그 현수막이 아직까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마도 도봉구에는 페미니스트임을 표방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현수막이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말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지극히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말이니까.

7. "가현님이 출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응원과 지지 또한 많이 받았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 SNS 계정의 메시지나 후보자 개인 SNS의 메시지로 응원의 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투블럭으로 머리를 자르면서도 탈코르셋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후보님과 다른 페미니스트 후보자들 덕분에 당당하게 탈코르셋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후보님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요"

“후보님에게 투표한 것이 가장 적극적인 페미니즘 활동이었다”

“페미니즘은 잘 모르지만 딸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후보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모두 응원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젊은 여성의 등장은 그 자체로 용기가 될 수 있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남성들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투표로서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 뿌듯했다.

가족과 친구들도 나에게 든든한 지지를 제공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수막 문구나, 선거 벽보의 슬로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동생은 지지글까지 썼지만 선거 운동이 불가한 나이여서 그 지지글을 게시하지는 못했다. 누구는 정치한다고 하면 집안 말아먹는다고 뜯어말린다던데, 나는 가족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니 가족을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변한 것 같기도 하다. 친구들은 ‘네가 결국 뭐라도 나갈 줄 알았다’면서 후원금을 보내주고 온 가족을 동원해 후보자 추천 서명을 받아주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어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8. 어렵기도, 새롭기도 했던 유권자와의 대화

지난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후보자에 대한 테러행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안티페

미니스트에 의한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안티페미니스트의 비판이나 공격은 생각보다 덜 했다. 자신을 안티페미니스트로 생각조차 않은, 인식이 정제된 가부장적인 유권자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성평등한 나라다, 여자들이 너무 드세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안 따른다, 이렇게 출마를 했으면 성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 성평등은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다 같은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이 턱 막혔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지점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합의할 만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웠다. 선불리 반박하려고 하면 유권자들은 더 마음을 닫았다. 일단 들어야 했다. 유권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시간이 부족해 성평등과 관련해 차분히 듣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간 적은 거의 없었다.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반면, 선거 기간 동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유권자들과 나는 상호작용은 오히려 활발했던 것 같다. 우리 선거본부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숙명여대 입학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내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켓을 들고 들어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난 한 남자는 나에게 손수 커피를 타 주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 사람은 동성혼을 인정하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것 같다며 나에게 젊은 사람이니 나라의 앞날을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다.

성당 근처에서 만난 한 모녀는 퀴어문화축제나 동성애가 퍼지면 아동 성폭력도 소수자성으로 인정해주어야 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말을 걸어오는 시민을 만나는 경험은 새로웠다. 농성장이나 퀴어퍼레이드에서 만나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은 목청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우리 또한 똑같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고 외치며 인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대화로서 피력하고 나의 생각도 물어봐주는 쌍방의 소통을 하고 나니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내 주변에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나라에도 이로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을 인정할 외국의 사례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성당 앞에서 만난 모녀에게는 성폭력 가해자와 성소수자는 다른 개념이고,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모녀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내가 깊이 있는 이론이나 가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나는 이 대화들이 의미있었다고 느꼈다.

나는 그 대화를 통해 그동안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겨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에서 놀랐다. 지난 수십 년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만들어 낸 성과였다. 또, 결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질문이 페미니스트 정치인에게로 왔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정치와 퀴어 정치는 만날 수밖에 없고 교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9. 선거 결과, 그리고 페미니즘당 창당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선하고도 멋진 충격을 주었던 신지에 후보는 동대문구 전체에서 약 2,400표를 얻었다. 나는 이 결과를 보고 적어도 페미니즘의 가치에 동의하고 기꺼이 표를 던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구 전체에 2,400명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동대문구를 절반으로 나눈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서는 1,200명의 지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랬을 때 우리 선거 본부가 세운 목표는 3,000표였다. 시간이 흘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지지할 것이며 또 그런 반응을 끌어내 보자는 모두의 결심이었다.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며 개소식도 하지 못하고 유권자들과 악수 한 번을 하기 어렵고 이야기조차 나누기 어려웠지만, 정책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영상을 만들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거듭했다. 그래서 선거 결과, 2,009표를 득표했다. 목표한 득표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명의 후보 중 상상도 못한 3위라는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우선, 2017년부터 준비해왔던 페미니즘당 창당을 올해 여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성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배제 없이, 나중 없이,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연대의 지점으로 바뀌는 공존의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꿀 여성주의 정당의 창당이 눈앞에 있다. 나 하나의 도전이 아닌,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닌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 나아가야겠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나는 21대 총선의 페미니스트 후보자였다

2010년과 2020년 서울 마포에서의 선거 경험 전격 비교 10년 사이 강산은 정말 변했을까?

오현주 현)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무수석보좌관*

10년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탄핵 촛불이 한창일 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외침이 등장했고 사회 곳곳에서 미투(#MeToo)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2020년 미투(#MeToo) 이후의 첫 총선이 치러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의 정치생태계는 느리게 진화하고 있다.

- ▶ 21대 국회 첫 여성부처의 탄생
- ▶ 여성의원 비율 300명중 57명, 여전히 19%
- ▶ 지역구 여성의원 300명 중 29명으로 약 10%
- ▶ 국회 전체 보좌진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10명 중 3명꼴

- ▶ 4급 여성 보좌관 8%에 불과

여성대표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대표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 여성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대표들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보좌진까지 살펴보면 변화의 발걸음은 더디다.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분명 여성들의 삶이, 여성들의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글을 쓰는 나는 현재 정의당 비례 2번이었던 장혜영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단 8%에 불과한 여성 4급 보좌관이 된 배경에는 삶의 기본값으로 페미니즘을 장착한 청년 여성 국회의원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조금 더 덧

* 현) 21대 국회의원 장혜영 정무수석 보좌관
전) 정의당 중앙당 대변인
현)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마포구 바선거 후보 (20.31% 득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마포을 후보 (8.87% 득표)

붙이려면 나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정의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32살의 나이로 마포구 의원으로 출마해 20.31%를 득표했고 약 2%p차이로 아깝게 낙선했다. 첫 공직선거 출마에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망원1동 주민들에게 2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유권자 5명 중 한 명이 나를 선택하는 감격을 누렸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했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마포라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정당 활동을 하며 협동조합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활동을 진행했다. 10년 동안의 지역활동을 이 지면에 다 담기 어려우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활동에는 언제나 유유히 페미니즘이 녹아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2010년에는 구의원으로 출마했고 10년이 지나 2020년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나에게 비친 지역사회라는 공간은 어땠을까? '총선현장에서 여성 후보자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청탁받고 살짝 망설여졌다. 정치인이 되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데 있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세세히 설명하고 총선 기간이 얼마나 성차별적이었는지 증언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나 또한 비켜나 있지 않다. 하지만 서울 마포라는 공간이 아주 특수하거나 나의 경험이 특별할 수 있어도 나에게 여성임이, 페미니스트임이 악한 고리로만 작용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다.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낀 희망의 기운들을 솔직하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2020년 총선에서 페미니스트는 어디에나 있었고 페미니즘은 지역사회도 강타했다.

여성유권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거는 흔히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그만큼 격렬한 경쟁의 공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곤경에 처하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선거 기간 동안 나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환호하고 지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은 20~30대 여성이거나 할머니들이었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의 적극적 지지의사는 놀라웠는데 나는 그들을 '반달눈'이라고 불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 멀리서부터 환호하며 다가오는 모습, 어쩔 줄 몰라 하는 환한 미소를 눈에서부터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절실해 보였다.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정말 당선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전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남성들로 가득하다. 내가 출마했던 마포구를 지역도 당시 현역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기는 했지만 정청래라는 남성 의원의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 또한 18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출마한 나는 눈에 띄는 존재였다. 1강 2중이라 우겨보았지만 유권자들 눈에 2강 1약 구도였고 약체인 후보는 바로 나였다.

처음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 작은 정당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기에 지지도를 비롯해 인지도가 무척 낮았다. 특히 20~30대 남성유권자들보다 여성유권자들에게 지지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30대 여성유권자들은 단순히 여성후보자라는 이유로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냐라는 태도가 확고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지지도와

〈표 1〉 나에 대한 지지도

성연령대별	후보지지도	비인지호감	비인지비호감	비고
남18~29세	5.5%	29.8%	41.4%	
남30대	8.9%	17.4%	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호감도가 가장 낮은 성연령대별 Top3 : 1위 남30대, 2위 여40대, 3위 남60대 • 비인지비호감도 가장 높은 성연령대별 Top3 : 1위 남30대, 2위 남60대, 3위 남18세~29세
여18~29세	3.4%	38.1%	31.2%	18세~29세 여성은 전체 성연령대별 중 비인지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옴
여30대	4.1%	35.2%	35.7%	

- 1) 조사기관 : 정의정책연구소
 2) 조사기간 : 2020년 3월 1일(토)~3월 2일(일) (2일간)
 3) 표본수 629명, 응답률 4.3%, 4.0%p (95% 신뢰수준)

비인지 호감도의 차이이다. 18~29세 여성들은 지지도와 비인지 호감도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년여성들은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보여줘봐’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었다.

내가 2010년에 마포에 출마했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젊고 트렌디한 유권자층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내고, 당시 유행이 시작되던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는 선거전략을 펼치긴 했다. 그렇지만 2010년 당시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짓하는 유권자층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이미 2018년부터 청년유권자 논의에서 ‘20대 남성’은 화두였다. 언론과 각종 토론회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획은 넘쳐 흘렀다. 그에 비해 20대 여성유권자들에게 주목하는 기사와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는 2019년 즈음 ‘20대 여성 유권자’에 관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1)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고 선거캠프는 기꺼이 여성들의 손짓에 화답하기로 했다. 같은 유권자인데 왜 20대 남성 유권자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정책을 보이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젠더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고. 맹세컨대 나는 모든 성연령대별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한 명 한 명에게 성심성의껏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를 했다. 그런데 20대 남성유권자들에게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솔직히 비인지비호감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젠더공약이 곧 지역공약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뒤덮인 선거였다. 빅데

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P0002543939 정의당은 왜 파주의 여의원기숙사 매점을 주목했나 [인터뷰] ‘20대 여성의 정치적 함의’ 심층 연구한 정의당 조혜민, 오김현주 연구원.

이더 분석 결과 코로나19 키워드가 그 어떤 선거와 정치 이슈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돈과 조직이 미약한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다. 알리고 싶는데 길거리에서 사람 보기가 귀하니 인지도를 높이는 것부터 힘들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온라인을 통한 선거캠페인이 중요했고 집집마다 보내는 선거공보물을 읽었다는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만나게 되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표를 받아보고 선거캠프는 전통적인 40~50대 진보적 유권자층에 호소하는 전략과 더불어 현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타겟층을 20~30대 여성으로 정했다. 40~50대 진보적 유권자층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했고 20~30대 지역여성유권자에게는 맞춤형 공약을 고민했다.

보수적인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색깔만 파란색, 빨간색을 쓸 뿐 솔직히 차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어떤 후보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 교통인프라를 놓고 재개발을 하고, 부지 이전을 통해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즐비하다. 2010년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는 막연한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그런 공약들을 하찮게 봤다. 하지만 교통과 인프라는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역정치를 경험할수록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다는 반성이 들었다. 보수는 개발, 진보는 반개발이 아니라 어떤 정치철학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에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마포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서울에서 주거선호도가 지속

적으로 상승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의 관점에서 청년여성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해보니 형편없었다. 관악구와 별다르지 않은 CCTV, 방범벨 수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동률이 있는 지구대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마포라는 수식어는 사실이 아니었다. 소위 보편적인 정책만 추구하다 보면 여성들을 위한 공약, 장애인을 위한 공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제대로 고민되지도 논의되지도 않았다. 오현주 선거캠프는 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무척이나 공을 들였다. 특히 본선거가 이뤄지기 전 예비후보 기간에 보낼 수 있는 예비공보물²⁾의 경우 25세부터 35세까지 여성세대주에게 맞춤형 공약을 실어 예비공보물을 발송했다. 비혼의 여성들이 늘어나는 특성을 감안해 생활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부터 여성안전 공약,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제정까지 선거캠프가 고심하여 짜낸 공보물이 그 결과이다.

이 모든 과정들에 녹아 있는 관점은 이제 젠더공약은 몇몇 페미니스트 후보들만의 공약도, 중앙정치에서의 전유물만도 아니라는 점이다. 젠더공약이 곧 지역공약이다. 더 이상 '여성이 살기 좋은 ○○'이라는 빈껍데기 말로 넘어갈 수 없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20~30대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후보자들은 좋든 싫든 젠더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2) 유권자의 1/10 인구 수 만큼 예비공보물을 보낼 수 있다.

총선을 뒤흔든 N번방 사건

2019년 2월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대중의 관심은 미치지 못하다가 2020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곧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되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2020년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N번방 문제는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3월에는 N번방 참여자인 박사의 신상공개 및 포도라인 요구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를 받기도 했다.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외침은 2019년 내내 이어졌는데 담장을 넘지 못하기는커녕 여성들은 이제 국회와 정치를 뒤흔고 흔들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앞 다투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N번방 얘기가 단순히 국회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골목까지 뿔어나가는 모습이였다. 한국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마저 정책선거가 되기에 한계가 많다. 현행 선거제가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 다양한 시민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대변자들이 나타나야 하지만 지역구로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이다. 앞서 말했듯 누가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그런 면에서 공보물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역주변에서 선거유세를 할 때에는 갈등에 직면한다. 소위 '보편적인' 시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압박감

은 소위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의 경계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동네 상가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점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로 여겨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자영업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본인이 자영업자는 아니더라도 가족과 이웃 중 누구 한 명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 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그런데 유독 여성의 문제는 특수한 문제로 여겨져 공개적인 유세 자리에서 대중연설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게 여겨진다. 누가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암묵적인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0년에 나는 당시 청년여성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행복의 마포를 만들겠다는 얘기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N번방에 대한 압도적인 청원 숫자는 말 그대로 여성의 문제를 언제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나는 선거기간 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N번방 문제에 관해서 유세를 진행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유세를 청취했다. 후보자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후보가 N번방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이다. N번방 문제에 가장 관심 있는 20~30대 여성들이 아닌 시민들도 이 문제가 들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선거캠프에서 반성적인 평가로 N번방 관련 문제를 더 전면화했어야 한다는 평가가 등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역사회에서 목도하는 것은 값진 경험이었다.

〈표 2〉 지역구 : 정의당 성·연령별 투표 경향(출구조사/%)

구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8세	2.9	2.5	3.4	15.6	14.1	16.9
20대(19세 포함)	2.9	2.5	3.3	12.4	10.3	14.0
30대	2.3	2.1	2.4	12.6	11.4	13.6
40대	2.3	2.1	2.4	14.2	14.0	14.4
50대	1.7	1.7	1.7	12.0	13.6	10.4
60대 이상	0.7	0.7	0.6	4.3	5.1	3.5

글을 마치며

2020년 4월 15일 생애 두 번째 공직선거 출마가 끝났다. 최종적으로 8.87%를 득표했다. 정의당 전체 후보 중 7위를 기록했고 서울지역 정의당 후보 중 최다득표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낙선은 낙선이였다.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운이 좋게도 정치를 시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공식은 나에게는 맞지 않았다. 두 번의 선거 모두 마포라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에게 각인되고 회자되는 선거를 치렀고, 풍족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없는 선거를 치러냈기 때문이다. 나는 낙선했지만 이번 선거를 당선되는 과정에 있는 선거라 진심으로 생각한다. 또 도전할 것이다.

정의당은 20~30대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N번방 해결을 촉구하는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투표 경향을 보면 18세 생애 첫 유권자에게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정당투표에서 18~40세 연령대 여성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넓은 연령대에서 정의당이 지지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정당지지율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상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현상은 201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재연되는 현상이다. 20대의 지지율이 낮을 것이라고만 예측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유권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지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³⁾

2020년 총선의 현장에서 나에게 2010년의 선거 경험처럼 “결혼은 했나?”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국사회가 누군가의 결혼유무를 묻는 것이 실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에 비혼의 선거후보가 편한 선거공간이 열린 것이다. 한국사회가 변화하고 페미니즘의 물결이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면서 정치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번번이 여성들의 요구가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듯하지만, 이 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것이었다.

“이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페미니즘이 이야기되는 시대다. 10년 만에 선거에 출마했더니 강산이 확 변했다. 다음에 만날 여성유권자들의 모습은 어떨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3) 2020년 총선 직후 개최된 정의당 전국위원회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

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의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배경

2020년 5월 29일로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¹⁾ 20대국회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신문을 장식했지만 20대 국회도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21대에 과제를 남겼다. 법률안의 처리 건수와 처리율로 20대 국회의 불성실함(?)을 질타하는 보도가 많았지만 처리율이라는 양적 지표로만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훨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일단 20대 국회의 발의건수는 그 이전인 제19대국회와 비교할 때 훨씬 많았고 처리건수 역시 더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얘기는 질적인 면이고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입법되었는지 그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 그래서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리라고

본다.

사실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는 알려진 몇몇 나라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거꾸로 문제의식이 있다.²⁾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은 일사천리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러 번 논쟁하고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입법과정은 쉽지 않다. 전자가 주로 용어의 개정이나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행정적 방식의 변경 등의 법안이라면, 후자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면서 여러 정책적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법안들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법안 의결의 성과로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번 검토되고 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완성된 법률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도 크고 수범력도 높인다. 20대 국회에서 이처럼 사회 변화와 직결된 법안에 대한

1) 제20대 국회 기간은 2016.5.30.~ 2020. 5.29이고, 제21대 국회 기간은 2020. 5.30~2024.5.29. 이다.

2) 최근 연평균 법안 의결 건수는 미국 221.5건, 영국 36.4건, 프랑스 89.8건, 독일 137.5건, 일본 83.3건, 한국 2,122.8건, 입법조사처 자료, 2020.

펼쳐진 토론과 지난한 입법과정 끝에 타협으로 성과를 올린 법안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국회의 의정활동이 교섭단체간의 정쟁구도와 연동되어 운영되어 온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정당과 언론과 사회가 법안 발의 건수를 실적으로 보아온 잘못된 관행과도 연관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 국회에서 이러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안정화되고 그 속에서 입법의 질 또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젠더 입법³⁾도 이러한 20대 국회 환경에서 성안되었고 또 여러 과제를 낳았다. 이 글에서는 여성과 가족관련 법률안 중 성평등 의제와 관련이 된다고 판단되는 주요 입법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비록 의결에 이르지 못한 입법과정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다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임의로 선별하고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여 제시해 보았다.⁴⁾ 이 범주는 기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성과의 축적이 있었기에 분류될 수 있고 분류의 기준은 문헌이나 자료들을 참조하여 구분해 본 것이다.⁵⁾ 설정된 6개의 범주는 ① 여성폭력방지, ②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③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④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 ⑤ 성평등한 연금·보상·복지 그리고 ⑥ 성 주류화 등이다.

II. 20대 국회 주요 젠더 입법⁶⁾

20대 국회 시기 젠더 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한 미투 운동과 2019년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후 여성 안전 분야에 대한 입법적 관심이 두드러졌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영역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의제도 서서히 부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서 성별임금 현황의 공시와 공표 혹은 제출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 의제에 관한 의미 있는 시작으로 보인다.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모성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관심이 다시 형성된 것도 고무적이며, 아이돌보미의 자격 강화나 양육비 이행관리의 강화에 대한 입법 성과도 언론의 관심과 시민 사회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밖에 이전 국회와 직접 비교해보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다양한 법률 위에서 젠더 의제가 교차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눈여겨 볼 특징 중 하나다.

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성폭력

① 재범방지 : 결격사유 및 취업·임용 제한

20대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방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입법이 이루어진 사안은 자

3) 이 글에서 젠더 입법이란 성불평등 현실의 개선과 관련된 입법을 의미한다. '여성 또는 가족' 관련처럼 단순히 대상 차원의 입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이 글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

5)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948-2017, 제3편 입법편, 한국여성정책: 'Gender Equal Europe 2020-2025', EU; 낸시 프레이저 & 액셀 호네트, '분배나 인정이나, 사월의책, 2014.

6)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률 마다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 취득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하거나 취업과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대학,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대하여 계속 확대해나갔다. 또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경우 임용이나 임원의 결격 사유,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 또는 제적 사유에 새로이 포함하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하였다.⁷⁾

② 가해자 제재 : 처벌 형량 강화, 공소시효 배제 등 형법 개정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7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강도강간미수범도 성폭력 범죄와 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에 추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또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사강간죄,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죄, 아동청소년 강간등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도 추가하고,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하며,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일대일 보호 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범죄 신고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범죄 신고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신고 의무자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성폭력 행위 등을 이유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희롱, 성폭력 등 폭행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를 명하거나 지도 전문의의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행정적 조치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대표나 보육교직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하향조정 하도록 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률로는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찰공무원법, 경제자유구역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한아프리카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등이 있다.

(2)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중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가 의제화 되고, 법 개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벌금형을 삭제하여 형량을 강화하였으며 구입, 시청, 광고, 소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자의에 의해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했지만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딥페이크 등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려는 경우 가장 처벌하도록 하였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 영상등의 정보 식별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행위, 불법촬영 및 반포 행위, 허위영상물(딥페이크)도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추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죄 등의 범죄자도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3) 성매매·인신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였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채팅화면에 신고포상금 안내문을 추가하도록 하고 모바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도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건을 개정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그 사람을 수수, 은닉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⁸⁾

(4)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 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성희롱 예방을 추가하였다.

(5)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 퇴소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제공을 국가 책무에 추가하였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하였다.

(6) 여성폭력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의 정

의를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외에 지속적 괴롭힘,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화와 통계 구축,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침의 마련과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의 교육 규정을 마련하였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 내용에 장제비를 추가하였으며,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에 추가하며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하였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8) 나머지 법률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보상대상자 지원법,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2.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1) 성평등 고용 노동

20대 국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 양성평등한 임용, 그리고 노동시장 성차별 시정을 위한 몇 가지 입법적 진전이 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참여시 임금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 법인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에 관해 조사, 공표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균형 임용을 위해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고, 3.8 여성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또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임금의 날로 하고 이날에 성별임금통계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남녀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고 기관장이 목표 수립과 이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양성평등 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임용 계획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의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 및 추진실적을 과학기술부 장관 등 소관 부처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⁹⁾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성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이 시정요청 사항의 이행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와 시도, 시군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을 3차례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퇴직한지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완

9) 나머지 5건의 법률은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10) 나머지 5건의 법률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다.

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하였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 추가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에서 고용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하였으며 적용대상을 동일 기업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확대, 완화해 왔다.

(3) 여성기업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기업 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 형평성을 맞추고,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3.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1) 동등 참여 촉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무효로 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산림복지진흥법을 개정하여 산림복지심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위원회 설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여성 등 각 사회계층이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4. 일·생활 균형과 다양한 가족

(1) 일·생활균형과 가족친화기업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분할 휴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양의 경우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하였다.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직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

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하였다.

(2) 아이돌봄·보육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각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였다.

한편,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광역센터를 지정하고, 아이돌봄비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경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도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며, 아이돌봄미자격정지 사유를 3년으로 연장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아이돌봄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였다.

(3) 한부모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을 실시할 때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의 특례규정에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도 포함하였다. 또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하고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며 미혼이 아닌 여성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미혼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 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문화가족 등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장관 등은 교원에게 다문화이해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을 포함하였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난임의 정의 상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5. 성평등한 연금·보상·복지

(1) 연금 및 보상금의 분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속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법 등 4건을 개정하여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 인정 기준으로 하고 분할연금 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 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였으며,¹¹⁾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개정하여 유족보상금 수령시 주 부양자 합의가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 균등 분할하도록 하였다.¹²⁾

(2) 모성 건강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

별을 고려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의 용어를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6. 성 주류화 등

(1)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 의무 부여를 명확히 하였다.

(2) 성별 고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의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기준을 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3) 양/성평등정책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11) 나머지 3건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다.

12) 나머지 1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공동연구와 학술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업무 위탁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III. 21대 젠더 입법 기대

성불평등 상태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여전히 완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상태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나름 미시적인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사건과 2018년의 미투 운동 그리고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SNS를 진지로 하는 성평등 요구의 강렬함은 또 하나의 물결이 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젠더 각성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 오랜 시간 견고하게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의식의 퍼즐이 흐트러지고 성평등 사회라는 새로운 판이 채워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낙관적인 순방향일지는 알 수 없다. 많은 논자들이 포스트 코비드 19(Post-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을 이야기한다. 기술기반 사회로의 완전 진입은 성불평등 문제에도 커다란 의제를 던진다. 남성과의 고용 격차 20% 문제와 34.6%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

편 디지털 기반 성범죄의 확산과 성범죄와 중대범죄와의 결합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 또한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그 피해의 범위와 속도는 짐작 이상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 수준은 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을 것이나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대중적 의제화가 되어 있지도 않다. 나아가 합계 출산율이 0.9에서 0.8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곧 우리 사회가 20, 30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가족을 꾸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간의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암시한다. 고용보험이 규격화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가족관계도 규격화된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닫힌(closed) 법과 제도로는 출생률 문제도 길을 찾지 못할 뿐 더러 소위 '법적 가족' 이외에 존재하는 가족들이 늘어날 뿐이며 여성들의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는 우리 사회에서 개념조차 모호하다. 국가가 20대와 30대의 삶의 현실을 기준으로 놓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적(opened) 법과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제21대국회의 젠더 입법은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 모든 입법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과제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 안전 의제에 관하여

'길거리 묻지마 폭력'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은 성평등의 제1조건이다. 20

대국회에서 과제로 남긴 비동의강간죄 규정 신설, 온라인 그루밍 조항 신설 등 디지털성범죄 입법 강화, 성범죄 의사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포함 등 의료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정비 그리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의 근거 규정 마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들을 모니터링하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규제들을 만들어나가는 노력 또한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성평등한 경제와 노동 의제에 관하여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의 해소는 1987년부터 입법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2020년 현재의 남녀고용격차와 성별임금격차 수준을 상기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유명무실한 듯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와 일·가정양립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하는 사업에 더 전념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에만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성별임금 현황 보고를 넘어 더 전향적인 성별임금격차 축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단순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넘어서서 여성경력단절의 예방과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여성일자리 전반의 흐름에 대한 주도적 인식과 대책 마련에 중심축을 세워나가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의제에 관하여

제21대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로 20

대국회 보다 2% 증가했으나 2020년 5월, IPU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189개국 중 117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제도는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방향으로 설계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할당을 조기에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여성정치인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가장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선출직 남녀동등 참여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공직 참여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의 운영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성별로 균형 있는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여는 단지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롤 모델, 업무 경험을 통한 역량제고, 네트워크 확대가 확대될 수 있고, 낸시 프레이저의 통찰처럼 참여 그 자체가 존재의 사회적 인정과 형평성 있는 분배와 불가분리하다. 정부 위원회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민간기업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의 건강권 및 재생산권 의제에 관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 사안은 세부적인 조항들을 신설해나감에 있어 논의의 방향이 중요한데 기존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적 관점이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관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인지 의학의 접근처럼 여성 건강에 실효적인 의학과 보건의료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으며,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치열했던 여성 안전 논쟁이 난임 지원 정책으로 대체된 이후 시야에서 멀어졌던 생명기술의 전개를

다시 한 번 성인지 관점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덧

많은 SF 영화가 상상하듯 미래의 모습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기술의 문제일지도 모르며 어쩌면 인간 대 사이보그 문제로 나타날지 모른다. 지나친 상상인지는 모르나 만약 미래의 전

선이 인간 대 비인간으로 전환되어 버린다면..... 성불평등 문제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발 하라리의 지적처럼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이 합쳐지면서 인류가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그래서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자유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젠더 입법은 그래서 역으로 더 가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미래는 오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낸시 프레이저 & 액셀 호네프, 「분배나 인정이나?」(2014), 김원식·문성훈 역, 「사월의 책」
 유발 하라리(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한국여성정책(2020), 「젠더입법 가이드 북」
 한국여성정책(2018),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948-2017」 제3편 입법편
 대한민국 정부(2019.12),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2020.6), 「21대 국회 정책현안자료집」
 EU(2020). 「Gender Equal Europe 2020-2025」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20),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22호~제25호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2016 5.30 ~ 2020 5.20 탑재 자료 참조

이슈브리프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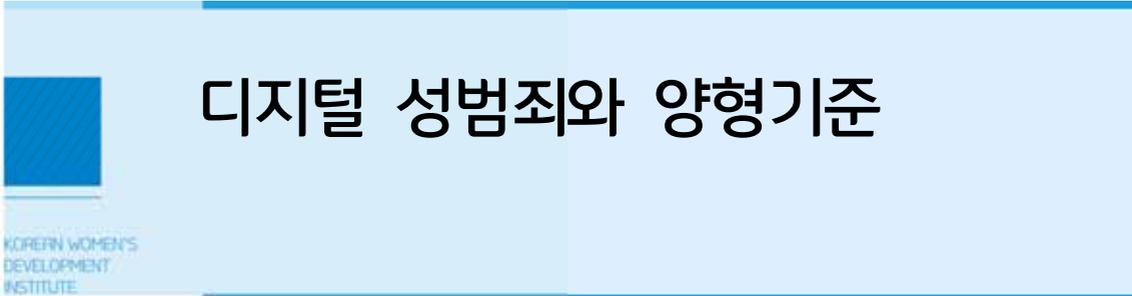
김영미 | 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

-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연구위원

- **코로나19 확산과 여성고용**

전기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김영미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

1. 이슈의 확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양형기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양형기준에 고려한 양형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현행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연 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대법원 양형위

원회에서도 2019년 ‘디지털성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범죄까지 포섭하여야 하는지 등 개념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 안에서 보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면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¹⁾에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 법무법인 송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카메라, 휴대폰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촬영,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범죄로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소지죄,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허위영상물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유포, 제5항 소지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함에도 그동안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유형, 불법촬영물 및 그에 대한 유포행위에 초점을 맞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 상황이 된 데에는 남녀노소 대부분이 카메라와 인터넷 접속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지하철 계단, 숙박업소, 워터파크 등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며 홍보 및 교육을 해왔지만 한번 늘어난 범죄 횟수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등 심각한 피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수익모델로 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만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20년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이 검거되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일명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라고 말한다.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였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쓴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고, 대화방이 없어지면 가해자 휴대폰이나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가해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 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n번방은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2018년 하반기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시초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로, 그는 1번방부터 8번방까지(일명 n번방) 채팅방을 만든 뒤 지속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트위터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다. 그러나 갓갓은 2019년 2월 켈리에게 자신의 방을 준 뒤 돌연 자취를 감췄다. 갓갓 이후 n번방을 운영한 켈리는 2019년 9월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이 떠난 뒤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로리대장태법, 박사방 등)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2019년 7월 n번방을 모방해 더욱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이 등장했다.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쓴 운영자(조주빈)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으며, 이후 신상정보는 물론 여성들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찍게 했다. 특히 조 씨는 이들 여성들을 노예라 지칭하면서 몸에 '노예'나 '박사'라는 표식을 새기게 하고, 새끼손가락을 들게 해 '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가해자들은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어려운 금품을 받은 뒤

방문자들에게 해당 채팅방으로 향하는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곳에 입장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사방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됐으며,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씨는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향후 박사방의 정보가 새나갈 경우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했다. 또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²⁾

이러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법과 영상물 유포방법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은 평범해 보이는 조주빈의 모습 이면에 그토록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수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거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재판 중인 주범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14개에 이른다. 조주빈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하여 행한 다양한 범죄행위도 함께 기소되었다. 조주빈과 그의 공범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얼굴을 모른 상태에서 범죄단체처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

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연구소)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조주빈이 범한 범죄³⁾

- ① 2019. 9.부터 2020. 2.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 ② 이러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영리목적유포)
- ③ 2019. 8.부터 12.까지 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한 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 ④ 이렇게 제작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등(영리목적배포)
- ⑤ 15세 피해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 - 협박죄
- ⑥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가하도록 한 행위 - 강간미수
- ⑦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예고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 박사방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행위 - 강요죄
- ⑧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하여 받은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⑨ 공범으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해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 사기미수죄
- ⑩ 기타 사기죄, 유사강간죄, 무고죄 등

럽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키보드에 글자를 입력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좀 더 잔인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 영상물이 무한대로 퍼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며, 오프라인의 다양한 범죄 유형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양형

기준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범죄유형은 불법촬영, 촬

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유통 방조행위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범죄유형은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온라인 상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 성적 괴롭힘행위가 있다.

사진 합성은 2020. 3. 24. 성폭력처벌법 개정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되었기에 디지털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2020. 3. 24.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4조의2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3) CBS노컷뉴스, 2020.4.13. 3:51 입력, “검,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14개 혐의”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를 신설하여 사진 합성은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로 논의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촬영, 촬영물 비동의 유포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수년간 논의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분석대상 판결 중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1건(전부무죄 9건, 일부무죄 2건)이 있었다.⁴⁾ 2017년 분석대상 판결 중 벌금형은 54.1%, 집행유예는 27.7%, 징역형은 11.0%, 선고유예는 5.9%, 무죄는 1.0%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보

〈표 1〉 1심 형벌 종류

1심 형벌종류	[2011년~2016년 4월]		[2017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82	5.32%	41	11.1%
벌금	1,109	71.97%	200	54.1%
집행유예	226	14.67%	103	27.8%
선고유예	115	7.46%	22	6.0%
전부무죄	9	0.58%	4	1.1%
합계	1,541	100.00%	370	100.0%

출처: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분석대상 판결의 선고형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형에 비해 벌금형은 17.8%, 벌금형 선고유예는 1.5% 줄어들었고, 징역형은 5.7%, 집행유예는 13.1% 증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⁵⁾

그렇지만 여전히 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양형은 낮았고, 법원의 낮은 형벌이 재범율을 높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불법촬영물 비동의 유포에 대해서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분석대상 판결 중 촬영물이 유포된 64건에서, 1심에서 선고유예된 사건은 6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20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7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21건이었다. 유포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17건 중 가장 낮은 형은 4월이었고, 가장 높은 형은 3년이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20건 중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2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8건이었다.⁶⁾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분석대상 판결 중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34건으로, 이 중 1심에서 선고유예된 사건은 2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7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유포행위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중 가장 낮은 형은 6월이었고, 가장 높은 형은 1년 4월이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7건 중 300만 원 이하의

4)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31면.

5) 윤덕경 · 김정혜 · 천재영 · 김영미 · 유경희(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면.

6)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앞의 자료집, 88~89면.

벌금형이 4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3건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판결에 비해 2017년에 선고된 판결은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선고형은 여전히 낮았다.⁷⁾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한 실제 판결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의 양형이 어느 정도 선고되었는지 살펴보자.

① 불법촬영

지하철 전동차 안,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를 촬영, 다양한 장소의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 남의 집을 훑쳐보며 사위하는 모습, 나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 자고 있는 연인의 나체를 촬영, 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26)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전날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

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280)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건물 4층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653)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지하철 출구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3개월간 총 3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96)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② 비동의유포

텀블러 등 웹하드, 소라넷 등 포르노사이트,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단체방 등에 불법촬영자나 비동의유포임을 알면서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유포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성교 후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

7)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디지털성범죄 피해회복과 양형'

고도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로부터 피해자와 성교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710)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과거 교제를 하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게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82)

→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③ 유통, 공유

비동의유포임을 알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유포하거나, 이들의 유포를 알면서 방치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는데, 죄명이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5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0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 50만 원 선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여러 곳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등 총 683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78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등 콘텐츠를 공유하는 c사이트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c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한 남녀가 실제로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동영상 등을 링크시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90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각 벌금 100만 원 선고

④ 유포협박

피해자의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피해자와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현행법상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영상물을 수단으로 2차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주변사람들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자,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과 섭섭함을 공공연히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둘 사이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도록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겠다고거나, 그 사진의 수위를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896)

→ 협박죄: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른 남자 친구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난 더 잃어버릴 것이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너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65)

→ 협박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하여 공소기각판결

⑤ 성적괴롭힘

인터넷이나 SNS, 단톡방 내에서 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 인터넷 게임 중에 성적인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위반(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되고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소지죄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을 통해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등 신체촬영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되거나,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범죄유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루밍’ 범죄로 취급될 뿐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15세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70개와 동영상 파일 20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피고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음란물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요구했던 점,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수차례 본 점,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유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아동음란물소지)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 또는 ‘개’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를 개처럼 취급하며 명령하고 개처럼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e사이트에 피해자의 영상물을 전체공개로 설정한 후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3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 3년 선고

그러다가 2018년 웹캠 투 비디오(W2V)라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되어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손정우는 2015년 6월경 W2V라는 다크웹을 처음 개설하여 영아, 유아, 및 아동을 성착취한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 포르노는 8테라바이트에 달했고,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서버에는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 중이었으며,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웹캠 투 비디오에서만 발견된 영상이었다고 한다. 손정우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여 415비트코인(2020년 5월 5일 기준 약 4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⁸⁾ 이러한 행위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갯갯’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켈리’와 고담방을 운영했던 닉네임 ‘와치맨’은 조주빈보다 먼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켈리’ 신모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가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켈리’ 신모씨는 이미 확정된 범죄 이외에도 텔

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또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⁹⁾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씨는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선고를 선고 받았고,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에게도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¹⁰⁾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는 2019.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¹¹⁾

4.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선고하는데 참고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고 판사에 대한 권고적 기준에 해당하지만 양형기준이 있으면 심각한 범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사안임에도 판결하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형의 격

8)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웹캠투비디오 사건

9) 연합뉴스, 2020. 6. 5. 15:33 입력, ‘경찰, n번방 계승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0) 연합뉴스, 2020. 6. 5. 15:45 입력, ‘제2 n번방 주범 10대 징역 10년 법정최고형...공범도 중형(종합)’

11) 여성신문, 2020. 5. 26. 10:07 입력, ‘와치맨 신모씨, “성착취 영상 공유해 얻은 이익 하나도 없다”

차를 줄일 수 있으며, 재판장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는 양형기준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어떤 범죄이든 법률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사는 양형기준이 없더라도 법정형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없으니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이미 선고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하거나, 성범죄의 영역 중 디지털 성범죄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던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 사건의 양형등을 참조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입법자도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하였고¹²⁾, 재판에서도 강간, 강제추행보다는 피해가 적다는 인식 때문에 대체로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2010년을 넘어서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근까지도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범죄의 발생건수가 상당히 높다. 게다가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정준영 단톡방 유포사건, 여성연예인의 죽음 등 사회적인 파장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w2v다크웹, n

번방 사건 등을 통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에 해당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기본, 가중, 감경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권고 형량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교, 형량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권고 영역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기준 설정시 반영하지 못한 고려 사유가 있거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나 참작사유와는 다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사유의 존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권고 형량범위에 속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양형기준에는 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있다. 양형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12) 디지털 성범죄 중 대표적인 조문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법정형(2020. 5. 19. 개정 전)은 징역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3)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에도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이유를 보면,¹⁴⁾ 양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② 형사 처벌전력 없음, ③ 자백 또는 반성 ④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⑤ 촬영된 영상 및 피해 정도 ⑥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음, ⑦ 기타 사정(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방지 다짐, 자수, 자발적 영상 삭제, 피고인의 나이 또는 특성-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였고, 가중요소로 ① 범행횟수·기간 및 피해자의 수, ② 동종범죄 처벌전력, ③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가 중함, ④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이유에서도 ① 피해자와 합의 여부, ② 형사 처벌전력 유무, ③ 자백 또는 반성 유무 ④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⑤ 피해정도 ⑥ 기타 사정(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방지 다짐, 자수, 자발적 영상 삭제 등), ⑦ 유포 여부 등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였다¹⁵⁾.

이렇게 재판장이 양형이유에서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없는데다가 기본적으로 기준 형량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실제 판결은 위에 인용한 자료와 판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가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멈추는 대신에 끊임없이 ‘들키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며 진화된 범

죄 수법으로 가해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들이 범행을 계속하게 된 데에는 법원의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낮은 선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고려할 점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이지만,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 개인을 넘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광범위하며, 영상물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영구적이며,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 및 전문가단체들을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필자도 (주)화난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2일의 기간 동안 총 20,298명의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에 관해 의견을 수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14) 한국여성변호사회(2016), 앞의 자료집, 91면 이하.

15)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가중요소	감경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옹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가해자가 영상 삭제에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 기타

다음 표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감경사유에 명시적으로 답변한 국민들 중 97%(응답 8,100명 중 7,906명)가 감경사유를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 훨씬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영상에 가학적인 요소 포함
-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촬영 후 유포
- 전 애인에게 보복하는 행위의 유포
- 협박을 동반한 범행. 스토킹 등 다른 범죄를 동반한 범행
- 불법촬영/유포/소비 등의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혹은 영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비(예: 파일 백업) 한 바가 있다.

〈가중사유에 대한 국민 의견 발취〉

①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

- 협박을 해 촬영
-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해킹 및 사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협박해 촬영하게 함
- 경찰이라고 신분을 위조해 신상을 얻고 그 신상을 이용해 협박하여 자위나 자해 영상을 찍게 함

②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이다.
- 피해자가 음주, 약물중독 등 심신미약일때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또는 그외 취약 계층인 경우

③ 유포 규모

- 유포대상이 광범위
-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가능하게 유포한 경우

- 범죄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매개를 이용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 매체특성상 그 영상을 모두 지우기 힘들다는 점은 매우 큰 가중사유입니다
-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 주변지인들과 공유함(단톡방)
- 공유하는 방식이 음란물을 공유받기 위한 목적
-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캡처본, gif 파일 등의 더욱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재가공 하여 유포하였다/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
- 유포영상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처벌
- 단톡방이나 SNS계정, 사이트, 커뮤니티 등 다수의 사람이 열람 가능한 곳이 아니더라도 피해 당사자를 포함 타인과의 일대일 대화방에서 유포한 경우
-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유포가 된 경우

④ 피해자 규모, 행위 횟수

- 촬영 및 유포 횟수가 많은 경우
- 피해자가 많은 경우
- 오랜 기간 피해 촬영물을 받아낸 경우
- 검거 횟수가 아닌 범행 횟수를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
- 범죄의 기간 ex) 3회를 5달에 걸쳐 협박한 경우 3회를 1주일에 걸쳐 협박한 경우보다 가중처벌
-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 및 유포

⑤ 동종범죄를 범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동종 범행전과를 적발 기준이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 횟수를 추적하여 가중하여야 함
- 상습적 범행인 경우
- 디지털성범죄/성범죄 등 동종 범죄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 기타 성범죄 항목에 해당하는 범죄 전과가 있다.

⑥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을 함께 공개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가능하게 촬영한 경우(해당 유형 중 일반적 의견)
- 피해자의 이름·SNS·학교·지역·나이·전화번호·직장 등 개인정보유출
- 특정 신체부위(점, 배꼽, 흉터)로 피해자 간접적 유추가능
- 촬영 도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밝힌 경우

⑦ 촬영 부위 심각한 경우

-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

⑧ 계획적 범죄인 경우

-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미리 약물을 구입하거나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 핸드폰이 아닌 특수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일 경우(고의, 사전에 준비)
- 인터넷 문의글, 범죄장소에서 머물며 피해자를 물색
- 단독 범행이 아니라 타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촬영 유포한 경우

⑨ 영리목적인 경우

- 피해 촬영물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경우
- 유포해서 금전적 이익을 봤다
-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다면 더 큰 형벌을 부과해야 함
- 피해촬영물 상업적 이용을 홍보한 경우, 피해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 유포물을 통한 상업적 행위

⑩ 범행 후 정황

-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 합성이나 썸네일, 캡처 등 2차 저작물을 제작하고 유포
- 협박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
- 유포된 음란물을 이차 가공하여 배포한 경우
- 판결 전 영상, 사이트, 링크를 삭제하여 증거말소
- 피해자 본인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 협박죄로 고소 후 보복성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
- 피해자가 도움을 찾을 시 보복을 예고
- 불법촬영물을 개인 클라우드나 usb등에 따로 저장해둔 경우
- 피해자가 자해, 자살시도, 일상생활 어려움과 같은 정신과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⑪ 장소의 경우

- 일상에서 촬영 (길을 걷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곳 -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에 붙어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불법촬영
- 여자화장실 혹은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찍은 경우
- 고의적인 설치가 의심되는 공간(화장실, 모텔 등) 설정 및 의도(협박, 합성)가 의심되는 불법 촬영

⑫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 사회적 위치 또는 권력 이용(예: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몰래 찍은 경우/회사 상사가 아랫사람을 찍은 경우)
-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위력을 가진 사람(예: 보호자/선생님/선배 등)일 경우
- 가족이나 친인척 등 반인륜적인 근친범죄일 경우
- 직업적 위계를 이용(경찰관, 아청기관종사자)
- 배우자/연인/가족/보호자 등 피해자와의 친근한 관계 및 신뢰관계를 이용

⑬ 기타 가중사유

- 최초의 영상파일의 녹화 시기가 오래 지났을수록 더 많은 가중치를 뒤야 함. 삭제할 수 있었던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악의성이 더 짙기 때문에
- 가해자의 직업이 교육, 법관, 공직자 일 경우(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등)
- 범죄 계정 공유해 간접 유포행위
- 피의자가 불법촬영 장소의 시설물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와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을 범죄에 이용(예: 숙박업소 직원 및 운영자, 욕실기구/보일러 등 방문 설치기사, 부인과/비뇨기과/ 흉부외과 종사자, 모텔, 디비디방 등 숙박/유흥 업소 종사자거나 그 종사자와 가담해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경우)
-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가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 영상물 플랫폼의 사업자인 경우
- 범죄 이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

<감경사유에 대한 국민 의견 발취>

① 자수, 자백한 경우

- 자수/자백한 경우
-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으로 자수
-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수한 경우
-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상 및 상세한 범죄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 유포한 곳, 거래 역 등 자신의 범죄에 대해 성실히 공개

②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손해배상
- 피해자와 합의한 동시에 피해자가 아무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확증과 피해자의 의견이 감경시켜도 된다면 그때
- 피해자와 대면 사과 (대신 가해자는 눈을 가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습을 숨기거나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와 충분한 피해보상, 영상 삭제 등을 한 이후 피해자가 합의
-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할 줄 아는 성인이며 합의를 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대화를 들어보았을 때 정말 협박은 하나도 없고 합의한 것이 확실한 경우

③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 피해자 전원과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 피해자 전원과 비강압적 관계에서 합의했다.
- 피해자 '전원'이 감경하는 데 동의했다(한 명이 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경하지 않는다)

④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영상 전부 삭제
- 영상 삭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 (예: 자신이 유포한 영상을 남이 재유포한 영상까지 모두 SNS와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 할 것. 이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온전히 가해자 자신이 감당해야 함)
- 평생토록 해당 범죄 자료 삭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을때만 감경
- 해당 영상 최초 배포분 삭제 뿐만 아니라 영상이 유통된 경로에 대하여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
- 영상 삭제를 위해 삭제 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했을 시

⑤ 수사협조한 경우

- 가담한 자들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보하여 추가 범죄자들의 검거에 기여
- 같이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 제보하고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가담자나 범죄 현장을 제보한 경우
- 공범의 정보를 제공
-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움(공범자 신고, 사건자료 넘김 등)

⑥ 초범인 경우

- 전과가 없는 초범
- 불법촬영물 200장의 사진을 찍은 것이 한 번에 적발되어도 1건이 아니라 200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⑦ 진지한 반성

- 가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고 내부고발 등 개선에 노력을 했다.
- 본인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반성문을 작성해 본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에게 배포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 가해자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반성 및 사과를 하였다.
- 단순반성문이 아닌 향후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본인의 성인지교육, 영상삭제를 위한 노력, 성착취 반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SNS 및 유튜브 등 소셜활동기록 제출)
- 법원이 지정한 장소(지면이나 웹사이트)에 반성문 겸 사회적 계도를 하는 글을 올린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공인된 지면과 웹사이트에(없으면 만들어서) 진지한 반성문과 다른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무거움을 알리고 가해를 중지할 것을 권하는 글을 올리면 감경시킨다.
- 피의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 반성

- 디지털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디지털의 특성상 완벽한 영상 삭제가 어려우므로 감경사유가 있어서는 안 됨
- 이미 영상은 유포되었고,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와 영상 삭제를 위해 하는 노력 등은 자신이 선택하여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저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 초범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초범이어도 계획적으로 벌인 일하기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 감경사유 없습니다.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어서 등등 이런 감경 사유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든가 앞길에 창창한 청년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감경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없음. 성폭력은 특이나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및 범위를 알기 어려우며 사진/동영상 등이 한 번 유포될 경우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음. 그렇기에 어떤 반성을 하거나 합의를 해도 감경사유 없음.

⑧ 감경사유 없음

- 감경될 수 없습니다. 소비 자체만으로도 감경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피해자 전원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 기여도를 따져 감경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비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 전혀 없음.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든 아니든 이미 다 봤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음
- 피해자와 합의해도 감경 절대 안됩니다. 영상 삭제도 감경받으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이 아님. 감경해주면 동종범행 저지를 것이 확실함, 소극적 방관도 큰 죄 >> 감경 사유 절대 없음

⑨ 기타 감경사유

- 피해자 전원의 치료비용 완치 시까지 지불
-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일시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에게 종신적으로 정기적인 경제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약속함(매년 확인필요, 불이행시 재산압류, 처벌 진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 가해자가 제3자에 의한 협박 및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 가담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받음
- 재범가능성이 없음

- 우발적이다.
-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
-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다.

6. 결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 임기 마감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형량이 상향되었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신설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련 입법은 마련되었으니,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책무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에 넘겨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격살인’ 행위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크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은 지금보다 높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길 바란다.



코로나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연구위원

코로나19 감염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돌봄을 위해 그 간의 양육방식과는 다른 돌봄을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정내 돌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감염 팬데믹 하에서 자녀 직접돌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으로 인한 긍-부정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감염과 같은 위험요소가 일상화 된 재난 상황에서의 돌봄체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데이터가 보이는 돌봄의 단면을 통해 향후 돌봄정책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양육가구의 가정내돌봄 현황¹⁾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감염의 예방과 확산의 방지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육아지원 공공인프라와 학교에 대해 휴원/휴업/휴관 조치를 실시한 이후, 약 2~3주 간격으로 총 6차례 이상 휴원 조치를 연장하였다. 이는 사실상 개별가정으로 회귀하는 가정내돌봄에의 강력한 권고로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대응이나, 코로나 19 이전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흐름에 일종의 유예된 기간으로 감염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자녀돌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휴원·휴업기간 아동 돌봄의 실제와 이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3월말(2020. 3. 25~3.

*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1) 「육아정책 Brief 81호 -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2020. 4. 14)」 내용을 기초로 작성

27)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주 양육자(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자녀양육가구의 소득과 근로시간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계소득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고, 부모 학력에 따라 부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에도 차이를 보였다.

집안에 있는 시간(85.5%)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72.2%), TV/미디어 사용(77.8%)과 온라인 소통시간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부모-자녀 관계(39.7%)와 부부관계(20.9%)가 좋아졌다는 긍정응답이 보고되었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은 부모-자녀 관계(6.6%), 부부관계(10.3%)로 나타나 긍부정의 관계 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긍정적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에서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감소에 대한 체감이 더 크고(5점 평균 2.67점 vs. 2.37점;

줄어들: 특별재난구역 26.3%, 다른지역 19.3%), 부의 경제활동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2.78점 vs. 2.64점; 줄어들: 특별재난구역 43.6%, 다른지역 29.3%). 취약특성(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을 가진 경우(N=45), 그렇지 않은 가구와 비교하여 부모-자녀관계(취약가구 14.2% 비취약가구 5.2%)와 부부관계(취약가구 20.4%, 비취약가구 9.4%)에서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나.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전-후 자녀돌봄 및 서비스 이용 변화

가) 돌봄공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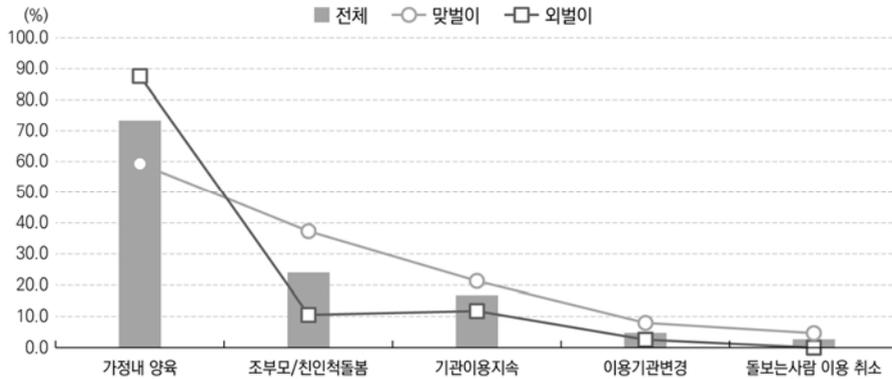
코로나 상황 전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기간 개별가정의 자녀돌봄은 변화없음에서부터 다양한 양육방식 선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폭이 크고, 자녀의 연령과 가구특성, 지역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휴원/휴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는지 질문한 결과(‘낮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로 질문), (어느 정도+상당히) 그렇다 36.2%, (전혀+별로) 그렇지

〈표 1〉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경제적/시간/관계 변화: 5점평균(n=564)

단위: 점

가구소득	부근로소득	모근로소득	가구지출	자녀양육비지출	부근로시간	모근로시간
2.61	2.70	2.71	3.12	3.01	2.85	2.78
자녀와 보내는 시간	집안에 있는 시간	TV/미디어 이용 시간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4.07	4.46	4.18	3.45	3.15		

주: 상당히 줄어들/나빠짐 1점, 약간 줄어들/나빠짐 2점, 변화없음 3점, 약간 늘어남/좋아짐 4점, 상당히 늘어남/좋아짐 5점으로 응답한 평균임. 자료: 최윤경 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지원방안 연구. 이하 동일



주: 육아정책 Brief 81호(2020. 4. 14).

[그림 11] 휴원 이후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 전체아동(만0~8세)

않다 63.8%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약 절반(49.4%), 외벌이가구의 약 20%이상(21.2%)이 휴원/휴교 기간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별재난구역과 취약가구에서 돌봄공백 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특별재난지역 41.8%, 특별재난지역 외 34.8%; 취약가구 46.9%, 비취약가구 35.1%).

나) 서비스 이용 변화

코로나 상황 전후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59.0%,

그렇지않다 41.0%로 응답되었다.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음 24.0%, 자녀가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 16.8%,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났다(n=333, 중복응답 기준).

특별재난구역, 읍면지역, 맞벌이가구, 취약가구, 그리고 부모 고졸이하 학력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감염 위험 상황에서 맞벌이와 같

<표 2> 휴원기간 전-후 가정내 자녀돌봄(2월말 vs. 3월말)

단위: %

구분	코로나 전-후 시점	부모 직접돌봄	아버지가 주로 돌봄	어머니가 주로 돌봄	부모 함께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
영아자녀	전	33.2	3.6	29.2	7.9	18.6
	후	39.5	7.5	36.8	12.3	20.9
유아자녀	전	15.0	1.4	13.6	4.3	6.4
	후	38.2	10.0	29.6	15.0	26.4
초등자녀	전	24.4	5.0	20.1	4.3	12.6
	후	44.7	7.0	35.2	7.7	20.3

주: 중복응답 기준. 영아(n=253), 유아(n=280), 초등1-3학년(n=443).

〈표 3〉 휴원기간 전-후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2월말 vs. 3월말)

단위: %

구분		아이 돌봄	민간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돌봄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육아 공동체	자녀혼자 있음
영아	전	2.8	2.0	23.7	2.8	2.0	3.6	2.0	1.2	2.4
	후	3.2	2.8	13.0	1.6	3.2	4.0	2.4	3.2	2.4
유아	전	2.1	.7	33.9	18.2	2.5	2.5	1.8	1.4	2.9
	후	3.9	5.0	14.3	6.4	3.6	2.1	2.1	2.1	5.0

구분		초등 돌봄 교실	지역 아동 센터	온종일 돌봄	학원·학습 관련	학원·예체능	학원의 : 기타	공공 기관/인프라	문화/오락/체험	자녀 혼자 있음
초등	전	.2	5.9	10.8	20.1	2.5	1.1	6.8	6.5	.9
	후	5.2	2.5	2.7	7.4	5.6	12.2	2.9	3.4	8.6

주: 중복응답 기준(모름/기타응답 제외). 영아(n=253), 유아(n=280), 초등1~3학년(n=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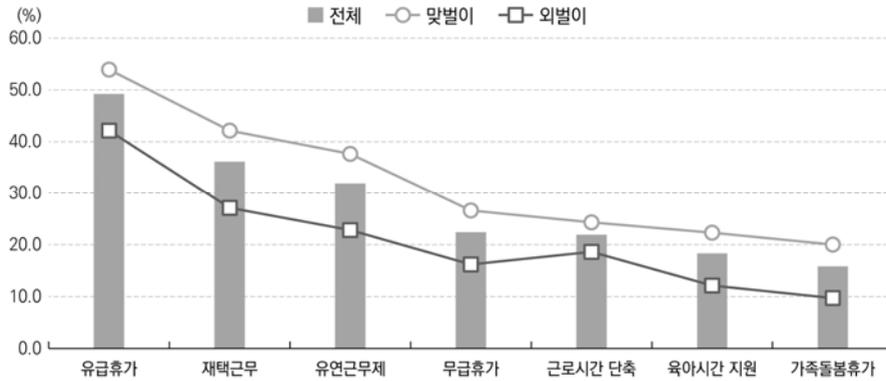
은 근로 상황 외에, 가구의 취약특성과 지역여건이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모직접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주요한 양육지원체계로 작동하였다. 취학전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 이용률이 초등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월말 조사시점 영유아의 경우 맞벌이가구의 약 25%, 외벌이가구의 약 9% 이상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²⁾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감염위험 상황에서 영유아 자녀 돌봄에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맞벌이가구 37.1%, 외벌이가구 8.0%).

가정내 자녀돌봄에서 부모직접돌봄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모의 돌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성별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의 돌봄과 부모 함께돌봄의 비중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감염위험 심각단계에서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1~3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직접양육과 조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사교육 이용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 자녀 혼자 있는 경우가 8.6%, 사교육 이용이 10% 내외를 보였다. 초등자녀에 대한 양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지 영유아기에 비해 긴급돌봄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 이용이 상승세를 이어간 점과 조사시점이 사회적거리두기의 감염위험 심각단계임을 고려할 때 이후 기타 돌봄서비스의 이용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말 전국 평균 70%를 상회함.



주: 항목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친 결과임.

[그림 2] 휴원 이후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 - 맞벌이/외벌이 가구

2. 자녀돌봄 지원·제도 이용 현황

가.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현황

휴원 기간 제공된 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본인직장 기준, n=284) 물품지원(53.2%)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급휴가(49.2%), 재택근무(36.1%), 유연근무제(31.9%),

<표 4> 휴원 이후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률

항 목	전체 (N=284)	부모	
		부	모
물품지원	53.2	50.5	59.7
유급휴가	49.2	49.5	48.3
재택근무	36.1	33.4	42.7
유연근무제	31.9	31.5	33.0
무급휴가	22.4	22.2	22.9
근로시간 단축	21.9	20.2	26.0
육아시간 지원	18.3	15.5	24.6
가족돌봄휴가	15.8	14.3	19.3

주: 본인직장기준 응답. 항목별 비 해당 응답 제외 후 '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 응답을 합침.

무급휴가(22.4%), 근로시간단축(21.9%)과 육아시간 지원(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3월말 시점 조사참여가구의 15.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돌봄휴가 이용은 증가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육아지원인프라의 휴원 조치 이후 취업부모가 자녀돌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유급휴가로 나타나고 무급휴가의 사용도 적지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위한 지원제도의 이용을 제고하는 방안이 긴급돌봄체계 하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상기한 자녀돌봄 관련 지원과 유연근무제의 적용은 (물품지원을 제외하면) 외벌이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이용률이 일관되게 높았으며, 유급휴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에 비해 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자녀돌봄 지원 제도의 이용에서도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부의 이용률은 약 15~50%로 나타났다.

나. 자녀돌봄 지원·제도 선호도

3월말 시점 현재와 같은 감염 위험 상황 및 휴원 기간 동안 자녀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두 가지를 부모에게 선택하게 한 결과, ‘부모직접돌봄(38.1%)’과 ‘아동수당 추가지원(31.4%)’에 대한 응답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17.0%)’이 나타났다. 이어서 ‘재택근무(16.3%)’와 ‘가족돌봄휴가(14.5%)’, ‘유급휴가(12.4%)’,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6.0%)’, ‘유연근무제(4.4%)’, ‘육아시간지원(2.3%)’순으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2%였으며,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은 각 2.0%로 응답되었다.

부모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제도와 현재 정책 설계 및 지원·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택근무와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긍정 응답이 일정비율을 보였다.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여 5월말 긴급돌봄 이용률 전국 평균 70%를 상회하고, 6월 시점 모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등원과 개학이 시작되어 지역별로 부분 또는 전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돌봄서비스 병행 이용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아동 돌봄의 쟁점

1) 가정내 돌봄역할 수행의 성별격차 여전 그러나 부의 참여 또한 증가세

감염위험 확산으로 가정내돌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자녀돌봄 역할이 가중되는 성별 편향과 격차가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가구와 취업모의 돌봄 역할 수행과 그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부의 자녀돌봄 참여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이용이 일정수준 이상을 보이며 그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의 시간지원 확대와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 정책의 영향이 누적됨을 고려할 때, 관련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자녀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세한 제도적 보완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봄 체계 정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위험이 확산되는 시점 기관 대상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함께 긴급돌봄의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직원의 고용 유지에 당장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와 감염 팬데믹 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인해 개별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가정내 돌봄을 위해 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영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아기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대한 검토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

봄 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예: 교사대아동비율, 공간기준 등)을 정하는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공식·비공식 분야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내재된 수요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이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휴원·휴교 기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동 혼자 있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자녀돌봄을 선택한 비중 못지않게 기존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거나 돌봄공백을 경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재된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 감염위험단계를 고려하여 방역이 보강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보육·교육 교직원 및 돌봄인력의 전문화, 양질의 서비스 제고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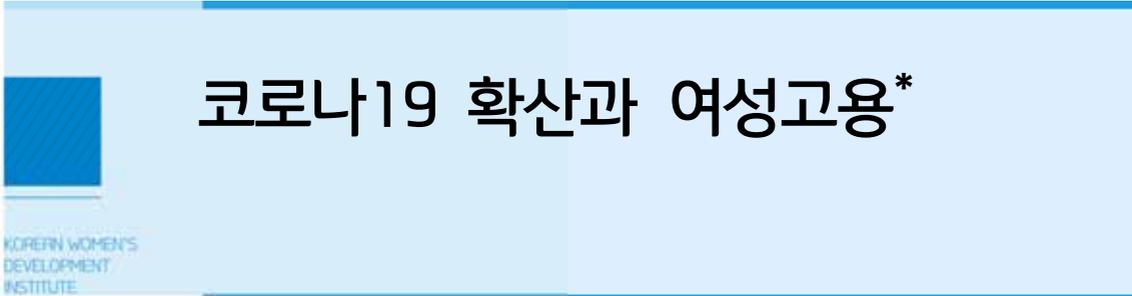
감염위험이 확산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은 육아지원에서도 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

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감염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과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위험 심각단계에서도 반드시 일해야 하는 필수 직종(essential work)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을 비롯하여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녀돌봄을 위해 아동돌봄의 서비스와 인력 또한 상시 운영이 필요한 직군으로 포함되어 있다.

육아지원체계에서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서비스 운영 기준 외에, 취약전 교육·보육·돌봄의 형평성 이슈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감염위험 상황에서의 돌봄서비스는 휴원·휴업 지침 외에 방역기준이 강화된 보다 적극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을 필요로 한다. 즉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체계는 감염위험의 단계별 상황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를 우선순위로 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발간중).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2020.04.14).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

1. 글머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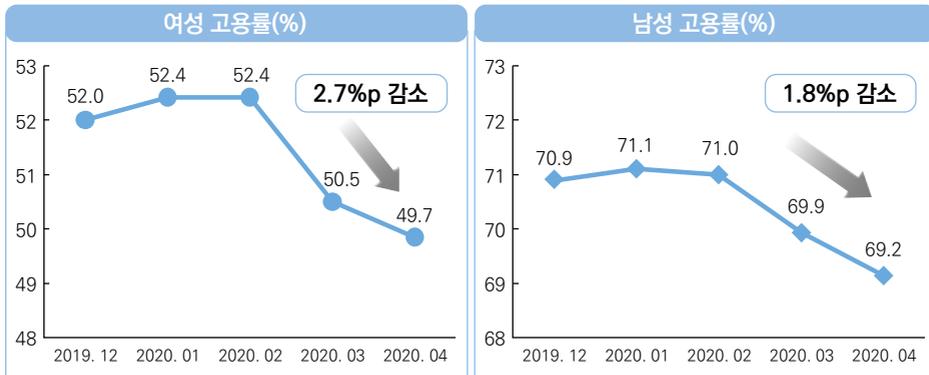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전후의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의 2020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공식화된 2020년 2월과 4월 사이의 여성고용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여성고용 변화는 전염병대유행이라는 재난이 여성 일자리에 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뿐 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여성고용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주요 고용지표로 본 2020년 2~4월 여성 노동시장 변화

우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남성과 여성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2020년 2월까지 상승하던 고용률이 2020년 3월과 4월 급격하게 하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12월 52.0%였던 여성고용률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52.4%를 유지하였다. 2020년 1월과 2월의 여성고용률은 2019년 연평균 여성고용률 51.6%보다 0.8%p 높은 것으로 새해 벽두부터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활기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 19 확산이 공식화된 직후인 2020년 3월과 4월 여성고용률은 급격히 하였다. 즉, 2020년 3월과 4월 여성고용률은 각각 50.5%와 49.7%로 나타난다. 2020년

* 이 글은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코로나19 대응 성별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럼, 2020.6.11.,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함.

단위: %



주: 증감은 2020년 4월 고용률에서 2월 고용률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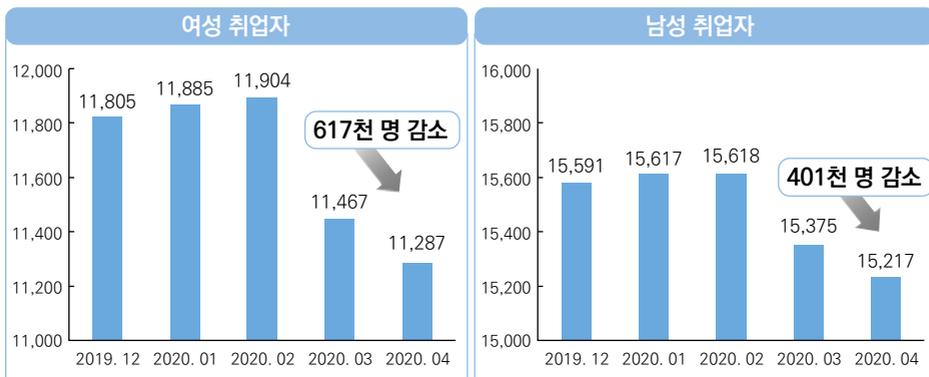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고용률 변화

2월과 4월 사이 여성고용률 감소폭은 2.7%p인데, 이것은 같은 기간의 남성고용률 감소폭 1.8%p에 비해 1.5배 큰 것이다. 고용률의 측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1.5배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고용률의 감소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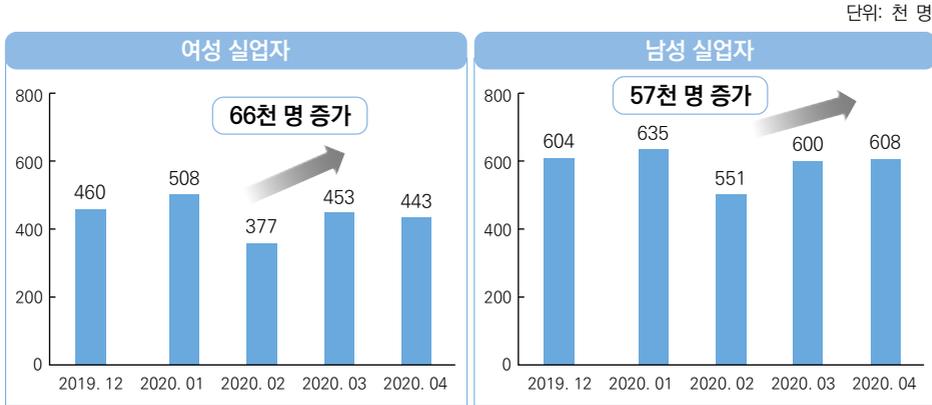
1천 180만 5천 명 수준이었던 여성 취업자는 202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1천 188만 5천 명과 1천 190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과 4월 여성 취업자 수는 각각 1천 146만 7천 명과 1천 128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2~4월 여성 취업자 감소는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1천 132만 명에 도달했던 2017년 2월 이전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그림 2]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취업자 규모 변화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합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실업자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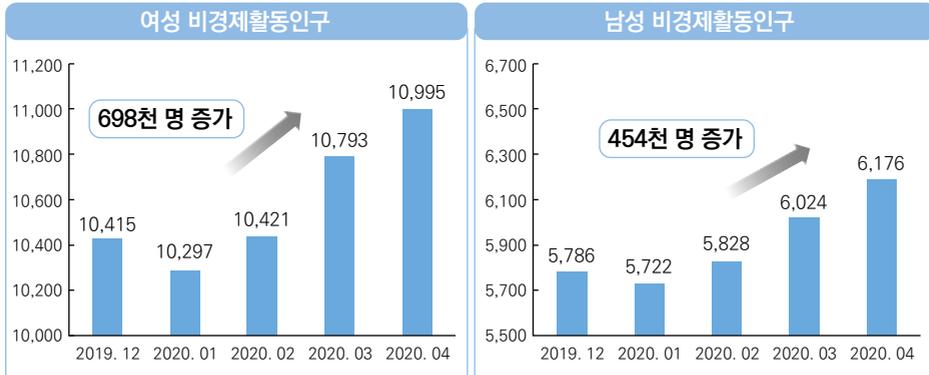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남성 취업자는 1천 560만 1천 명에서 1천 521만 7천 명으로 4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감소폭 61만 7천 명은 남성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1.5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하고 있는 사람(취업자)의 감소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실업자)과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실업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46만 명이었던 여성 실업자는 2020년 1월 50만 8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다시 37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 실업자는 2020년 3월 45만 3천 명, 4월에는 44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4월 여성 실업자 규모는 2020년 2월에 비해 6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남성 실업자 역시 2020년 2월 55만 1천 명에서 3월 60만 명, 4월 60만 8천 명으로 증가한다.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실업자가 남성 실업자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1천 41만 5천 명이었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월 1천 29만 7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1천 42만 1천 명으로 2019년 12월 수준으로 증가했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3월에는 약 1천 80만 명, 2020년 4월에는 약 1천 1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69만 8천 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3월 여성 실업자와 여성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2020년 4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하는 현상은 2020년 3월 여성 실업자 가운데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4월 사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이 있으나 출근을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회사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특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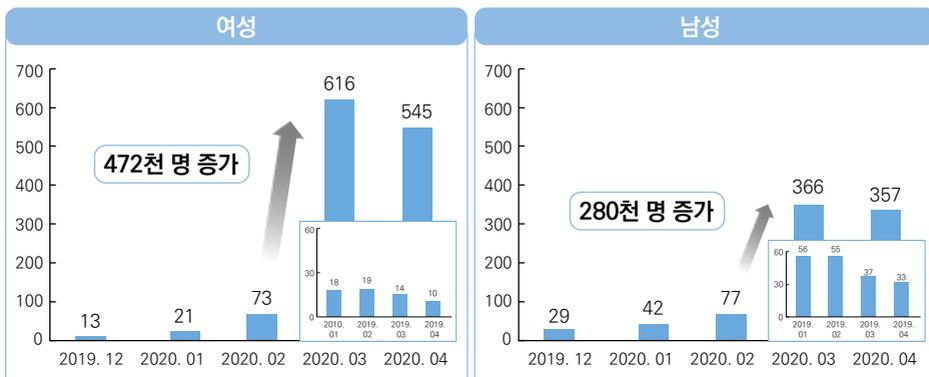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

[그림 4] 코로나19 확산 전후 남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 변화

단위: 천 명



주: 증감 인원은 2020년 4월 인원에서 2월 인원을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원자료 분석 결과

[그림 5] 코로나19 확산 전후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남녀 일시휴직자 규모 변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해 일시휴직한 경우에는 실업의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클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경우에도 지난 2월과 4월 사이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는 10만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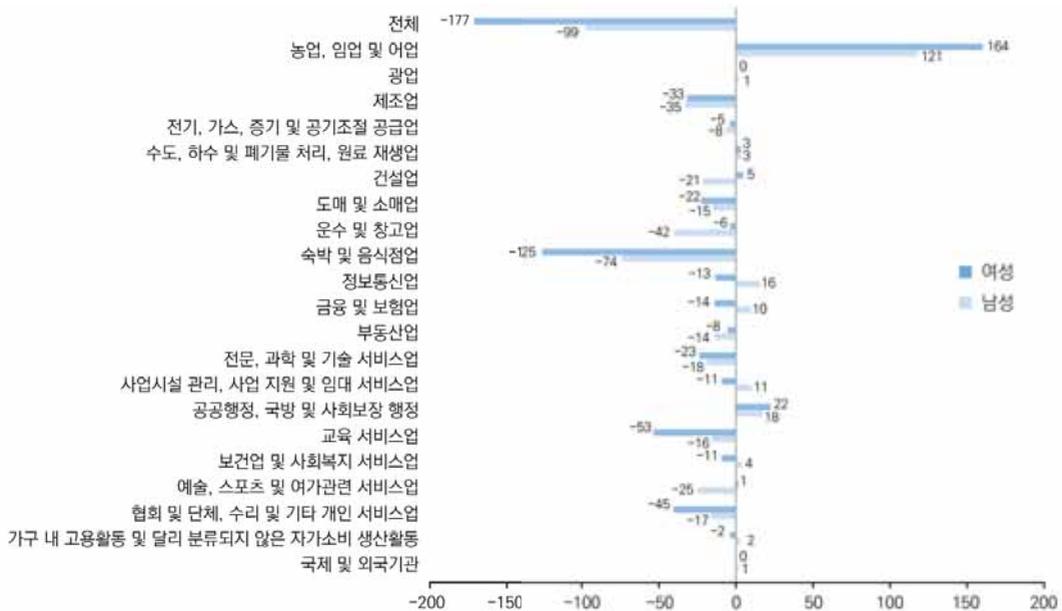
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3월과 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는 각각 61만 6천 명과 54만 5천 명으로 나타난다. 2020년 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는 2020년 2월에 비해 7.6배가 증가한 것이다. 2020년 1월과 4월 사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 증가 현상은 2019년 1월과 4월

사이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여성 일시휴직자가 2만 명 미만이었으며, 2월과 4월 사이에는 점차 감소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2020년 2월 7만 7천 명에서 4월에 35만 7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2~4월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증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3월과 4월 사이 남녀 모두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와 전체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2020년 3월 당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2020년 2~4월 여성 취업자 변화

한편 2020년 2월과 4월 사이의 여성 취업자 증감을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두 달 사이에 12만 5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교육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두 달 사이에 각각 5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대면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여성 종사자는 두 달 사이에 16만 4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는 2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6] 2020년 2~4월 업종별 남녀 취업자 증감

다음으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종사자가 두 달 사이에 13만 3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만 4천 명, 판매종사자 4만 명, 단순노무종사자 10만 9천 명의 순으로 두 달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실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서비스 종사자 7만 7천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만 8천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만 6천 명 등이 두 달 사이에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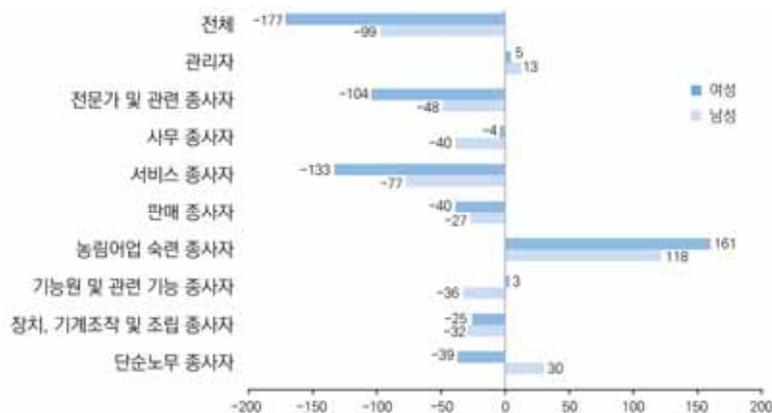
종사자규모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종사자가 5~9명인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가 두 달 사이에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종사자규모가 30~99명인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두 달 사이에 5만 6천 명이 감소하였다. 주로 100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두 달 사이에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임시근로자가 두 달 사이에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18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 12만 4천 명, 일용근로자 3만 명의 일자리가 두 달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의 여성 일자리 감소가 임시·일용직 등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두 달 사이에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각각 9만 7천 명과 3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노동을 계속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여성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여성의 일자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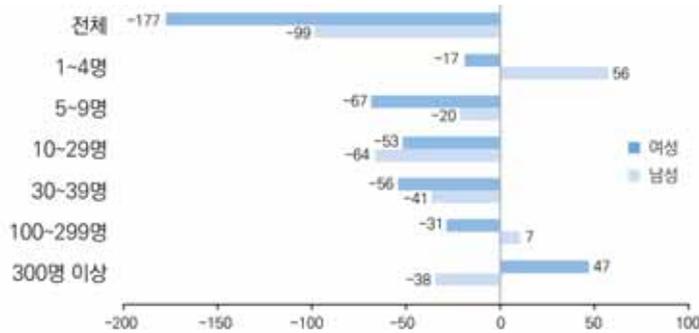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7] 2020년 2~4월 직종별 남녀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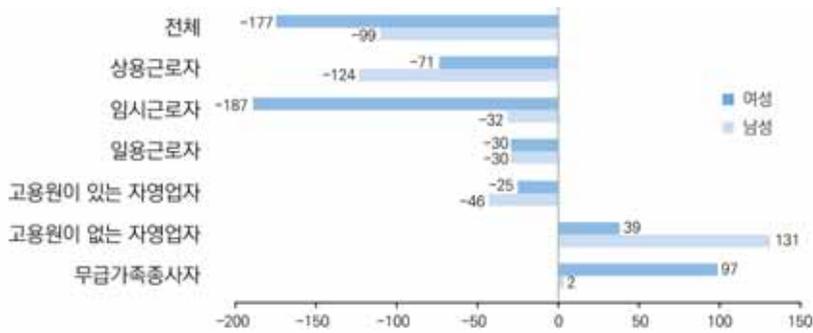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8] 2020년 2~4월 종사자규모별 남녀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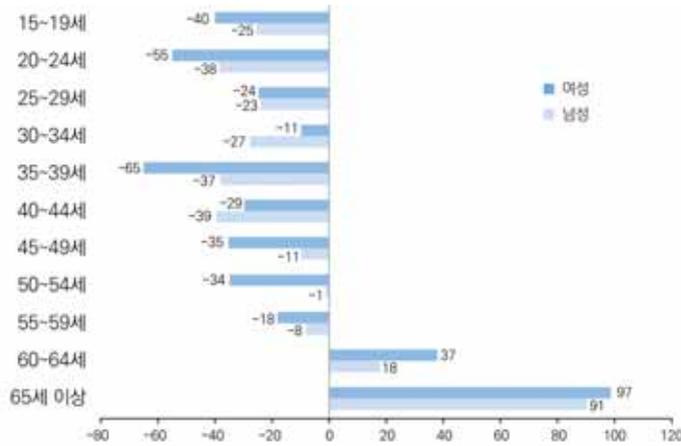
[그림 9] 2020년 2~4월 종사상지위별 남녀 취업자 증감

구체적으로 35~39세 여성 취업자가 두 달 사이에 6만 5천 명, 20~24세 여성 취업자는 5만 5천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20~2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2020년 4월 취업자는 2월 취업자에 비해 각각 7.8%p와 5.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 청년 여성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한파의 피해를 일차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직후 2개월 동안의 여성고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감소의 일차적인 피해를 여성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해고 등의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단위: 천 명



주. 2020년 2~4월 취업자 증감은 4월 취업자 수에서 2월 취업자 수를 뺀 숫자임.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그림 10] 2020년 2~4월 연령대별 남녀 취업자 증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업과 일시휴직 상태에 처한 남녀 노동자의 소득 보장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감염병대유행(pandemic)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재와 같은 고용 감소와 일시휴직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염병대유행 초기부터 전기 여성

고용 위기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여성 해고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염병대유행으로 인해 실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창출장려금 특별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접촉 확대에 대응한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새로운 형태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예방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리뷰

-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개발협력 접근 현황**

박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가나 건강보험과 중장년 여성 소외: 가입자확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김양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0년 젠더현안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KOICA-개발협력 관점에서**

김선영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젠더전문관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개발협력 접근 현황*

박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1. 들어가는 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UN에서 올해 4월에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보건 및 건강, 경제, 사회적 보호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여아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지난 5월 8일 본원에서 개최한 「2020년도 제2차 젠더와 ODA포럼」²⁾에서는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개발협력 접근 현황”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이 개발협력분야와 젠더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질 개발협력 환경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단법인 아디(ADI),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그리고 본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기고문에서는 동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논의 사항을 요약하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성인지적 개발협력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 시민 단체들의 노력을 공유하고, 향후에 개도국 젠더 관련 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 글은 본원에서 2020년 5월 8일에 개최한 「2020년도 제2차 젠더와 ODA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1) UN(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20/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en.pdf?la=en&vs=1406> (접속일: 2020.5.26.)

2) 「젠더와 ODA포럼」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본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지식 및 전문성 공유를 도모하여 왔다.

2. 포럼 발표

가.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본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포럼의 전반적인 배경을 제시하기 위해 본원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와 성 불평등에 대한 글로벌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성별 불평등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노동, 건강, 돌봄, 젠더기반폭력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 불평등 현황을 검토하였다.

동 발표에서는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이미 존재한 영역(건강, 경제 상황, 폭력 등)에서 성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 분석하였다(OECD, 2020:3-12; UN, 2020:2; UN Women, 2020:2-7).³⁾ 이어서 장은하 센터장은 코로나 사태가 초래할 주요 네 개 영역(노동, 건강, 돌봄, 폭력)에서의 성불평등 이슈를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 현황을 공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도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상업 활동이 축소되고 글로벌 및 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측됨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비공식 영역 또는 관광업, 서비스 산업 등 고용이 취약한 분야에 중단기적으로 여성 일자리 고용이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경제 축소로 인한 고용이탈 외에도 휴교로 인한 돌봄 부담으로 여성들의 비자발적 고용이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건강 분야에서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집중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축소,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⁴⁾ 팬데믹 위기에서의 의약품 공급 및 수출 제한 등을 예로 들며 성·재생산(Sexual & Reproductive health)

3) OECD(2020).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19 Crisis, OECD,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000-awfnqj80me&title=Women-at-the-core-of-the-fight-against-COVID-19-crisis (검색일: 2020.4.23.)
UN(2020.4.9).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United Nation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 (검색일: 2020.4.23.)
UN Women(2020.3.27.). Gender-Respons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Emergency Response to Recovery & Resilience, UN Women,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news%20and%20events/in%20focus/covid-19/gender-responsive-prevention-management-covid19.pdf?la=en&vs=1519> (검색일: 2020.4.23.)

4) The Print(2020, April 6). Covid-19 Will Worsen Women's Health, Income Inequality. https://theprint.in/health/covid-19-will-worsen-womens-health-income-inequality/394877/?fbclid=IwAR1Hkgh0YKEy-wX1bs2BVxmX0te_i4oAQggBg1S84xPTAZOjC3zwC9nw6Ns (검색일: 2020.4.9)

관련 예상되는 영향을 공유하였다. 또, 전 세계적으로 종사자의 70%가 여성인 보건분야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 돌봄으로 인한 여성 감염 취약성 증가와 여성이 대부분 가정 내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높아지는 감염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돌봄 분야에서는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한부모가구 또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보건·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 역시 돌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여성의 돌봄노동이 과중되어 여성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병원 등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불평등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성별분리데이터 구축,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성별 이외에도 연령, 장애, 인종 등 포괄적인 불평등 요인을 교차적으로 고려해야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나. 코로나19와 개발협력 현황 공유: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젠더·교육사업 현황 및 대응방안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송계희 선임매니저)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코로나 사태와 젠더 관련 글로벌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에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송계희 선임매니저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젠더·교육사업과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일 먼저 송계희 선임매니저는 코로나19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여성들에게 가족 내 환자, 학교 휴교로 인한 아이 돌봄 등 과다한 부양책임을 지우게 된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가정 내 돌봄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돌봄 책임이 가중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여성 청소년의 임신 증가로 인해 여아의 학교 중퇴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는 2014-2016년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외부적인 압박으로 사람들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 이어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사노동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시,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서비스 우선, 성생식건강 서비스(예: 모자보건 서비스, 성교육, 위생키트 등)의 지속적인 제공, 여성과 여아의 권리증진 등 다양한 성인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

여 대처 중이다.

이어서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진행 중인 스쿨미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사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집단 모임이 금지되어 단체의 대부분의 사업활동(예: 교사교육, 학부모 모임, 방과 후 학습활동 등)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이며, 학습교재 및 자료 조달, 학교시설보수가 지연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자 보호처가 되었던 학교가 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장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과측정 불가를 비롯하여 추후 사업활동, 예산, 지표 등의 대대적인 수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사업수행과 코로나19 대응활동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SNS 및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협의체와 코로나 현황 관련 정보 공유, 관련 인식강화활동, 학대아동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 설문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활동 외에도 현지 상황에 맞는 인프라를 활용한 원격학습, 소통채널 구축, 성인지평가를 통한 코로나19의 젠더적 영향과 여성 및 여아의 니즈 파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다. 로힝야 난민캠프 내 코로나19 성인지적 접근 현황 (사단법인 아디 방혜선 프로젝트매니저)

이어진 세 번째 발표에서는 사단법인 아디 방혜선 프로젝트매니저가 아디의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캠프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디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난민캠프 내 코로나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캠프는 제곱킬로미터(km²) 당 40,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물이 부족하여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유했다.

이어서 위생시설, 의료 보건, 정보, 생계 및 식량안보, 젠더기반폭력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로힝야 난민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위생시설 분야에서는 로힝야 난민여성은 기존에도 위생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치안, 폭력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시설사용제한, 긴장도 증가 등의 문제로 위생시설 사용의 어려움이 증가했다. 또 기존에도 부족했던 위생 및 월경용품 지원이 줄어들었으며, 개인 위생수칙

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주로 물기기를 담당하던 여성과 여아의 무보수 가사노동 및 위협에 대한 노출이 증가했다.

두 번째 의료보건 문제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던 로힝야 난민 여성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추가적인 제약이 생기면서 성·재생산 보건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출산, 피임, 출산전후 관리에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부족, 관련 루머 확산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방글라데시 정부의 캠프 내 모바일 네트워크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4월 이후 모바일 네트워크를 개방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 및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제한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정확한 정보 검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난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증가하며 다양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그 예로는 코로나19는 로힝야 여성들이 종교적 규범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알라신의 처벌이라고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디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로힝야 여성 및 로힝야 활동가 네트워크 대상으로 전화를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루머 사실확인 및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혜선 프로젝트매니저는 정보 수집, 배포 등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생계 및 식량안보 영역에서는 캠프 봉쇄로 인하여 인도지원 단체로부터 지원이 대폭 감소되어 식량소비가 증가하였는데, 로힝야 여성의 경우 관습상 남성이 식량소비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젠더기반폭력과 관련하여 난민캠프 내 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하던 “여성친화공간(Women’s Space)”이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한 조치로 폐쇄되면서 기존에 여성들에게 제공되던 폭력관련 심리지원, 폭력 사건보고의 원거리 진행 등으로 여성의 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폭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사건대응지원, 핫라인 구축 등의 대응지원이 실행중이다.

방혜선 프로젝트매니저는 로힝야 난민캠프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젠더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로힝야 여성들의 지원센터 직접 운영, 여성그룹 내 심리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네트워크 강화,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현황조사, 실행 및 모니터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라. 코로나19와 한국 시민사회 개발협력 현황 공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HnD 사업부 이경주 과장)

제2차 젠더와 ODA포럼의 마지막 발표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경주 과장이 코로나19와 한국 시민사회 개발협력 현황을 발표했다. 이경주 과장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코로나19 관련 활동을 공유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는 현재 인도적지원사업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기관의 대응 활동을 파악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한 직후 개발협력사업 및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제안을 위한 아젠다 발굴, 코로나19 대응 핵심 메시지 선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KCOC는 협의회의 회원단체 지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현장 소식을 수집하여 정보를 취합·정리하여 기관 웹사이트, SNS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정리하여 정보를 재배포하고 코로나19 대응 주제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KCOC는 “COVID19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현장매니저가 있는 국가에서 매회 특정 주제를 가지고 라디오 콘텐츠를 녹음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KCOC는 코로나19 대응 활동 중 하나로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호소문 또한 발표하였다. 대정부 호소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자원 마련 및 지원, 외교가 아닌 수요에 기반한 최빈국 및 취약국가 우선 지원, 특별 자원 마련 및 지원체계 수립, 정부정책에 의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의체 구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시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인도주의 원칙 및 인권기반 접근 등 핵심가치를 준수하며 최대한 수원국의 역량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회원 단체들의 동향을 공유하였는데, 기관 및 인력 운영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활성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현장 사업 운영에서는 사업국 파견 인력 중 인턴, 봉사단원 등의 경우 일시 귀국 혹은 철수를 시행하였고 시니어 인력에 대해서는 축소 운영하되 현장에서 향후 대응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이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대응으로는 사업 현장 인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운영 축소 및 폐쇄 등 현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단체들은 해외 사업에서 웨비나활용, 지역사회 리더를 통한

간접적인 자원 배분, 위생시설 개선 및 증설, 코로나예방 키트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원국의 개발 및 인도지원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의료 접근성 저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추진력 저하 등의 우려를 공유하며 인도주의 원칙 준수와 필요성과 현지 자원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3. 나가는 글

「2020년도 제2차 젠더와 ODA포럼」은 한 시간 넘게 계속된 발표에 이어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조혜림 센터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조혜림 센터장은 코로나 사태는 개발협력분야에 있어 유례없는 큰 위기로 다가왔으며 이로 인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성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젠더, 교육등의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불평등 문제해결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개발협력주체들이 그동안 계속 시도하였으나 실천이 쉽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의 현지 자원 활용, 주인의식(ownership) 도모와 현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동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원이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개최한 첫 대면회의였다.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기관별 사업내용과 대상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여성과 여아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돌봄노동, 젠더폭력 등 여성들이 겪고 있던 기존의 성차별적인 문제가 가시화되고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에 초점을 둔 코로나 19 대책에 밀려 젠더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포럼은 젠더분야의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실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동 포럼을 통해 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 상황에서 심화되는 성차별,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코로나19 대응책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현장-사업 전문가 외에도 더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가나 건강보험과 중장년 여성 소외: 가입자확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짚어지게 가난한 어떤 가족에게 인삼 한 세트가 선물로 들어왔다고 치자. 가족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가족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한 엄마에게 진하게 달여 드릴 것인가, 매일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아빠의 몸보신을 위해 달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큰 솥에 물을 한가득 넣고 푹 고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 사발씩 들이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얼마아타선언에서 “모든 이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을 천명한 이래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WHO, 1978). 지위고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합의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개념으로 발전했다. UHC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경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Kutzin et al., 2017). UHC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닥쳤을 때, 경제적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건강보장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재정적 부담없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사적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UHC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가난한 농촌가족의 건강보장 수단인 건강보험 가입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제한된

* 이 글은 김양희·김치완 (2018), “가나 농촌가족의 건강자원 재분배와 정책적 함의”,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1호, pp. 69-97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했다.

경제자원을 지닌 가족이 어떤 기준에 따라 건강자원¹⁾을 분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외된 가족구성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예로 든 인삼을 건강보험으로 바꾼다면, 몸이 아파 건강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지, 가족 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아서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 전부가 평등하게 가입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II. 가족과 재분배

복지국가 이전에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 왔다. 학자들은 가족의 복지 기능이 국가나 시장의 역할보다 강조되는 경우를 '가족주의'라고 일컬었다(에스핑 앤더슨 저·박시종 역, 2007; 양옥경·김소희, 2001: 68). 가족은 구성원 간 경제적 재화를 생산, 공유, 재생산하며 지속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한정된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가족 내에서 입지가 취약한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기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들은 환자 및 노약자 돌봄 역할을 전담하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Kittay, 1999). 여성들이 처한 가족내 불평등은 성차별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가족관계에서 분배원칙이 적용되는 정도와 우선순위가 가족마다 다르고 주장한다. 이여봉·김현주(2014)에 따르면 가족 내 자원이 제한돼 있을 때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역할이 누군가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자원 및 역할분배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들었다. 분배정의란 자원이거나 역할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평등(equality), 형평(equity), 수요(need)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우선으로 여길 때 사람들은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생산적인 노력을 격려하고자 할 때는 형평에 따라 분배하며, 구성원 중 누군가의 상황이 어렵거나 보살핌을 필요로 할 때는 수요원칙을 우선시한다(이여봉·김현주, 2014: 2-5). 이런 점에서 가족 내 분배 정의가 건강보험이라는 건강자원

1)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을 편의상 '건강자원'이라고 불렀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사적 이전이 아니라 자원의 재분배로 보려는 이유는 미래의 건강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의 소득을 보험자(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게 이전함으로써,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미래 건강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분배에서도 적용된다면 정책에 참고 및 보완할 함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NHIA), 한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학계 등이 협력 실시하고 있는 ‘가나 건강보험협력사업’ 가운데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지역가입자확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가나 농촌가족의 건강보험 가입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III. 가나 건강보험 시범사업

1. 가나 건강보험 현황

한국을 비롯해 사회건강보험체제를 선택한 많은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공식부문)와 지역가입자(비공식부문)로 구분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나 건강보험 역시 공식부문 가입자와 비공식부문 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가나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이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 NHIA)을 실행기관으로 두고 UHC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Agyepong et. al, 2016).

전국민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한 한국과 달리, 가나 건강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경우 강제 가입방식이 적용되지만 비공식부문의 경우 임의가입제²⁾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별로 차등을 둔 보험료와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촌 비공식 부문 가입자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연간 7.2세디(약 미화 1.25달러)³⁾에서 48세디(미화 약 5.34달러)를 차등 납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장현갑, 2016). 가나 근로자의 약 88%가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공식 부문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장현갑, 2016: 7-8). 가나 정부는 8세미만 아동, 7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극빈층 등 비공식 부문의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가나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40%이며 그중 극빈층이 25%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빈곤층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강보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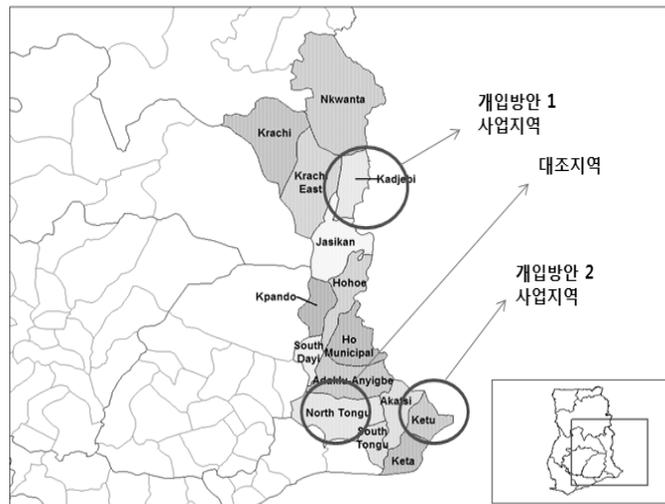
2)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 전 국민 강제가입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제도로 보험혜택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격을 가구 내 각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법 76조 3항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에게 부여되고 세대주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는 가족 구성원이 납부해야하는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3) 2020년 5월 19일 현재 1달러당 5.75세디 환율 적용

가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8%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지역가입자가 95.5%를 넘고 직장가입자는 4.5%에 이른다. 이들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면제 대상인 빈곤 및 취약계층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5.5%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한국 보건복지부와 가나 건강보험청은 지난 2016년 건강보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목적은 농촌지역 비공식부문 가입자를 확대하여 역선택⁴⁾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수혜자를 늘리며, 재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가나 볼타지역 북부의 카제비(Kadjebi)에서는 ‘그룹단위 가입자 확대’를, 볼타지역의 케투노스(Ketu North)에서는 ‘건강보험 홍보 및 교육’ 등 두 가지 개입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Kadjebi NHIA office, 2017a; 2017b; 2017c). 노스통구(North Tongu)를 대조지역으로 두고 위 두 지역과 비교하였다. 시범사업 지역 위치는 아래와 같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그림 1] 볼타 시범사업 지역 지도

4) '역선택'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에서 역선택이란 건강한 사람은 가입을 꺼리고 환자나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이 가입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보험사는 역선택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 또는 사고경험 있는 사람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공적보험에서는 최대한의 가입자 풀(pool)을 만들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다.

2017년 현재 가나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시범사업지역인 볼타(Volta)주 농촌 주민들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보험카드 발급비 3세디(Cedi)와 보험료 22세디를 합쳐 25세디(갱신시에는 22세디)를 납부한다. 8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험료는 무료지만 카드 발급비(3세디)와 등록비(5세디)를 합쳐 8세디(갱신시 5세디)를 납부해야 한다. 그 외에 8세 이하 어린이와 극빈자 대상 의료급여인 LEAP가입자는 무료이고,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되면 1년간 무료 혜택을 받는다. 아래 표는 시범사업 지역의 지역가입자 가입자격과 보험료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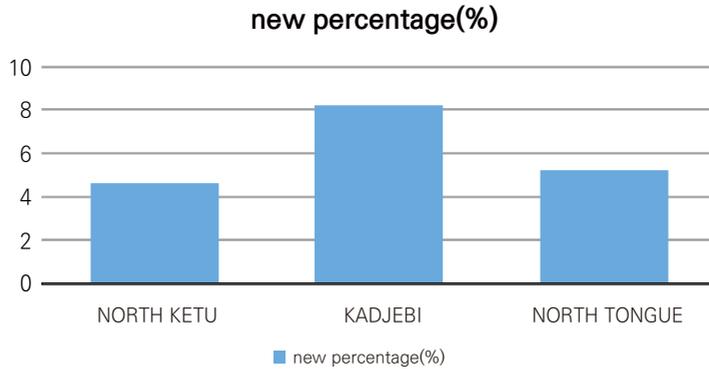
〈표 1〉 가입지역 지역가입자 가입자격 및 보험료

대상	신규	갱신
성인 (18세 이상)	카드발급비(3) + 보험료(22) = 25Cedi (\$ 4.35)	보험료 22Cedi (\$ 3.82)
청소년 (18세 미만)	카드발급비(3) + 등록비(5) = 8Cedi (\$ 1.39)	등록비 5Cedi (\$ 0.87)
극빈층	무료	
8세 이하 어린이	무료	
임산부	한시적 무료(임신 확인 후 1년 간)	

출처: 저자 재구성

카제비 지역 전체 가입자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비공식부문 가입자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공식부문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이 지역은 인구 6만 8,378명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지역이지만 2016년 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인구가 지역 인구의 48%에 이른다. 이는 카제비 지역 인구의 2배 가까운 인구를 가진 대조지역인 노스통구(인구 15만 1,000명) 건강보험 가입율이 32%인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모니터링 실시 전달인 2017년 4월까지 3개 지역의 신규 가입자 수를 비교해보면 카제비 지역의 신규 가입율은 8.1%인 반면, 케투노스 지역 가입율은 5.2%, 대조지역인 노스통구의 신규 가입율은 4.5%로 나타나 카제비 지역 가입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갱신율도 시범사업 지역이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카제비 지역의 갱신율은 20.6%, 케투노스지역 갱신율은 17.6%, 노스통구 지역 갱신율은 1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신규 가입율이 아직 10%대에 못 미치고 갱신율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시범지역이 대조지역보다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것은 분명하다.



출처: 저자 재구성

[그림 2] 개입지역과 대조지역 신규 가입자 규모 비교

지역가입자확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단체가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5건의 단체 가입이 성사됐는데, 3건은 학교 단체 가입이었고 2건은 근처 무슬림 커뮤니티의 단체 가입이었다. 이 5건의 단체 가입은 모두 지역 NGO와 지역 독지가가 등록비를 대납했기에 가능했다.

학교 단체 가입의 경우 카제비 지역의 NGO가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처 고교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가입시킨 경우였다. 상대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저조했기 때문에 NGO가 여학생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여학생들이 가족내 건강자원 재분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NGO와 독지가의 지원으로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시간에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선단체나 독지가의 지원 우선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건강권 문제를 우발적인 조건에 놓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민수, 2015:188).

IV. 빈곤 가족의 건강자원 재분배

1. 빈곤과 가족 수

특이하게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위 기간 동안 가족단위 가입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사업팀은 그룹단위 가입자 확대를 위해 5인 이상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 5인 초과 구성원부터 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가입한 경우는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보험료와 등록비가 가난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보통 4명이상, 많으면 6~7명의 자녀를 가진 농촌 가족에서 부모 2명에 자녀 4명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25% 할인을 받아도 75.8세디(약 14달러)⁵⁾가 필요하다. 여기에 성인 1명이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 할인을 받아도 18.75세디씩 증가한다. 부모와 자녀 4~6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동시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에 대략 70~90세디(13~16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5명, 부모 2명, 조부모 2명으로 구성된 9인 가족이 가입하면 4명이 25% 할인받아도 약 115세디(약 20달러)를 내야한다. 가난한 농촌가족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족 구성원 전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지역이라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기획한 것이므로, 시범사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가족단위 건강보험 가입이 더욱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개 20대의 경우 자녀 2~3명을 갖고 있었고, 40대와 50대에는 자녀수가 6~7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상당했다. 남편과 부인, 그리고 8세 이하 어린이 1~2명으로 이뤄진 가족의 경우(특히 부인이 임신부인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적어서 가족 전체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 전체가 가입한 사례가 적었다. 대신 가족 내에서도 아이들만 가입시키거나, 남편과 자녀들만, 또는 부인과 자녀들만 가입하는 식으로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2. 가족내 건강자원 재분배

시범사업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앞서 이여봉·김현주(2014)가 사용한 가족 내 분배의 기준을 차용하여 건강자원의 재분배 행태를 분류해 보았다.⁶⁾ 면접자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행태를 1)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당장 급여혜택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먼저 할당하는 ‘수요’에 따른 재분배, 2) 가족 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거나 가장 생산성이 높은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기여도/생산성’에 따른 재분배, 3) 구성원들 간에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평등’에 따른 재분배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5) 성인 2명과 8세 이하 어린이가 없는 청소년 자녀 4명을 기준으로 계산함.

6) 이여봉·김현주(2014)는 가족내 분배 기준을 수요, 형평, 평등의 3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글에서는 가족내 건강자원 재분배를 수요, 기여도(생산성), 평등의 3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형평의 기준을 가족내 기여도/생산성으로 구체화시켜 적용했다.

1) 수요에 따른 재분배

홍보 및 교육 사업지역인 케투노스의 웨타(Weta) 마을에서 만난 엘리자베스(Elizabeth, 30세)는 남편과 4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일원이다. 그녀는 2009년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가입자격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자녀 4명도 모두 가입돼 있다. 반면, 남편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녀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임신부 무료 혜택을 받아 보건소에서 막내자녀를 출산한 이후다. 그녀는 안전한 출산을 경험한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족은 남편을 제외한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가입돼 있는 경우로써, 가입자 부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필요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임신, 출산을 통해 의료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가족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재분배한 경우로 분류했다.

카제비지역 크폰카(Kponkpa)마을에서 만난 콤라(Komla, 35세)는 부인과 자녀 4명들 둔 가장이다. 이 가족의 경우 부인과 자녀 2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콤라와 나머지 2명은 가입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녀 2명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어 가입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건강보험 지역사무소가 마을에서 약 52km 떨어져 있어 너무 멀어서 가입하려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⁷⁾ 그에게 있어 건강보험은 “가입하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콤라의 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가족 내에서 건강자원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건강자원이 필요한(need) 어린이, 임신부, 노인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줌으로 수요에 따른 재분배로 분류했다.⁸⁾

카제비의 아사토(Asato)고등학교에서 만난 여학생인 주네브(Geneve, 19세) 가족의 경우도 수요에 따른 건강자원 재분배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다. 주네브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의 일원이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엄마(55세)는 2016년에 먼저 가입했고 자녀들은 가입하지 못하다가 올해 지역 NGO의 보험료 대납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엄마는 올해 건강보험을 갱신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의 부재와 엄마의 투병으로 상당히 빈곤한 가운데, 투병 중인 엄마에게 가장 먼저 건강자원을 재분배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갱신을 하지 못해 가족 구성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가장 필요한 엄마가 현재는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7) 콤라의 말대로 카제비 지역은 건강보험 사무소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건강보험 지역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을 와서 위성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가입을 추진했던 곳이다.

8)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부른다. 이 역선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선택을 막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민간보험사들은 유병력자들의 민간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2) 기여도/생산성에 따른 재분배

카제비 마을에 살고 있는 캐서린(Catherine, 34세)은 남편과 함께 자녀 5명을 두고 있다. 남편과 애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적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임신부 무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녀를 2명 낳았고 가입 후 2명을 더 낳았는데, 막내를 낳은 후부터 자격 중단 상태다. 임신부 무료 혜택이 끝나면서부터 건강보험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권한이 남편에게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족의 경우는 가장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고 가족 내에서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남편과 미래에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 자녀들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여도와 미래의 예상 기여도에 따른 재분배로 구분했다.

웨타(Weta) 마을에서 만난 아고하(Agoha, 65세) 노인은 올해 65세로 부인 2명과 8명의 자녀로 구성된 대가족의 가장이다. 이 가족은 그와 자녀 8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부인들은 가입돼 있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건강보험료를 주지 않아서 2명의 부인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고하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가슴통증과 기침으로 근처 보건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보건소에 갈 때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고하 같은 경우는 가족내 기여도와 생산성에 따른 재분배,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과 자녀들에게 건강자원을 재분배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동시에 몸이 아픈 자신을 위해 가입했다는 점에서 수요에 따른 재분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에서 2명의 부인은 앞의 캐서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강자원 재분배에서 소외돼 있다.

만약 가족 내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과 기여도에 따라 재분배된다면 즉, “누가 밖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가”, “누가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가”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캐서린과 아고하의 부인들 같은 경우는 건강자원 재분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녀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을 돌보느라 밖에서 일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가나 농촌의 현실에서 여성들이 농사일 외에 밖에 나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여성들은 농사를 비롯해 가사노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노동의 가치는 가족내외에서 폄하돼 있다. 따라서 가족내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 혹은 기여도에 따라 재분배된다면,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기 여성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높다.

3) 평등에 따른 재분배

면접대상 가족들 가운데 평등에 따른 재분배의 형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3~4명으로 비교적 적어 부담이 덜하거나,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비교적 젊어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웨타(Weta)마을 면접대상자 중 한 명인 조셉(Joseph, 28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 아크라(Acra)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인과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08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드물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입을 유지해오고 있다. 조셉은 “보건소를 이용할 때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가 9년 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서는 드물게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으로, 가족의 건강자원을 위해 평등하게 재분배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인 피터(Peter, 46세)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후 중요성을 느껴 가족 전체를 가입시켰다. 그는 부인과 본인,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 1명을 제외한 식구 5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피터는 건강보험 가입 첫 해인 2013년에 근육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혜택을 경험했다. 그는 미래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격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다.

카제비지역 아사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대니얼(Daniel, 17세)은 부모와 7명의 형제자매를 두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아버지는 전립선 질환으로, 어머니는 폐질환으로 병원을 다닌 적이 있어서 건강보험의 필요를 느껴 가족 모두 가입했다고 밝혔다. 대니얼은 자신의 집이 “상당히 괜찮은 형편”이라며 지역에서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그의 친구인 데이비드(David, 17세)는 가나 농촌에서 보기 드물게 가족 구성원이 부모를 포함해 3명뿐인데 전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 학생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이유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불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꿈은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불임을 고쳐주는 것이다. 대니얼과 데이비드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로서 평등에 따른 건강자원 재분배의 경우로 분류했다.

V. 건강자원 재분배의 기준과 가치: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

가나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행태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8세 이하 어린이는 보험료와 등록비가 무료지만 9~17세까지는 소정의 보험등록비(8세디, 갱신시 5세디)를 납부해야한다. 자녀가 4~7명이라면 이들의 보험등록비는 32세디(갱신시 20세디)~56세디(갱신시 35세디)에 이른다. 위의 금액이라면 성인 한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면접대상자들은 기꺼이 자신 대신 자녀들의 건강보험을 등록 또는 갱신하고 있었다.

일레로 카제비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여학생 사라(Sarah, 16세)는 지역 NGO가 이 학교의 고2 여학생 31명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주어 가입할 수 있었다. 사라는 엄마(36세), 아빠(47세), 형제자매 4명으로 구성된 6인 가족의 일원인데, 부모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자녀들만 가입돼 있다. 앞서 언급한 주네브의 가족도 현재는 자녀들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가난한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가장 “미래가 중요한 구성원(아이들 또는 임신부)”이나, “주소득원인 구성원(18세 이하 자녀 또는 남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레로 이마누엘(Immanuel, 55세)는 슬하에 자녀 7명과 손자 5명을 둔 대가족의 가장이다. 이 가족에서 자녀 7명과 손자 5명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마누엘 본인은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든 늙고 쇠약한 모습이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뜻을 가족의 부양을 이끌어갈 후손들을 위해 양보하고 있었다. 그의 경우를 통해 가족 내 건강자원의 재분배가 현재 또는 미래에 가족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투노스에서 만난 아모스데쿠(Amosdeku, 59세) 노인도 부인과 성인 자녀 3명을 둔 가장이었다. 그는 2015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긴 했지만 돈이 없어 이듬해부터 갱신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탈장증세로 보건소에 간 적이 있고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마을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 알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역시 자신은 가입하지 못해도 자녀와 손자들의 가입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농촌의 40~60대 주민들이 중·장년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아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자녀들에게 건강자원을 재분배하는 이유는, 이들을 미래에 가족의 부양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고 건강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족의 재생산과 미래를 보장받고자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녀들을 미래에 가족을 이끌어 나갈 주체들로 보고 이들의 건강만큼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입기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도 그녀들이 출산을 통해 가족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가입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앞서 아고하와 캐서린 남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건강자원 재분배에서 우선순위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빈곤한 가족의 제한된 건강자원은 첫째, 미래에 가족 부양을 이끌어갈 '미래의 자원'인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재분배되고, 둘째,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내 재생산을 이끌어갈 가입기 여성들에게 재분배되며,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큰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재분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빈곤한 가족의 한정된 건강자원은 미래 또는 현재에 생산 또는 재생산을 통해 가족을 지속시켜나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맡을 사람들을 기준으로 재분배되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가입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거나, 구성원 수가 3~4명으로 적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하거나, 부모의 나이가 젊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서 발견되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서은국, 2014)이라는 진화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 역시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미래 세대를 재생산하거나 높은 생산성으로 세대를 존속시켜 나갈 구성원에게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내 기여도/생산성에 따른 재분배와 수요에 따른 재분배는 임신, 출산이 끝난 중장년기 여성들과 남성 노인들을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할 우려가 높다. 이들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기여도나 생산성이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캐서린, 아고하의 부인, 주네브의 엄마, 사라의 엄마, 아모스테쿠의 부인 등 가족내 중장년 여성의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갱신 중단은, 모든 이를 위한 건강 보장이 라는 UHC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주네브의 사례와, NGO의 여학생 건강보험료 대납 사례처럼 가족의 자원이 제한적일 때 소녀들의 가입이 먼저 제한되는 것 역시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이 건강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연령대인 40~60대 중장년 여성과 남성 노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린이와 청년 가입자만 증가하고 있는 가입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나 건강보험 재정은 간접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전체 재정의 70%를 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내고 있는 간접세를 통해 보험재정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혜택을 필요로 하는 농촌의 중장년층이 소외돼 있는 상황은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장년 여성, 노인 등 취약한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입 구조 개편을 비롯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 2016. 「가나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 추진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미간행.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 양옥경·김소희. 2001.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가족주의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6: 65-91.
- 에스핑 앤더슨. 2007. 박시종 역.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성균관대 출판부.
- 이여봉·김현주. 2014. “가족 내 분배정의 원칙의 적용과 모-자녀 관계의 질: 중학생 및 대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48(2): 1-34.
- 장현갑. 2016.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수준과 본인부담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불용의: 가나 볼타지역에서 조건부가치 측정 연구.” 서울대 의대 박사학위 논문.
- 정민수. 2015. 「국제보건과 질병역학」. 동덕여대 출판부.
- Agyepong, Irene·Daniel Nana Yaw Abankwah·Angela Abroso et al. 2016, “The “Universal” in UHC and Ghan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policy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dilemmas of a lower middle income countr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6:504.
- Kadjebi NHIA Office. 2017(a). Kadjebi district summarized new registration. Ghana NHIA.
- _____. 2017(b). Kadjebi district active membership.
- _____. 2017(c). Kadjebi district analysis.
- Kittay, Eva.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 Kutzin, Joseph·Sophie Witter·Matthew Jowett et al. 2017. Developing a National Health Financing Strategy: A Reference Guide. WHO.
- WHO. 1978. Declaration of Alma-Ata. WHO.
- 사전류, “역선택”, <http://ko.wikipedia.org/wiki/역선택> (검색일: 2020. 5. 20.)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0년 젠더현안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KOICA-개발협력관점에서

김선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젠더전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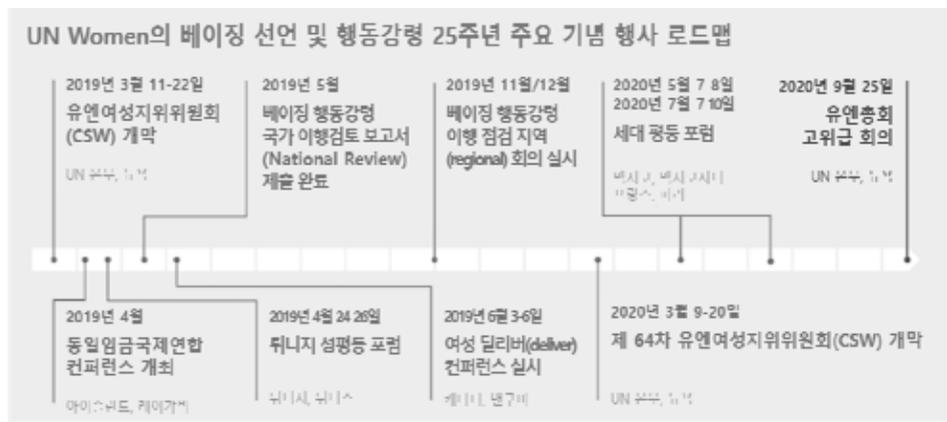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올해의 이슈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기인한 사상초유의 사회 경제적 영향이다. 코로나19로 대변되는 감염병 자체가 야기하는 성불평등한 영향들 역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들이 돌봄 노동의 추가적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부분과 집안에만 갇혀있어 국가를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올해가 국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성평등 이행수준을 점검하고 각국이 점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기념비적인 해임을 감안 하면,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타격을 크게 받는 분야가 오히려 젠더분야임을 간과할 수 없겠다. 오랫동안 논의되고 준비해온 2020년의 글로벌 젠더의제 역시 지난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의 전반적인 축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제논의의 장이 취소, 순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이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성평등 달성의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코로나 19 극복에 있어 성불평등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국제의제 및 국내외 젠더와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젠더와 개발협력: 국제적 차원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 112주년과 함께 성평등 달성을 위한 중추적 해로써 전 세계 성평등 달성 이행의 기준점이 되어온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2000년 분쟁하에서 대규모 성폭력 사태로 인해 결의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여성·평화·안보의제' 20주년이자, 유엔 내 성평등 달성 담당기구인 △유엔위민

(UN WOMEN)의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각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 행사들을 공동 진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일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순연, 축소되었다.

- 2020.03. 제6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를 통한 베이징 선언의 이행점검-전면축소 진행
- 2020.07. 세대평등 포럼(Generational Equality Forum) - 21년 상반기 순연
- 2020. UN Women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 미정
- 2020. SDGs 채택 5주년 기념행사 - 미정
- 2020.10.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여성, 평화, 안보) 채택 20주년 기념행사 - 현재 10월 마지막주 예정,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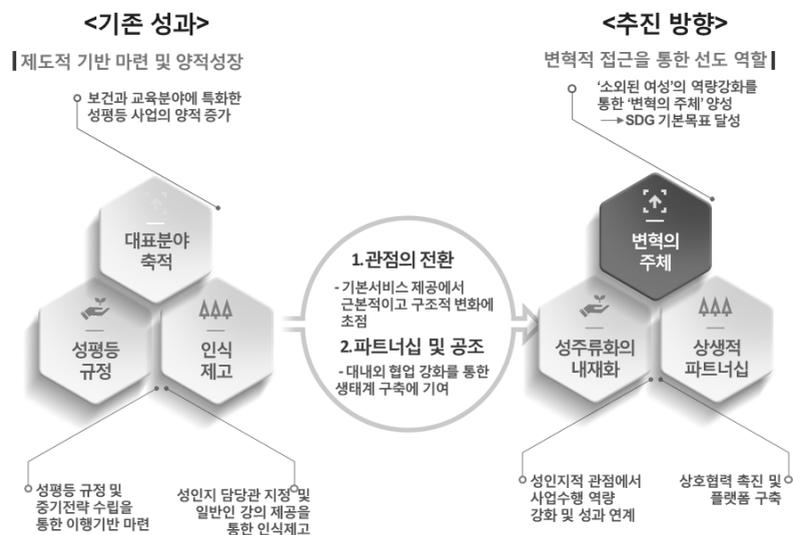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젠더의제 일정(2019~2020)

특히 올해는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25년 만에 국제적 차원의 여성포럼인 ‘세대평등포럼 (generation equality forum)’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 1분기로 순연된 상태이다. 동 포럼은 차세대 여성 인권 행동가들과 베이징 행동강령 채택의 주역이었던 세대인 20년 전 여성 행동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성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① 젠더기반폭력, ② 경제 분야에서의 정의와 권리, ③ 자기 주도의 성·재생산 권리, ④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운동, ⑤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⑥ 여성운동과 리더십의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이행발표 및 확산이 예정되어 있다. 비록 순연되었지만 ‘활동가 정신, 여성주의 연대 및 청년 리더십의 힘’을 주제로 열리는 동 행사를 통해 시민사

회와 국제기구, 각국이 함께 연합하여 ‘여성주의 행동계획(Feminist Action Plan)’을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기관인 KOICA 역시 단순 참가를 넘어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의 노력과 향후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0년 젠더와 개발협력: 국내현황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ODA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Peace)·번영(Prosperity)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의 가치를 기관의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SDG5(성평등 달성), SDG13(기후변화 대응), SDG16(평화)로 대표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 개발도상국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사람(People)’의 중요성에 포함된다. KOICA는 SDG5 이행을 기본 목표로 하며, 특히 여성이 가정, 마을, 사회, 국가차원의 ‘변혁의 주체(agent of change)’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중기 이행계획안(2019-21)’¹⁾을 수립하였다.



[그림 2] KOICA 중기이행계획안(2019~2021)

1) KOICA, 성평등 제고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중기 이행계획안(2019-21) 결재문서(2018.12.28. 대외공개)

기존의 취약계층 수혜자로서의 여성참여 및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이행하기 위해, KOICA는 2018년 유엔총회에서 SDG5 달성촉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우선적으로 유엔위민(UN WOMEN)과 세계인구기금(UNFPA)과 협력한 이후, 개발도상국의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UN기구, 세계은행, 글로벌 시민사회 등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SDG 5 Fill the GAP(Gender Advocacy Partnerships)' 이니셔티브(2020~2026)²⁾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KOICA에서 전통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는 교육, 모자보건 사업과 더불어 국제연대를 기반으로 젠더기반폭력 예방사업,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성평등 달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성과 경제:** 소외·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② **여성과 인권:** 구조적·근본적인 성불평등 원인제거를 통한 사회변화와 번영 추구
- ③ **이행 및 증거:** 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구축을 위한 성인지 역량 강화

KOICA는 해당 중점분야 사업의 기획·발굴과 이행을 통해 근본적인 사회변화와 성평등 달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Fill the GAP 이니셔티브의 발족을 통해 2020년부터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사업들이 이행될 예정으로, 2020년에는 4건, 2021년에는 8건의 사업이 발굴³⁾되었다.

① 동티모르 :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20~23)	
√ SDG5-16: 사법·보건·행동변화 등 총체적 접근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BG-KOICA 본부 기관간 젠더영향평가 도입 기획 논의중 ▶ 한국인 인력 파견 및 사업이행그룹 구성으로 성과제고 예정 	
② 케냐: UN WOMEN 북동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20~23)	
√ SDG5-13: 성평등,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여성농민을 타겟화하여 SDG5·13 통합사업 도출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조화 목표(FAO: 50만 달러 자원투입 협의 실행) 	

2) KOICA, KOICA SDG5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안) 결재문서(2019.6.24. 대외공개)

3)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예비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http://lib.koica.go.kr/>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대국민 공개). 21년 사업은 현재 예산심의 중으로 미확정인 바, 20년 확정사업을 선공개하였다.

③ 코트디부아르: UNFPA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 3차사업(20~23)	
<p>√ SDG3·5·16: 보건, 성평등, 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접근(SDG3.8) 달성, 산과적 누공의 여성인권적(SDG5.1, 16.1-2) 함의를 포함, 1, 2차 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함 	
④ 탄자니아 상가다/신앙카 주 여성 및 소녀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 사업(20~23)	
<p>√ SDG2·5·8·16: 기아해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평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및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SDG2.3), 영농업 부문 소득증대를 통한 여성농민 및 기업인의 경제적 역량강화(SDG8.3) 달성을 목표로 함 ▶ 여성과 인권(SDG16): 보건시설 내 젠더기반폭력 대응 원스톱 서비스(OSC) 및 경찰서 내 헬프데스크 구축 	

KOICA 젠더분야 사업의 이러한 변화는 SDG5에서 추구하는 변혁적인 접근(transformative approach)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단순한 여성참여와 교육제공 등의 시혜적인 관점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기관 단독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필요에 따라 증기이행계획의 이행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였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들의 일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연쇄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근본적인 인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젠더기반폭력 대응·예방사업의 이행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극복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KOICA는 개도국의 감염병 대처와 한국 민관과의 협업을 두루 포함한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구상(ABC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이행과정에서 젠더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⁴⁾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젠더와 개발협력의 시사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전 세계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젠더기반폭력은 국가를 막론하고 급증하고 있고, 여성의 돌

4)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2020.05.21.), 감염병이 일깨운 성평등의 중요성.

봄 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도 크게 다르지 않다. KOICA는 지금의 전 세계적인 초유의 상황 속에서 성불평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회연대 및 국제연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SDG5 Fill the GAP 이니셔티브'를 통한 성평등 목표를 달성 촉진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젠더와 개발' 훈련과 연구 등 과제가 많다. KOICA는 계속해서 젠더의제를 부각하고 사업발굴과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시민사회, 사업수행기관, 부처 등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구축을 위한 국내외 연대가 필수적이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ecofem)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환경연대(ecofem)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면담 중인 장이정수 상임대표

사회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지구적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상황이 여성환경연대가 말하는 생태적인 삶,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드러내 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장이정수 🗣️ 바쁘게 돌아가던 공식적인 회의들이 줄어들고, 준비하고 있던 큰 규모 행사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간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책도 좀 읽고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갖고 다시 운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회의와 행사는 줄었지만 사람들과의 연대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팬데믹이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활동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 ♣ 그간 운동적으로 제안해 온 “플러그를 뽑고, 한 박자 천천히” 느리게 살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네요.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이정수 ♣ 9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환경운동단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여성환경연대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에코페미니즘 연구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환경이슈에 관심을 가진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에코페미니즘 담론작업과 함께 환경·생태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여성운동이 왜 환경문제에 관심이 부족한지를 토론하는 전국연수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리우+ 이후 환경과 사회와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의제21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다루기도 했고, 각 생협에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생협, ‘건강’과 관련된 이슈 등 어떤 건강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도 모색해왔습니다.

2005년 즈음에는 당시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대중적인 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여성환경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랑지역에서 초록상상이라는 지역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촛불을 켜고 석유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캔들 나이트(Candle Night)’,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자기 컵을 사용하는 슬로라이프를 제안하는 ‘위더컵(WITH A CUP)’ 캠페인 등 운동가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생활운동, 환경문제가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여성 유방암 캠페인, 아토피와 같은 환경보건운동으로 관심사를 확장을 해왔습니다. 초기부터 주요 의제였던 국제연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공정 무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틔워 페어트레이드코리아가 주식회사 형태의 비즈니스모델로 만들어졌지요.

2015년쯤 다시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초창기에는 활동가그룹을 중심으로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한국사회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후 10년은 풀뿌리 여성들과 지역에서 어떤 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천하는 한편 대중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의 시도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 한국 사회에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확장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20주년을 맞아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도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 ♣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환경·생태운동의 젠더정의(gender justice) 그리고 페미니즘의 생태적 감수성을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이정수 ♣ 사실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의 패러다임에 여성환경연대가 생태주의 담론을 붙여넣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 보면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는 여성운동이 함께하는 공통의 이슈가 되었지만, 주류 여성운동이 월경하는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하는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류 여성운동과 여성환경운동이 월경을 보는 입장이 조금 달랐거든요. ‘몸’이라는 담론이 페미니즘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잖아요. 월경 자체에 대한 사회적 터부도 있지만, 페미니스트들도 월경이 사회활동이나 여성들의 평등한 일에 저해가 되고 불편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하기도 해요. 우리가 근대적인 남성성이 강조하는 ‘생산하는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받아들일 때, 아프면 쉬는, 무한히 써먹을 수 없는 몸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풀뿌리 여성들이 참여한 골프장 반대운동이나, 막개발에 반대했던 지역운동들도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모임이 흡수되거나 지역 풀뿌리운동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지, 여성운동으로 독자적인 조직화를 이루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성장주의로 달려왔던 한국 사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대안적인 삶을 상상한다거나 여성운동에 생태주의가 온전히 교차하기에는 미약하지 않았는지 그런 아쉬움과 반성이 있습니다.

사회 ♣ 여성운동의 전략 자체도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성환경연대가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에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를 시도하면서 그 틈새에서 좀 외롭지 않으셨어요?

장이정수 ♣ 엄청 외로웠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운동 우산조직에는 속해있지 않거든요. 참여회원단체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여성

운동의 교류랄까,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총회도 같이 가고 서로의 운동적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하기 어려웠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환경회의> 소속이지만, 메이저 환경단체들의 주요 의제에서 여성건강 이슈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에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발암넷) 같은 경우 아토피나 환경호르몬, 가슴기살 규제 등 화학물질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그 안에서도 환경보건 이슈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가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 남성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서 외로웠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운동 우산조직에는 속해있지 않다. 참여회원단체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여성운동의 교류랄까,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총회도 같이 가고 서로의 운동적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하기 어렵다. 환경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환경회의' 소속이지만, 메이저 환경단체들의 주요 의제에서 여성건강 이슈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이고, 남성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 ♣ 그럼에도 여성환경연대라는 생각보다 작은 조직이 이끌어낸 성과로 대중적인 영향력이나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앞서 언급한 위더컵을 포함해 공정무역이나 <마르쉐>는 여성운동이 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로 이어지는 시도이기도 한데, 자량을 좀 해주세요.

장이정수 ♣ 여성환경연대 초기 국제연대는 <동북아 여성환경회의>로 시작되었는데,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는 아시아 여성들과 손잡는 구체적인 시도였어요. 한국에서 공정무역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주로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페어트레이드코리아는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에 주목하고 이 여성들을 지원했을 때 공동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자급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서 여성들의 수공업품이나 의류 공정무역을 시도했습니다. 통해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농부의 시장 <마르쉐>는 3.11 후쿠시마 이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에 주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이 농업 자급률이 23%밖에 안돼요. 토종종자 지키기부터 여성농민운동 등 여성환경운동에서 농업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랄까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텃밭사업을 해왔습니다. 병원에서 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병원 텃밭, 옥상 텃밭, 학교 텃밭 등 도시 사람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시도를 해오다가 실제로 도시인들이 농사를 지어도 직접 요리를 해먹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귀촌한 사람들이 농사지는 먹거리들을 직접 도시민과 나누는 연결통로이

기도 하고, 사람들이 도시농부나 수공업자들과 만나는 굉장히 좋은 장터이기도 합니다.

사회 ♣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시장주의적인 인식이 급격히 강화되는 시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에코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환경운동이 대중전략을 취하면서 너무 말랑말랑한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혹시 마켓 페미니즘과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은 없었는지요?

장이정수 ♣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해 가는데 텀블러만 들고 다니면 되냐, “해일이 몰려오는데 조개 줍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텀블러’를 계기로 이전에는 질문해보지 못했던 생태적 삶에 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하자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이었어요.

연예인을 섭외해서 텀블러를 들고 사진을 찍어 홍보를 했고, 환경·생태운동이 무서운, 공포를 조장하거나 사람들의 도덕주의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활동가들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고, 운동을 힘들고 무겁게 하지 않고 작고 가볍게 하고 싶다는 활동가들의 정서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삶부터 조금씩 바꾸어나가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그런 활동가들의 내면적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걸 중요시 하고, 마르쉐라던가 페어트레이드코리아도 보면 감각적인 디자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문화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에코페미니즘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서 하는 운동은 너무 작고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자괴감이나 내부의 반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심해지는 한국사회 신자유주의를 그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농업문제와 연결, 노동과 경제체제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인 운동과 담론으로 연결하는 전망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팬시한 대중운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그걸 계기로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을 담아 참여하는 이들 스스로 직접 자기성찰을 하도록 이끄는 방식의 시도가 <에코 컨퍼런스>였을까요?

장이정수 ♣ 2016년에 처음 에코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운동이 개별적인 실천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

즘 공부모임인 <달과 나무 포럼>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시기적으로 강남역 페미사이드 사건이 발생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이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에코컨퍼런스는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살고자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발언자로 나서서 자신의 고민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모아 최근에 책을 묶어 냈어요. 「괜찮지 않은 세상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목으로요.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삶과 현장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찾아서 한국의 에코페미니즘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여성환경연대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가 “생리대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동네 마트의 매대 진열상품이 바뀌고 어떤 상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은 어떤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이정수 ♣ 한국 여성의 90% 이상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 한 명이 40년간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 그 양이 엄청난거죠. 일회용생리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초창기부터 면생리대를 쓰자 생리대를 직접 빨면서 직접 생리혈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기 몸의 건강상태를 살피자는 대안생리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바디버튼>이라는 다큐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생리통이 심한 여성이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면서 겪는 변화를 실험했을 때 생리통증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전문연구자의 도움으로 일회용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제품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40년간 일회용생리대 판매관리를 해왔지만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제기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운동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환경연대라는 개별 단체로서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서 3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당 기업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조속히 사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제도화에 따른 의도치 않은 고민도 있기는 합니다. 생리대 안전성 기준 자체가 강화되면서, 대안생리대를 만드는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규율되다 보니 거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자활사업장에서 대안생리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시설과 검사시설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런데서는 비용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른 업체들은 할 수가 없고 '한나패드'에서만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생산이 어려워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그나마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시험성적서를 안줘서 제조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여성환경연대가 최근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 중 하나가 “생리대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40년간 일회용생리대 판매관리를 해왔지만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제기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운동과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여성운동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실태조사나 표시기준 강화 같은 대처 외에 정부의 정책대응에 혹시 더 제안해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장이정수 ♣ 일회용생리대 뿐만 아니라 여성청결제나 미백화장품 등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이라는 명목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여성건강,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약처 등이 칸막이를 넘어 융합적인 공동연구를 같이 한다던지 하는 접근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피해에 관한 젠더접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의 피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과제를 설정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보스턴 연구공동체'가 의료중심의 운동에서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서 말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실제로 건강정보를 알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효능감을 높였던 방식처럼 젠더건강을 여성부나 환경부 모두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잡아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피해에 관한 젠더접근, 코로나19의 피해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공통의 과제를 설정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복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사회 ♣ 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도 함께 해오셨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성과 재생산,

건강 측면에서 보편적인 무상생리대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역·기초 지역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변화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지요?

장이정수 ♣ 아시다시피 청소년 생리대 이슈는 ‘깔창 생리대’를 계기로 복지적 접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네델란드에서도 무상생리대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고요.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보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UN공공행정대상을 받기도 했는데, 운동적인 문제 제기가 선거라는 국면과 정당의 개입이 맞물리면서 정치가 예상보다 빨리 응답해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성평등조례 개정을 통한 ‘비상용생리대’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생리대 지급, 건강권으로 가는 중간 과정일테죠. 지난 연말에는 아동청소년 인권조례의 관련규정도 개정이 되어 ‘빈곤’을 삭제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아동청소년 조건을 넘어 보편적 여성건강권으로 가는데 풀어야 할 여러 쟁점이 있지 않을까요?

장이정수 ♣ 저는 보편적인 건강권에 대해서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회용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건강권인가?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보편적 지급이 된다면 실질적인 예산의 확보 외에 지급 방식이랄지 선택의 폭이랄지 하는 방법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지적 접근을 넘어서는 건강에 대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월경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외에도 교육을 비롯해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제도화시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월경에 대한 사회교육 인식개선,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교육, 여러가지 환경문제, 플라스틱-프리 월경을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플라스틱 내지는 석유에 기반한 월경에 대한 성찰, 이런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지만 보편지급이 여성건강의 문제와 결합이 되는 운동으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성환경연대는 출발부터 개별사안에 대한 이슈화보다 담론이나 철학에도 방점을 찍어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이정수 대표님께서도 에코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이정수 ♣ 저에게 에코페미니즘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틀이라고 봐요. 리버럴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반자본주의적인 입장을 세워야 하고, 이런 급진성을 만들어가야죠. 성장 지향의 신자유주의 경제 토대 위에 모든 사회 경제 문제가 얽혀있는데, 이제 생태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제, 새로운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젠더관점의 건강운동, 풀뿌리운동, 농업이 한국의 사회 운동에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가 함께 쓴 「에코페미니즘」이 다시 번역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GDP는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경제와 사회, 인간적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투쟁해야하지 않을까.

사회 ♣ 요즘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흐름과 맞물려 ‘4B’나 ‘탈코’ 같은 입장이 에코페미니즘이 갈등하는 지점이 없는지요?

장이정수 ♣ 한국 사회에서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저변이 넓지 않다 보니 ‘영성’이나 ‘여신’ ‘모성’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고,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가하게 텃밭이나 가꾸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여유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기도 합니다. 저는 이 ‘페미니즘 리부트’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여성혐오가 더 커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더 가시화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하는게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자유주의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조차 일회용품으로 만들고, 미래가 없고,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존재로 취급하잖아요. 노동이 여성화되고 경제나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사회구성원에 대한 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물론 정치도 바뀌어야하고 사회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스스로 자본주의 트랙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산다는 게, 모두 다 화폐로 환산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성공이 아닌 다른 삶을 시도하는, 자기 삶에 대한 경험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좋겠습니다. 2030세대가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물권 운동이나 비건운동 등 비인간동물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지 않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면서 지금 경제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대할 때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기본소득도 요구하고 연대의 힘을 갖출 때 우리가 좀 더 바라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 정부, 정치에 대한 요구도 공통분모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나면서, 지금 경제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대할 때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 ♣ 노동과 돌봄이 분리되지 않는 '서로돌봄'이라는 연결된 사고나 실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겠네요.

장이정수 ♣ 에코페미니즘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는 근대 자본주의가 여성도 상품으로 만들고 자연도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도 시장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돌봄은 인간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치 없게 만들었고, 시장상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것을 여성이 감당해요.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 누구도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도록 하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고,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노동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여성에게, 가정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노동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돌봄을 수행하는 대면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사회 ♣ 그간 젠더정책으로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다룬 의제가 보육이었고, 그 방향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24시간 돌봄, 온종일 돌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소 평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은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아동은 시설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방식인데요.

장이정수 ♣ 저는 그런 흐름과 다른 입장입니다.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데, 진짜 시설에서 돌봄이 업무로만 전담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양한 마을과 다양한 주체, 다양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여성운동도 일생활균형 정책을 촘촘하게 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그걸 수행하는 돌봄의 주체들에게 공동체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기에 '언택트'와 '기술'을 뉴노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성장과 시장주의가 부각되면 차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균열을 내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성환경연대도 환경과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고 우리 사회가 성장 일변도의 담론을 버리고 탈성장사회로 가는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광범위한 연대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독일, 유자녀 여성의 고용 제고 목적으로 '종일교육' 확대¹⁾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통계청은 '종일학교(Ganztagsschulen)' 제도를 통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최소 7시간의 수업을 제공한다.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점심을 제공한 후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종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시간에 학생은 숙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일반 또는 특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부 종일학교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스포츠 또는 음악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종일 교육(Ganztagsbetreuung)' 확대가 엄마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공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발표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로 인한 국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고용률이 3~7%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의뢰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고용률이 증가하면 가족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증가', '사회복지 지급 감소', '사회보험부담금 증가'로 공공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정부 예산 증가액은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453억 원)에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905억 원) 규모에 이른다.
-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타리나 교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는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 시간을 늘려줄 것이며 여러 가족뿐만 아니라 공공예산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규모는 연간 최대 20억 유로에 달하므로 정부는 종일교육을 확대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교육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수업을 진행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의 모든 주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크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카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 절반 정도의 초등학생이 종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백만 개의 교육 장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15,00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내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건물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억 유로(한화 약 6조 7,263억 원), 종일교육 운영비용은 연간 최대 40억 유로(한화 5조 3,810억 원)로 예상된다.

-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종일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71%였지만(2017년 기준), 실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학교 운영 비율은 48%에 그쳤다. 이에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종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 기금 20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은 주 5일간 8시간의 돌봄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점심 이후 또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는 종일학교 외에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르트나 종일학교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주정부별로 살펴보면 함부르크가 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이어 작센주(86%)와 브란덴부르크주(80%) 순으로 나타났다. 작센-안할트주와 베를린도 7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에른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이용률이 42%로 낮아졌으며,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30%,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에 그쳤다.

• 참고문헌 •

DIW(2020), “Fiskalische Wirkungen eines weiteren Ausbaus ganztägiger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 (검색일: 2020.03.22.).

News4teachers(2019.05.19.), “Geplanter Rechtsanspruch: So viel kostet der Ganzttag für alle Grundschulkind”, <https://www.news4teachers.de/2019/05/geplanter-rechtsanspruch-soviel-kostet-der-ganzttag/> (검색일: 2020.03.2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07.05.), “Betreuungslücken für Grundschulkind schließ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schliessen/133604> (검색일: 2020.03.2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1.20.), “Ausbau der Ganztagsbetreuung finanziert sich zum Teil selbs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mitteilungen/ausbau-der-ganztagsbetreuung-finanziert-sich-zum-teil-selbst/144602> (검색일: 2020.03.22.).

Spiegel(2020.1.20.), “Ganztagsbetreuung könnte sich zum Teil selbst finanzieren”, <https://www.spiegel.de/panorama/grundschulen-ganztagsbetreuung-koennte-sich-zum-teil-selbst-finanzieren-a-5bb3ff06-6235-41a8-a289-95f6ed48bc27> (검색일: 2020.03.22.).

독일, 코로나19 상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독일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3월 23일부터 이동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만남이 금지되고 있으며, 출퇴근이나 응급치료, 생필품 구매, 운동 등의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식당 등 요식업과 미용실 등의 여러 업소 영업이 중지되었고,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이동제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 및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 높으나,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긴급콜센터에 평소보다 더 적은 수의 전화를 통한 지원 요청이 있었던 반면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 긴급요청 건수는 늘어났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여성보호 시설을 찾는 여성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미하엘 심리치료학과장은 “중국 우한의 경우, 격리 및 폐쇄 조치가 시행된 이후 여성 보호시설에 머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가 3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국 경찰은 평소보다 두 배 많은 긴급 지원 전화를 받았다”며 “독일 역시 격리조치로 인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외부세계로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릴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독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 중이다. 먼저 독일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를 통해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 상담을 지속 운영한다고 전했다. 닥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보호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호텔 등을 활용한 숙소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 총 353곳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시설만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먼저 베를린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해 호텔 2개를 임대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 임대가 가능하다. 베를린 의회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설의 수를 늘리고 있다. 임대하기로 결정한 호텔 건물 한 곳은 피해 가족이 머물 예정이며, 다른 한 호텔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되어야 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베를린에는 6개의 ‘여성의 집’을 비롯해 약 90여 개의 보호시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설이 늘 붐비고 피해자가 계속 시설을 옮겨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베를린 의회는 기존 시설과 새로 확보한 호텔 두 곳 외에도 앞으로 계속 여성보호시설 확보를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경찰청은 2020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숙박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이 수행될 예정이다. 베를린 의회는 시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복지청 직원과 학교 및 사회복지사가 4월 부활절 휴가 기간과 격리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동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무료로 법의학 의사를 통해 폭력 피해나 부상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스키아 에졸트 샤리테병원 폭력피해 보호를 위한 외래진료소 부소장은 “기관 폐쇄 조치로 인해 학교, 유치원, 보육교사 등이 시민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부상이나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격리 상황에 증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북도시인 함부르크의 경우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숙박시설이 마련된 상태다. 함부르크 의회는 코로나 위기에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발표자료에 따라, 함부르크의 모든 동네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숙소를 마련 중이다. 의회는 2020년 3월, 숙소 한 곳을 앞서 예약했다.
- 함부르크에는 5곳의 여성보호시설이 있지만, 의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족이 격리되어 지낼 수 있거나 더 많은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함부르크 의원들은 “이미 확보된 숙소 외에도 더 많은 공간을 예약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함부르크에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 건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은 상태다.

• 참고문헌 •

berliner-zeitung(2020.04.02.), “Berliner Senat mietet Hotels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berliner-zeitung.de/mensch-metropole/berliner-senat-mietet-hotels-fuer-opfer-haeuslicher-gewalt-li.80329> (접속일 : 2020.04.11.)

spiegel(2020.03.27.), “Hamburg bucht erste Pension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spiegel.de/panorama/coronavirus-haeusliche-gewalt-hamburg-bucht-erste-pension-fuer-be-troffene-frauen-a-00000000-0002-0001-0000-000170213661?fbclid=IwAR05jhuOEB6KQt hYQIn400XZXRxKnNswKjdLfwSv7bjitKT-y2oXOxXdqns> (접속일 : 2020.4.11.)

tagesschau(2020.03.28.), “Man muss mit dem Schlimmsten rechnen”, <https://www.tagesschau.de/ausland/corona-europarat-haeusliche-gewalt-pejcinovic-buric-101.html> (접속일 : 2020.4.11)

독일, 디지털 성폭력 예방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주력

- 독일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성폭력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비판적으로 다루거나 금지 조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동,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독일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독립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과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이다. 독립자문관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치됐으며, ‘독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 ‘사이버 그루밍(Cybergrooming)’과 ‘섹스팅(sexting, 성적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그루밍’은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튀링겐(Thüringen)주 교육 노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462명의 학생이 섹스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여학생이 75%였으며, 대다수가 11세에서 14세 사이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 노조는 교사가 경찰, 상담센터, 청소년복지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요하네스 빌헬름 로릭 독립자문관은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가 대화창에서 아동성폭력을 위해 접근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에 사이버그루밍을 심각한 범죄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방정부의 독립자문관 부서는 부모, 교사와 같은 교육 관련 지도자, 검색엔진이나 온라인게임 업체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된 사용 영역 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조언 및 지원 서비스를 보기 쉽게 배치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전달 ▲법 집행 당국과 서비스 기관에 더 나은 재정 및 인력 배치 확보 등이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해 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www.wissen-hilft-schuetzen.de>)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안전 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지, 디지털 윤리, 학교 성폭력, 미디어 사용법, 채팅 위험성,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었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48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개되어있는 사업 중 하나인 <샤우 힌(SCHAU HIN!)>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홈페이지(<http://www.schau-hin.info/>)를 보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게임’ 등 분야별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바람직한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와 양육자, 교사가 참고하면 좋을 정보는 섹션별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 구체적으로 보면 ‘JusProg(www.jugendschutzprogramm.de/)’에서는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i-키즈(<https://www.i-kiz.de/>)’와 ‘Jugendschutz(<http://www.jugendschutz.net/>)’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알람이 뜨거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 참고문헌 •

UBSKM(2020), “WISSEN-HILFT-SCHUTZEN,DE”, <https://www.wissen-hilft-schuetzen.de> (최종 검색일 : 2020.4.20.)

UBSKM(2020.03.23), “5 Jahre Betroffenenrat beim 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esse-service/presseteilungen/detail/5-jahre-betroffenenrat> (최종 검색일:2020.4.20.)

UBSKM(2020), “Sexuelle Gewalt mittels digitaler Medien”,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aevention/sexuelle-gewalt-mittels-digitaler-medien> (최종 검색일 : 2020.04.20.)

GEW (2018.06.08.), “Digitale sexualisierte Gewalt: Lehrkräfte wünschen sich Fortbildungen”, <https://www.gew-thueringen.de/aktuelles/detailseite/neuigkeiten/digitale-sexualisierte-gewalt-lehrkraefte-wuenschen-sich-fortbildungen/> (최종 검색일 : 2020.04.20.)

독일, 코로나 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감소하고, 돌봄 부담은 증가

- 코로나 위기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하고, 집안일과 무급 돌봄 영역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남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무급 가사노동을 하는 과거 노동 분업 구조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 독일의 ‘한스 뵘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이 칸타 도이칠란트(Kantar Deutschland)에 의뢰해 총 7,677명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여성의 노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집안일과 무급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WZB)의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의 16%가 코로나19 이후 일을 덜 하게 됐으며, 이는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모든 보육센터와 유치원,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부모, 특히 여성이 주요 부담을 지게 됐다. ‘한스 뵘클러 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자녀 보육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인 여성 비율은 27%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근무시간을 줄인 남성 비율은 16%였다. 저소득 가정일 경우 근무시간을 줄인 남녀 비율 격차는 더욱 컸다.
-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여 돌봄 손실을 메운 비율은 가구당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집안일 및 무급 돌봄 업무를 한 비율은 31%(남성 19%)였다. 월 소득이 2,000유로부터 3,200유로(한화 약 273만~436만 원) 사이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인 비율은 32%(남성 18%)로 2,000유로 이하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월 소득이 3,200유로(한화 약 436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이 근무시간을 비율이 24%(남성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독일 경제주간지 ‘비어트샤프트보허(WirtschaftsWoche)’ 보도에 따르면, 사회학자 유타 알멘딩거(Jutta Allmendinger)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역할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72%이지만 30년 전인 60% 미만대로 감소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991년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57%였고, 이전에는 55% 정도에 그쳤다.
- 유타 알멘딩거는 “1990년대 초에는 3세 이하 어린이나 방과 후 아이를 돌보는 종일학교 등이 없어 여성이 경제활동보다 무급 돌봄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며 “하지만 현재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유치원,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과거처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가 늘었고 이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 서부에 위치한 파더보른 대학교(Universität Paderborn)의 베티나 콜라우쉬 교수는 “최근 예산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파트너와 맞벌이 하는 여성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더 많은 돌봄 일을 수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집안일과 돌봄 일에 대한 여성 의존도가 높아져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코로나 위기 이후 증가한 돌봄 노동 일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중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집안일과 돌봄 일을 비슷한 비율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한 가구 당 수입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미만인 부부나 파트너십의 경우 52%가 코로나 위기 이후 여성의 집안일 및 돌봄 일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로 인해 청소, 요리, 학교 교육을 대체할만한 아이 돌봄 등의 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주로 여성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감당하고 있다. 독일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현재 가정마다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참고문헌·

Hans-Böckler-Stiftung(2020.05), “RÜCKSCHRIFFT DURCH CORONA”, <https://www.boeckler.de/de/boeckler-impuls-ruckschritt-durch-corona-23586.htm> (접속일: 2020.05.28.)
 WirtschaftsWoche(2020.05.05.), “Zerstört Corona Frauen-Karrieren? ”, <https://www.wiwo.de/erfolg/betrieb/zurueck-an-den-herd-zerstoert-corona-frauen-karrieren/25802466.html> (접속일: 2020.05.26.)

독일, 온라인 기반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경찰의 잠입수사 허용

- 독일에서는 2019년 10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 베르기슈글라트바흐(Bergisch Gladbach)에서 한국의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1,800명의 회원을 가진 아동 성착취물 관련 휴대폰 채팅 그룹이 발견된 것이다.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에 따르면 1,800명의 가해자들은 그룹채팅창을 통해 아동 성학대 관련정보와 사진 등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만 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었으며, 가해자 중에서는 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성적으로 학대, 폭행해 사진과 영상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 끔찍한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가 발견된 이후, 독일에서는 전국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56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중 절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나머지는 다른 주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포된 가해자는 10명이다. 현재까지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와 관련해 성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압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쾰른경찰청은 약 300명이 연계되어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했으며, 최대 161명의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청(LKA)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컴퓨터로 생성한 가짜 아동 이미지 사용을 통해 직접 여러 채팅창에 들어가 더 많은 사례와 가해자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연방 법무부는 조건 수락했다. 독일 <Aachener>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조사관이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수사 방법은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그루밍(Cyber-Grooming) 관련 법안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

-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관련 범죄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범죄수사청(BKA) 자료를 보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 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서 성폭력 묘사나 이미지에 대한 경고 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언론매체 ‘베를린모어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착취물 배포에 관한 범죄가 52%, 아동 성착취물 배포도 65% 증가했다. 이처럼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배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에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퇴치 중앙 센터(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를 마련했다. 범죄수사청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의 아동 성착취물은 국제 차원의 범죄이며 데이터를 몇 초 만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은 독일과 전 세계 수사기관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퇴치 중앙센터는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돼 아동의 알몸을 찍거나 사진을 판매·교환하는 경우 처벌받게 됐다. 당시 법안 수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독일 형법 184조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3개월에서 5년 형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문헌 •

- Bundeskriminalamt(2020), “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 (접속일: 2020.5.14.)
- Berliner Morgenpost(2020.03.23.), “BKA: Verbreitung von Kinderpornos nimmt laut BKA dramatisch zu”, <https://www.morgenpost.de/vermischtes/article228756051/Kinderpornografie-BKA-verzeichnete-2019-deutlich-mehr-Faelle.html> (접속일: 2020.5.12.)
- ZEIT ONLINE(2014.11.14.), “Bundestag verabschiedet Gesetz gegen Kinderpornografie”,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4-11/kinderpornografie-missbrauch-gesetz-edathy> (접속일: 2020.5.12.)
- Neue Westfälische(2020.02.05.), “Bergisch-Gladbach: Zurzeit 56 Beschuldigte und 21 missbrauchte Kinder”, https://www.nw.de/nachrichten/zwischen_weser_und_rhein/22687315_Bergisch-Gladbach-Zurzeit-56-Beschuldigte-und-21-missbrauchte-Kinder.html (접속일: 2020.5.14.)
- Aachener zeitung(2019.11.25.), “Missbrauchsfall Bergisch Gladbach wohl größer als Lügde”, https://www.aachener-zeitung.de/nrw-region/missbrauchsfall-bergisch-gladbach-wohl-groesser-als-luegde_aid-47401905 (접속일: 2020.5.14.)

영국, 2020년 12월 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²⁾

-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용품에 부과됐던 일명 ‘탐폰세 (tampon tax)’가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여성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5%를 부과하고 있으나 3월 1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탐폰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생리용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탐폰세가 폐지되면 20매 탐폰을 기준으로 7펜스(한화 약 105원), 12매 생리대는 5펜스(약 75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여성단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품과 다른 생필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랫동안 탐폰세 철폐 운동을 벌여왔다. 원래 17.5%에 달했던 탐폰세는 노동당 의원이었던 다운 프리마로가 탐폰세 인하 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에 5%까지 낮아졌다.
- 최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탐폰세 폐지 캠페인은 2014년 5월 골드스미스 대학교 학생이었던 라우라 코리튼이 주도했던 ‘Stop Taxing Periods’이다. 당시 코리튼은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탐폰세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3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코리튼은 2020년 3월 6일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탐폰세 폐지는 성차별주의의 끝을 뜻한다.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일도 생긴 것”이라며 탐폰세 폐지를 환영했다.
- 20년 가까이 지속한 캠페인으로 영국 정치권도 탐폰세 폐지를 지지했으나 지금까지 유지했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매겨야 해서 영국 정부가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소 세율을 적용한 것이 5%였고, 영국은 2000년 이후 이 과세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더는 유럽연합법에 묶일 필요가 없게 됐고, 유럽연합 탈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탐폰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영국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생리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사건을 통해 청소년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영국에서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 영국의 아동 권리 보호단체인 Plan International이 2018년 3월 14~21세 여성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참가자 중 42%가 생리대 살 형편이 안되어 화장지를 덧대는 등 임시방편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7%는 양말,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임시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 생리 빈곤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국교육연합(the National Education Un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3만 7천 명 이상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수업을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작성 :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초중고생 170만 명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예산 2천만 파운드 (약 301억 원)를 편성했다. 생리대 지급은 각 학교가 필요한 분량의 생리대를 영국 교육부가 지정한 유통업자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참고문헌 •

BBC(2015.02.09.), "Why the 'tampon tax' is here to stay- for a while at least",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1299254/why-the-tampon-tax-is-here-to-stay---for-a-while-at-least> (검색일: 2020.03.27.).

BBC(2020.03.07.), "Budget 2020: Pledges on tampon tax and the future of cash",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72425> (검색일: 2020.03.27.).

The Guardian(2020.03.06.), "Budget 2020: chancellor plans to finally end tampon tax",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mar/06/budget-2020-chancellor-plans-to-finally-end-tampon-tax> (검색일: 2020.03.27.).

The Guardian(2020.1.18.), "Free period product to be available in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jan/18/free-period-products-to-be-available-in-schools-and-colleges-in-england> (검색일: 2020.03.27.).

Plan International(2018.03.12.), "40% of girls have used toilet roll because they've struggled to afford sanitary wear, survey reveals", <https://plan-uk.org/media-centre/40-of-girls-have-used-toilet-roll-because-theyve-struggled-to-afford-sanitary-wear> (검색일: 2020.03.27.).

영국,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시행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교정본부(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는 2020년 3월 31일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교도소 내 코로나19 (COVID-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임신부 재소자들이 임시로 출소시키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영국 정부는 다인실에 수감된 임신부와 산모 재소자들이 코로나19 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방에 분리해 보호해왔으나 3월 31일부터 교도소 안 재소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는 경범죄 혐의로 수감된 임신부 재소자들에 한해 임시 석방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로버트 벅랜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임신부 재소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출소 조치가 필요하다. 교도소장이 임시 출소증을 발급하면 임신부 재소자들은 자가 격리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모든 임신부, 산모 재소자가 임시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재소자들은 임신부라고 해도 임시 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교도소는 임시 출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출소 뒤 안전하게 지낼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 뒤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임시 출소 허가증을 발급한다. 임신부뿐 아니라 최근 출산한 재소자와 아기도 임시 출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시 출소한 재소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 영국 정부는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외에도 경범죄 재소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하고 있다. 교도소는 좁은 공간을 여러 명과 오랜 시간 공유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자 가석방 정책은 교도소 수감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 중인 남은 형기가

두 달 미만인 경범죄 재소자 4,000여 명이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에서는 교도소 내 감염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모두 88명,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5일에는 60대 교도소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교도소 내 감염이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소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 재소자 가석방은 보리스 존슨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선택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범죄자 처벌 강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은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며 흉악범의 교도소 수감 기간 연장을 주장할 만큼 가석방에 너그럽지 않다. 정부가 기존의 범죄자 처벌 정책 노선과 상반되는 경범죄자 가석방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영국 교도소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 BBC(2020.04.04.), “Coronavirus: Low-risk prisoners set for early release”, <https://www.bbc.com/news/uk-52165919> (검색일: 2020.04.07.)
- BBC(2020.04.05.), “Coronavirus: Two Pentonville Prison staff members die”,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2169957>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31.), “Pregnant prisoners to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custody”,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prisoners-to-be-temporarily-released-from-custody>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13.), “Coronavirus(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04.07.)

영국, 코로나19 봉쇄령 이후 가정폭력 피해신고 급증

-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의심 사망사고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단체인 Refuge는 2020년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뒤 피해신고 건수가 봉쇄령 이전 주와 비교하면 평균 27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Refuge는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전국 가정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리기 전인 2주 전보다 평균 25% 증가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속 횟수도 같은 기간 1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산드라 홀레이 Refuge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가해자와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는 요즘 같은 봉쇄 기간에는 신고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 이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전국 봉쇄령 조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Counting Dead Women’의 설립자 카렌 잉가라 스미스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아동을 포함해 여성 총 16명이 가정폭력으로 숨졌으며,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가 가정 및 아동 폭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영국 내무성 특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 Counting Dead Women은 남성에게 살해당한 영국 여성 관련 통계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스미스가 주도했다. 스미스는 인터넷 검색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계자들을 접촉한 뒤 자료를 모았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영국 전역에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피해 사망자 수치가 같은 기간 평균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평균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숨진 여성 7명은 현재 파트너나 헤어진 연인에게, 3명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미스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남성을 폭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었던 남성이 폭력을 더 자주 휘두르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전국 봉쇄령 이후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도 슈퍼마켓 직원에게 비밀 코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피해자들이 슈퍼마켓 식료품 쇼핑을 이유로 외출했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임 베라 바일드 영국 웨일스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국장은 “만약 슈퍼마켓 직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사용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나중에 슈퍼마켓 직원이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참고문헌 •

Refuge (2020.04.06.), “25% increase in calls to 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 since lockdown measures began”, <https://www.refuge.org.uk/25-increase-in-calls-to-national-domestic-abuse-helpline-since-lockdown-measures-began/> (검색일: 2020.4.23.)

The Guardian (2020.04.15.), “Domestic abuse killings more than double amid covid-19 lockdow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15/domestic-abuse-killings-more-than-double-amid-covid-19-lockdow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Echobox=1586978464 (검색일: 2020.04.23.)

BBC (2020.4.15.), “Coronavirus: Shop workers should be trained to help abuse victim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2296284> (검색일: 2020.4.23.)

UK Parliament (2020.04.14.),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on domestic and child abuse examined”,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home-affairs-committee/news-parliament-2017/coronavirus-domestic-and-child-abuse-evidence-19-21/> (검색일: 2020.4.23.)

영국, 코로나로 치료 중단된 불임환자 위해 난자 냉동기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

-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행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난자와 정자 등을 얼렸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료가 일시 중단된 불임 치료(fertility treatment)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 현재 관련 법은 냉동 난자와 정자, 배아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냉동 난자 보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영국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시행했고, 영국 공공의료기관인 국민 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해 전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은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에 3월 23일부터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불임 치료 환자들은 약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 로드 베텔 영국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4월 27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불임 치료 중인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치료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임 치료 과정에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이 포함된 환자들을 위해 냉동 보관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해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전국 공립 및 사설 불임 치료 클리닉이 2020년 5월 1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영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 규제 기관이자 배아 연구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5월 1일,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불임 치료 클리닉이 다시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HFEA는 재운영 조건으로 대기실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운영, 필수 개인 보호장비 구비 등을 제시했다. 불임 치료 클리닉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 설명하는 계획서를 HFEA에 제출한 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클리닉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하지만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은 사설 병원들보다 재운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불임 치료 클리닉 내 의료 인력을 포함해 많은 NHS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전방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NHS 의료진들조차 마스크와 가운 등 개인 보호장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이 HFE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상황과 별도로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냉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2020년 5월 5일 마감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법안 개정에 반영된다.

• 참고문헌 •

GOV.UK(2020.4.27.), “Storage limit for frozen eggs, sperm and embryos extended during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orage-limit-for-frozen-eggs-sperm-and-embryos-extended-during-coronavirus-outbreak> (접속일: 2020.5.13.)

GOV.UK(2020.5.1.), “Health secretary welcomes reopening of fertility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welcomes-reopening-of-fertility-services> (접속일: 202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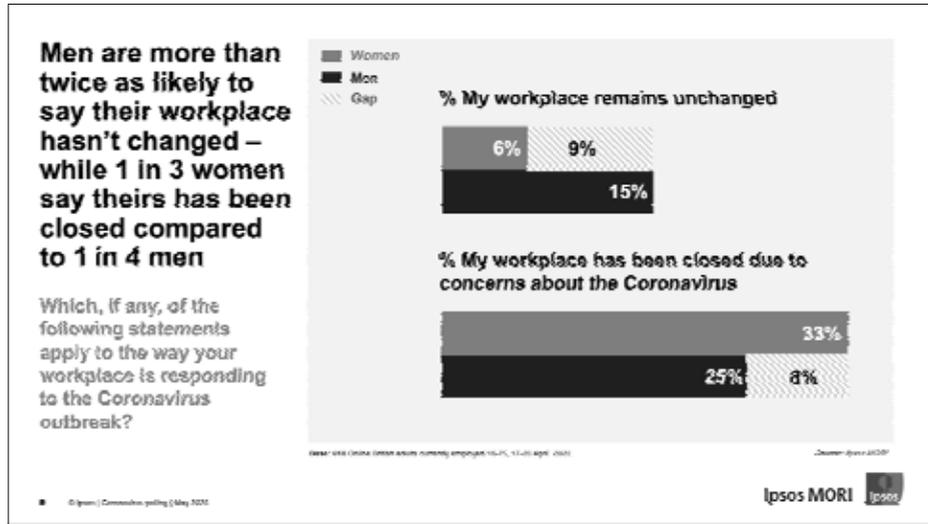
The Guardian(2020.5.10.), “Coronavirus doctors call for inquiry into PPE shortages for NHS staff”,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0/coronavirus-doctors-call-for-inquiry-into-ppe-shortages-for-nhs-staff> (접속일: 2020.5.13.)

영국 여성단체들, 코로나19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 겪는 여성의 특수성 반영한 정책적 지원 요구

-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됐다.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실직 우려가 정서적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와 시장조사 업체인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5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여론조사(Public opinion on the COVID-19)’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응답자 10명 중 6명(61%)이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전체 남성 응답자 10명 중 4.7명(47%)이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해당 자료는 입소스 모리가 영국 16~7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타격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여성 응답자 중 6%, 남성은 15%로,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장이 폐쇄됐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33%였지만, 남성은 전체의 25%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걱정하는 감정 노동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4%가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나 취약계층에게 연락했다’고 했으며, 남성은 전체의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이 괜찮은지 확인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 응답자는 각각 78%와 63%로 여성이 더 많았다. 자가격리된 주변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한 여성 응답자는 21%, 남성 응답자 16%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주변인을 돕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68%, 남성은 64%로 나타났다.
- 포셋 소사이어티 샘 스메더스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할 때 영국 정부는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뒷전에 밀쳐둔다면 영국의 경제 회복은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영국 여성 단체와 여성 운동 활동가들은 많은 여성이 슈퍼마켓 직원이나 유아 보육, 노인 병간호 등 저임금을 받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 지난 3월 포셋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영국 여성단체 50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

• 참고문헌 •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em-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

Ipsos Mori (2020.5.26.) "Coronavirus, Tracking UK public perception",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2020-04/coronavirus-covid-19-infographic-ipsos-mori.pdf> (접속일: 2020.5.27.)

Fawcett society (2020. 3.1) "Coronavirus: Joint call for women's visibility in UK response",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coronavirus-joint-call-womens-visibility-uk-response> (접속일: 2020.5.27.)

프랑스, 성범죄 혐의 폴란스키 감독의 세자르 영화제 수상 소식에 비판 여론 확산³⁾

- 2020년 2월 28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 위치한 살 플레엘(Salle Pleyel) 극장에서는 프랑스 최대 영화 시상식인 제 45회 세자르(César)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졌는데, 바로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감독 때문이다.
- 논란은 시상식이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다.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나는 고발한다(원제: J'accuse, 영문: An Officer and a Spy)'가 무려 12개 부문 후보에 지명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시상식 보이콧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자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작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영화인 수백여 명이 세자르 영화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폴란스키 감독과 그의 작품은 후보로 오른 상태로 시상식은 개최되었다.

3) 작성: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에 거주하던 1977년, 미성년자인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범죄인정 조건부 감형협상(플리바게닝) 과정에서 돌연 출국해 버렸다. 40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차례 폴란스키 감독을 자국으로 송환 및 기소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적자인 폴란스키 감독은 파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는 프랑스 한 여배우가 폴란스키 감독에게 과거 18세일 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폭로했지만, 폴란스키 감독은 혐의를 부인했고, 해당 시점이 과거 1970년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 이번 폴란스키 감독의 후보 지명 이후 프랑스의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 문화부 장관(Culture Minister)은 공식석상에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평등정책부 장관(Equality Minister) 역시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세자르 영화제에서 폴란스키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폴란스키 감독의 감독상 수상이 발표되자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다가 객석 일부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아델 애넬(Adele Haenel)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시상식장을 떠났고, 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아델은 과거 그녀가 12세 때 처음 출연한 영화감독이 본인을 성추행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혀 프랑스 내 미투(Me Too) 운동에 앞장서기도 한 배우이다.
- 약 수백여 명의 여성단체 및 여성시민들은 극장 앞에서 폴란스키 감독 구속을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자들은 폴란스키의 이름에 ‘강간하다’란 뜻의 프랑스어(violer)를 더해 ‘비올란스키(violanski)’란 단어를 외치기도 했으며, 시위가 고조되고 시위대 일부가 극장으로 무단진입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폴란스키 감독은 사람들이 본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public lynching)이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동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화제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폴란스키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상식은 비판의 목소리로 얼룩진 채 끝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BBC(2020.02.14.), “France’s César Academy board quits en masse amid Polanski row”,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494929> (접속일 : 2020.03.20.).
- France 24(2020.02.29.), “Walkouts at ‘French Oscars’ as Roman Polanski wins best director”, <https://www.france24.com/en/20200229-walkouts-at-french-oscars-as-roman-polanski-wins-best-director> (접속일 : 2020.03.20.).
- Euronews(2020.02.29.) “Women walk out of French ‘Oscars’ to protest Roman Polanski win”, <https://www.euronews.com/2020/02/29/women-walk-out-french-oscars-protest-roman-polanski-win-n1145816> (접속일 : 2020.03.20.).
- Reuters(2020.02.27.), “Filmmaker Polanski will not attend ‘French Oscars’ in Paris over criticis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wards-cesars-polanski/filmmaker-polanski-will-not-attend-french-oscars-in-paris-over-criticism-idUSKCN20L1YO> (접속일 : 2020.03.20.).

프랑스, 이동 제한에 따른 가정폭력 증가에 피해 신고방법 다각화 및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국가가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외출하지 않고 장기간 자택에서 머무르며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동 제한령 기간에는 음식이나 약품 구매, 의사 방문, 운동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되었다. 현재 일부 완화조치가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기도 있으나,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런데 이동 제한령이 실시되면서 한 가지 의도치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 피해의 증가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 프랑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Christophe Castaner) 내무 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령이 발표 및 실시된 3월 17일 이후 국내 가정폭력 신고가 약 30% 이상 증가했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파리 시에서는 약 36%가 증가했다고 한다.
- 이미 프랑스는 유럽 지역에서도 가정폭력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18-75세)이 매년 약 21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에서는 3일에 한 명 꼴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 사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성평등 담당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Gender Equality and Combating Discrimination)은 언론사 France 24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긴급번호인 114에 문자를 보내거나 동네 약국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운영 중인 마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시 팝업(pop-up) 지원 서비스센터도 마련했다.
- 시아파 장관은 다른 언론사 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지원시스템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약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일종의 암호를 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된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여성이 약국에서 “마스크19 (Mask 19)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 말을 들은 약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고, 피해여성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개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약 1백만 유로(한화 약 1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여 가정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와 피신하는 경우, 호텔 및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 숙박일수는 총 2만일에 이르는데, 이는 1천여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이 아닌 호텔에서 20여일을 임시로 묵을 수 있는 정도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프랑스 외의 국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news(2020.03.28.), "Domestic violence cases jump 30% during lockdown in France", <https://www.euronews.com/2020/03/28/domestic-violence-cases-jump-30-during-lockdown-in-france>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3.30.), "France to put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hotels as numbers soar under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330-france-to-put-domestic-violence-victims-in-hotels-as-numbers-soar-under-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4.10.), "French domestic violence cases soar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10-french-domestic-violence-cases-soar-during-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4.21.), "French gender equality minister on help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21-french-gender-equality-minister-on-helping-victims-of-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접속일 : 2020.05.07.)

캐나다,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으로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⁴⁾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급격하게 정책을 선화하였다. 3월 24일부터는 행정 명령으로 마트, 약국, 식당 등 필수적인 서비스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4월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20억 캐나다 달러(약 71조 399억)의 긴급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의 소득보전 및 세금 보조가 가장 큰 축을 이루지만,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예고하였다. 자택에 머물며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없는 인구가 캐나다 사회에는 존재하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에서도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캐나다 언론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여성,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정적, 육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더 큰 제약이 생겨 피해자들이 쉼터로 대피하고자 해도 되돌려 보내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홈리스 문제 또한 늘 젠더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여성 홈리스인들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여성 홈리스 중에 젠더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주민 여성들이 많은 점 등이 그 이유이다.
- 2020년 4월 4일 트뤼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긴급 지원책으로서 4천만 캐나다 달러(약 346억 5천만원)가 연방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를 통해 여성쉼터와 성폭력센터로 지원될 것이며, 2천

4) 작성 :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6백만 달러(약225억)는 575개의 쉼터(violence against women shelters)로 즉시 배포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천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홈리스 대책을 위한 재정으로서, 1억 5,750만 달러(약 1,372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들로 하여금 홈리스인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데 쓰이게 된다. 4백만 달러(약 34억 6천만 원)는 캐나다 여성재단의 성폭력센터(sexual assault centres)에 지원되며, 나머지 천만 달러(약 88억)는 원주민 자치지역과 유콘(Yukon)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46개의 긴급 쉼터에 지원된다.

- 한편,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 하순부터 학교와 유치원, 데이케어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면서 집안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의사, 간호사, 긴급 구조 요원, 간병 등의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지원을 시작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12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당 200 캐나다 달러를,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0~21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250 캐나다 달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참고문헌 •

- CTV News(2020.04.06.), "Domestic violence increases with 'stay home' pandemic response",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domestic-violence-increases-with-stay-home-pandemic-response-1.4885597> (검색일 : 2020.04.08.)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2020.04.04.), "Canada announces support to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women fleeing gender-based viole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4/canada-announces-support-to-those-experiencing-homelessness-and-women-fleeing-gender-based-violence-during-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html> (검색일 : 2020.04.08.)
- Global News(2020.04.04.). "Coronavirus: Trudeau announces \$40M for women's shelters, \$10M for Indigenous women and kids", <https://globalnews.ca/news/6778731/coronavirus-womens-indigenous-assault-centres/> (검색일 : 2020.04.08.)
- CBC(2020.03.18.), "Trudeau unveils \$82B COVID-19 emergency response package for Canadians, businesses", <https://www.cbc.ca/news/politics/economic-aid-package-coronavirus-1.5501037> (검색일 : 2020.04.08.)

캐나다,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성착취 증가로 미성년자 보호 TIP 속지 권고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와 섯다운이 길어지면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알버타(Alberta) 주 경찰 인터넷 아동착취 담당부서 (Internet Child Exploitation: ICE)에는 2020년 3월 한 달간 243건의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과거 2년간 같은 달에 평균 110건이 보고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근처 경찰서나 온라인(Cybertip.ca)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Cybertip.ca 으로 접수된 신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섯다운 이후 대폭 늘어났다. 경찰은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상태로 공원과 놀이터 까지 닫은 마당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온라인게임이나 SNS, 채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런 온라인 공간에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유혹하는데 능숙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가해자와 비슷한 나이대로 속여 접근한 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보낼 것을 제의하는 것이 흔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2020년 4월 퀘벡주 가티노(Gatineau) 경찰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비상사태 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부모들이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캐퍼(Capper)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비디오 등을 저장 후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이미지 등을 이용해 가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더 강도 높은 성적 착취로 이어가거나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베스트 이미지 투표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유하기도 하기도 한다. 경찰과 아동 보호 센터는 이러한 커뮤니티들과 다크웹 채팅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섯다운으로 더 많은 아이가 온라인에 머무는 것에 고무되어있는 사용자들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은 부모 혹은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모두에게 Cybertip.ca나 아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떻게 미성년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해 학습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아동 보호 센터가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의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침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나 랩탑, 태블릿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앱, 게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숙지할 것, 자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체험해 볼 것, 집안에서 언제 얼마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칙을 자녀와 함께 정할 것, 그리고 SNS 등에서 자녀에게 친구 요청이 있을 때는 부모와 상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대화 강조하고 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라도 부모와 차분한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 사건을 조기에 포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CBC(2020. 4. 21.),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on rise in Alberta with perpetrators, victims at home during COVID-19 crisis",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online-ice-child-sex-exploitation-alberta-1.5539359> (접속일 : 2020.05.08.)
- Global News(2020.04.21.), "ICE reports spike in online child exploitation cases in Alberta amid COVID-19 pandemic", <https://globalnews.ca/news/6847825/alberta-child-exploitation-rise-coronavirus/> (접속일 : 2020.05.08.)
- CBC(2020.04.24.), "Online sexual predators eager to take advantage of greater access to kids during COVID-19, police warn", <https://www.cbc.ca/news/canada/sexual-predators-children-online-pandemic-1.5542166> (접속일 : 2020.05.08.)
- Canadian Centre of Child Protection(2020), "Supporting you through COVID-19", <https://protectchildren.ca/en/resources-research/supporting-you-through-covid-19/> (접속일 : 2020.05.08.)

캐나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

- 캐나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9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 캐나다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 만 1,01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한 7.8%로, 4월에는 13%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세는 캐나다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데, 캐나다 언론은 이 수치조차도 실질적인 캐나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인구 약 170만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캐나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현재 2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더욱이 이러한 경제위기는 특정 사회계층,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언론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여성에 더욱 가혹한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성한 단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의 2020년 5월 9일 보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마지막 불황인 2008~2009년 불황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직종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몰고 왔기에 이를 히세션(He-cession)이라 불렀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번 불황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한 달간 25세 남녀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15,000명의 25세 이상 남성이 3월 한 달 간 새롭게 실업자가 된 반면 여성 실업자는 403,000명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 캐나다 언론과 학계,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캐나다의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식당, 호텔, 미용업 등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3월 비상사태 선포로 이러한 직종들이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성들이 동시에 실업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2020년 4월 말 경기 동향에서는 이러한 남녀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도 설명이 된다. 4월 말 동향에서는 여성의 전체 실업률이 11.3%, 남성의 실업률은 10.8%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는 3월에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을 해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가 4월 내내 악화됨에 따라 문을 닫은 직종들이 더욱 늘어났고 건설업과 같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까지 여파를 미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요컨대 이는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저임금 노동자인 상태에서 비상사태 선포 후 제일 먼저 해고가 된 이후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5월 16일 일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염두 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캐나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여성상공인 전략(WE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해 1천 5백만 캐나다 달러(약 13억 2천만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의 대상자들은 여성 소상공인들로서, 1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 중 75%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여성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홍보비, 임대비 보류, 온라인 플랫폼 개척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에 지출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16일 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성 사업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의 섹터”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이러한 소규모

직종들이 자금난에 취약하다는 점, 여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동안 경제적 위기에 더불어 육아나 집안일 등의 돌봄 의무를 더 짊어져야 했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캐나다 지역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기준 38%의 자영업자가 여성으로, 2018년 캐나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런칭한 WES 프로그램은 기업가와 고객들이 모두 여성인 업종들을 주로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이 성별 임금 격차 해결, 가용한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젠더폭력 근절을 주축으로 한 연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 참고문헌 •

HuffPost(2020.05.09.), "Canada's Unemployment Crisis Hits Gen Z, Women, Quebecers Hardest",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unemployment-canada-youth-women-quebec_ca_5eb6ed97c5b64711c0c8d3ff (접속일: 2020.05.18.)

Government Canada (2020.05.16.), "Minister Ng announce more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amid COVID-19",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0/05/minister-ng-announces-more-support-for-women-entrepreneurs-amid-covid-19.html> (접속일: 2020.05.18.)

네덜란드,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센터 및 임산부 대상 유선 정기검진 시행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네덜란드 정부의 고강도 대응으로 최근 네덜란드 부모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 먼저,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자녀가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현재 불가피하게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근무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센터(noodopvang)'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물류, 쓰레기 처리, 소방관, 공무원 등 현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지만 일반 유치원, 학교 등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드시 부모 양측이 현재 필수업종 종사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유동적으로 시설 상황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발생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임신하는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거주지 인근 조산사 센터(verloskundigen praktijk) 센터에 등록하고 배정받은 조산사(verloskundige)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출산 전까지 일련의 검사들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5대 도시 중 한 곳인 우트렉트(Utrecht)시의 경우, 대다수의 조산사 센터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상당수가 전화로 정기검진을 진행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대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임산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뒤 진료를 보고 있다.
-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정상대로 진행하지만 의료진은 평소 위생 관리 절차와 비교하면 더욱 신경 써서 마스크,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고 출산 서비스에 투입된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무조건 한 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5) 작성 :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배우자나 파트너 한 명만 분만실에 같이 있게 된다. 출산 후 6주 경과 시 조산사는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밥 제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고 있다.

- 이혼한 부모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혼 당시 계약한 자녀 교섭 부분에 있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기르고 있는 엄마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아빠 측이 아이들을 기존 동意的한 횡수만큼 자녀를 만나러 오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네덜란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당분간 강력한 정책과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Rijksoverheid(2020.03.20.), "Vragen over noodopvang voor kinderen van ouders in cruciale beroepen of vitale processen",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veel-gestelde-vragen-per-onderwerp/kinderopvang/cruciale-beroepen> (접속일: 2020.04.08.)

RTL Nieuws(2020.04.01.), "Wat doe je als je ex een andere corona-aanpak heeft? 'Ga je zin niet doordrijven'",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074316/corona-samengesteld-gezin-ex-kind-gescheiden-ouders-maatregelen> (접속일: 2020.04.08.)

RTV Utrecht(2020.03.24.), "Zwanger ten tijde van corona: 'Meer vrouwen kiezen voor thuisbevalling'", <https://www.rtvutrecht.nl/nieuws/2027885/zwanger-ten-tijde-van-corona-meer-vrouwen-kiezen-voor-thuisbevalling.html> (접속일: 2020.04.08.)

스페인,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응⁶⁾

- 스페인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8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7건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살해당한 여성이라고 한다. 즉, 5건 중 1건의 살인사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인 것이다.
- 작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총 76건 중 14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약 2% 남짓의 낮은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스페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은 올해 상반기, 전역에 강력한 이동제한령(lockdown)을 실시해왔다.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이후인 올해 4월의 경우,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 5월의 경우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바르셀로나에 살던 4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이 지나 경찰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어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바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 용의자는 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미 성추행 및 여성대상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었다.

6) 작성 :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그러나 위와 같은 동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젠더폭력 철폐를 위한 정부 대표(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를 역임한 바 있는 미겔 로렌테(Miguel Lorente)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제한령이 끝나면 심각한 폭행 및 살해 접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성들이 지금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동제한령 때문에 그 폭력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여건이 가능해지면 피해 신고 접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제한령 기간에는 가해자 본인이 여성 파트너를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과거 실제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Ana Bella를 운영하는 아나 벨라(Ana Bella)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대면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4월에는 통계상 접수된 여성 살해 사건이 0건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핫라인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작년 대비 4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여성은 무려 7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폭력 및 살해 위협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상당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스페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 Weekly(2020.05.17.), “One in every five murders in Spain this year were women killed by their partner or ex”, <https://www.euroweeklynews.com/2020/05/17/one-in-five-murders-in-spain-this-year-were-women-killed-by-partner-or-ex/> (접속일: 2020.05.22.)
- Olive Press(2020.05.01.), “Man arrested in Spain’s Catalunya on suspicion of murdering his girlfriend and dumping her body in a stream”, <https://www.theolivepress.es/spain-news/2020/05/01/man-arrested-in-spains-catalunya-on-suspicion-of-murdering-his-girlfriend-and-dumping-her-body-in-a-stream/> (접속일: 2020.05.22.)
- The Guardian(2020.04.28.), “Women killed in Spain as coronavirus lockdown sees rise in domestic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28/three-women-kill-ed-in-spain-as-coronavirus-lockdown-sees-rise-in-domestic-violence> (접속일: 2020.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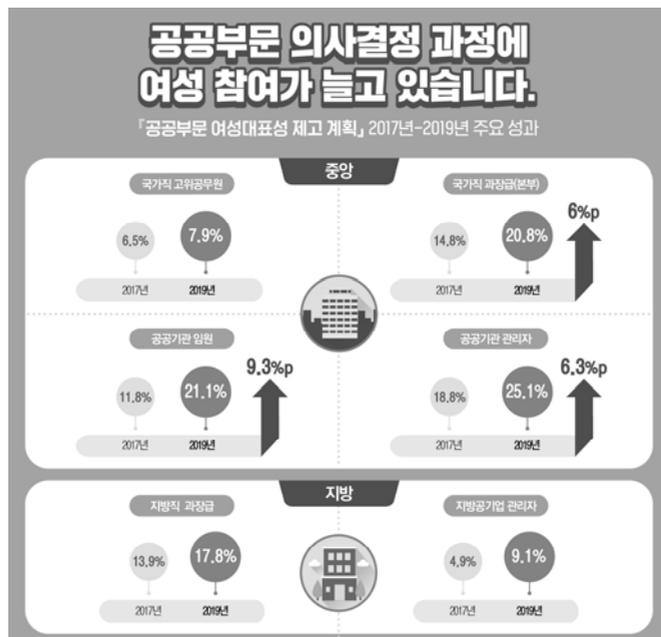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부]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발생

-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함
 -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5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증가

-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를 개최해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는 4배, 이행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건수 : ('15) 514건 → ('17) 1,018건 → ('19) 1,993건
 - 이행금액 : ('15) 25억 원 → ('17) 142억 원 → ('19) 262억 원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0

‘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 강화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4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설명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5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로 나타남
 - (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이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6

의료기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류 간소화

-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5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신속 삭제 및 심리·수사·법률 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힘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7

여성가족부, 주민 돌봄 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 여성가족부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2020년 4월부터 본격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9

여성가족부,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과 개원의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련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안)'(이하 안전수칙) 제안

- 아동·청소년: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5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에 추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7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가 마련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개선 사항〉

구분	기 존	개 선
대책의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처벌기준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선고 ▶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구분	기 존	개 선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 미성년자 의제기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 시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 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시각지대 해소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 시 수익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 → 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4

아동정책 수립, 관광사업 개발에도 양성평등한 관점 필요

-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 및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심의
 -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 신설 제안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3

2020 청소년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청소년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의식 등을 담은 2020 청소년통계를 발표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짐
 - * 양성평등에 관한 강한 긍정: ('13) 56.3% → ('16) 61.6% → ('19) 73.5%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7.3%가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94.6%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5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8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0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0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

- 여성가족부는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2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을 점검함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3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 평생 한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4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특별 실시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0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및 '성주류화 강화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9년 5월 신설된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을 맞이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전담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875백만 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218백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체계 구축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59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3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주제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한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8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과 가족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0.]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9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하고,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 예정

-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②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 ③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④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법무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

[고용노동부]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10817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조부모나 친척이'(42.6%), '부모가 직접'(36.4%),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긴급돌봄'(14.6%) 순으로 조사
 - 맞벌이 근로자는 외벌이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맞벌이 64.9%,

외별이 49.3%), 평균 사용일수도 더 길게 나타남(맛별이 4.5일, 외별이 3.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4.0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

[보건복지부]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며(1조 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2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 발표
 - 장기요양 수급자는 여성 72.8%, 남성 27.2%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자녀 68.8%, 배우자 11.7%, 본인 8.6%로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큰 영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3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53801

“감염병 위기와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성인지적 영향에 주목하여, 젠더폭력, 생식/성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빈곤/실직, 돌봄부담 등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개최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5.2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5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브리프), 국외 정보(국제리뷰), 정책 현장에 대한 조명(정책현장탐방) 등 부문별 원고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지분량은 A4용지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스페이스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상시 투고 가능).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브리프,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계간지 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투고 관련 사항

-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원고 제출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idimail.re.kr

학술지 「여성연구」 2020년 제3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0년 제3호(통권 106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 게재 논문 공모 내용

- 여성·가족문제 및 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02 여성연구 투고 요령

- 「여성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http://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 이내(요약, 참고문헌 포함)로 하되, 최대 B5 30쪽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상시안내정보 중 '학술지 원고작성요령' 참조(www.kwdi.re.kr), 또는 위의 「여성연구」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논문유사도 종합검사결과서 제출(유사도 10% 미만을 '접수' 기준으로 함. 10%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03 투고 자격

- 여성·가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04 접수 마감일

- 2020년 7월 31일 (2020년 9월 30일 발간 예정)

05 논문 관련 문의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 회비납부
우리은행 : 019-219842-01-006(예금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로번호 : 694403(MICR)

☞ 문의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 전 화 : (02) 3156-7283
- E-mail : kdata@kwdi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①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 대상 자료

-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③ 판매 방법

-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 E-mail 주문 판매 : kdata@kwdimail.re.kr
-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di.re.kr)

④ 판매 대금 납부

- 온라인 입금(우리은행 019-219842-01-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